경제정책 하면

나라경제 9

2010
nara.kdi.re.kr



특집

글로벌 금융위기 2년, 이제 우리는?

이달의 이슈

관광 · 레저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한다

인터뷰

현정택 무역위원회 위원장

집중토론

지방재정 위기, 지방에만 맡겨도 되나

ISSN 1227-8033

KDI 경제정보센터

인터넷 검색창에 햇살론



햇살 참 좋~다!

대한민국을 밝게 비춰줄
따뜻한 금융, 햇살론이 시작됩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내일을
따뜻한 희망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햇살론

햇살론이 뭔가요?

대부업 등에서 30~40%대 고금리를 부담하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10%대의 저금리로 대출해드리는 제도로 정부와 지자체, 6개 금융회사가
출연하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하는 서민대출 공동브랜드입니다

대출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저소득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및 근로자입니다
(신용관리정보보유자 및 연체 중인 경우는 대출이 제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검색창에 햇살론

*아래 금융기관으로 전화 문의하시거나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NH농협 1577-5522 | 새마을금고 1588-8801 / 1599-9000 | 신협 1566-6000 / 1644-6000 | 수협 1588-1515 / 1644-15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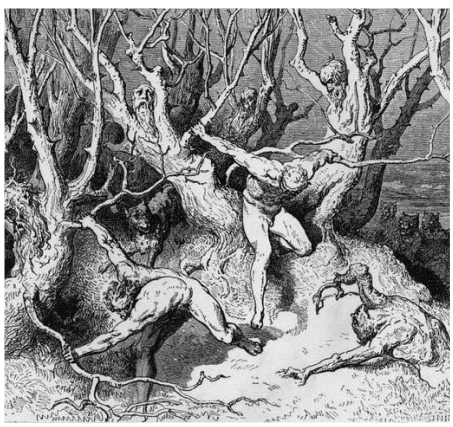
산림조합 02) 3434-7222 | Seed Money Bank 저축은행 SB 02) 397-8600 | 신용보증 해드림 신용보증재단 1588-7365

저승에서 바라본 이승

단테 알리기에리, 「신곡」

인간의 삶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고유의 가치와 의미를 갖는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대개 삶에 애착을 갖게 되고, 따라서 역설적으로 죽음은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종교와 문화권에서 형성된 종말론과 저승세계에 대한 관념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단테 알리기에리(1265~1321년)의 고전 「신곡」(1321년)은 저승여행을 통해 이승의 삶을 되짚어 보도록 만든다. 단테는 1300년 부활절을 전후해 일주일 동안 살아 있는 몸으로 저승세계의 세 영역, 즉 지옥과 연옥, 천국을 여행하면서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겉으로는 황당해 보일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 안에는 중세 유럽의 정신세계가 통째로 들어 있다. 그리고 저승세계의 위치와 구조, 죄의 분류와 형벌의 유형, 사후세계와 영혼에 대한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논쟁 등은 독자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죽은 자들의 말과 행동은 바로 산 자들을 지향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삶과 죽음은 하나로 연결돼 있다. 「신곡」은 단순한 저승여행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현실과 삶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우리의 자화상이다.

단테는 처음부터 끝까지 죽은 자들의 세계를 생생하게 우리 눈앞에 펼쳐 보인다. 우리는 모두 저승이 어떤 곳일까 궁금해 한다. 죽음 너머의 세계는 어떤 곳이며, 내가 죽으면 그곳에서 어떤 상태로 있게 될 것인가 등에 대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저승에서 단테가 만나는 수많은 영혼은 대부분 죽은 뒤에도 이승의 삶을 그리워하거나 지상에 살아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기억해주기를 바란다. 저승에서도 이승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죽은 자들의 말과 행동은 바로 산 자들을 지향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삶과 죽음은 하나로 연결돼 있다. 「신곡」은 단순한 저승여행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현실과 삶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우리 자신의 자화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곡」은 중세 그리스도교의 세계관과 관념을 토대로 하고 있으면서도, 시간과 공간을 넘어 현대의 우리에게도 공감을 줄 수 있다.

물론 그 이외에도 「신곡」에서 다루는 것들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단테 자신이 강조하듯이 그 안에는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의미가 수없이 많이 숨어 있으며, 따라서 다시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감동을 주고 새로운 세계로 안내하는 것처럼 보인다. 고전 읽기의 즐거움은 바로 그런 데에 있다.

하지만 「신곡」을 읽기는 쉽지 않다. 단테의 이야기를 따라가기 위해 부수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하겠다는 생각으로 읽는 것보다는 여유 있는 마음으로 '천천히 읽기'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골치 아픈 부분은 건너뛰면서 읽어도 좋다. 아니면 작품의 이해에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며 잠깐 옆길로 벗어나도 좋다. 중요한 것은 읽어가면서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해 다시 한 번 차분하게 성찰해 보는 것이리라. 때로는 죽은 자의 말 한 마디가 산 자를 감동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나라경제



김운찬
대구가톨릭대 교양교육과 교수
1957년생. 한국외대 이탈리아어과, 이탈리아 볼로냐대학 기호학박사. 한국이탈리아어문학회 회장 역임. 「현대 기호학과 문화 분석」, 「신곡 읽기의 즐거움」 등의 저서와 「신곡」, 「일반 기호학 이론」, 「번역한다는 것」, 「시칠리아에서의 대화」, 「고전의 미래」 등의 역서가 있다.

Contents Vol.238



특집

글로벌 금융위기 2년, 이제 우리는?

14 "외환 부문 취약성 개선이 한국경제의 과제"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 직격 인터뷰

17 경제지표로 본 글로벌 금융위기 2년
유성임 나라경제 기자

18 금융위기 가장 먼저 극복한 한국
홍승제 한국은행 금융연구실장

20 제2라운드 글로벌 경쟁을 준비한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

22 위기 이후 세계경제 G20 정상회의가 이끈다
권해룡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무역 · 국제협력국장

24 주요 외신들, "한국의 약체 이미지 사라지고 있다"
이성신 KDI 경제뉴스분석팀 책임전문원

28 글로벌 금융안전망 반드시 관철시켜야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0 튼튼한 경제 펀더멘탈이 위기를 막는다
조동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03 천천히 읽기
저승에서 바라본 이승-「신곡」
김운찬 대구가톨릭대 교양교육과 교수

인터뷰

08 세계일류 무역구제기관으로 도약 이끌 것
현정택 무역위원회 위원장
대담 이재열 나라경제 편집장

특별기고

58 사회보험료 납부 통합고지서 한 장으로 끝!
류호영 보건복지부 사회보험징수통합추진기획단 국장

경제정책해설

44 일자리 창출 · 서민생활 지원을 강화한다
안택순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46 2015년 5대 IT융합 강국으로 도약
김정환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정책과장

48 중앙과 지방이 함께 일자리 만든다
이재국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과 사무관

50 철도 · 버스 등 대중교통, 한 곳에서 갈아탄다
정도현 국토해양부 종합교통정책과 서기관

52 건물 내 인터넷은 기본,
디지털방송까지 인증제 확대
허성욱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기획보호과장

54 서민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햇살론' 출범
배준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





세계는 지금

32 청년실업 해소에 팔 걷어붙인 OECD
정형우 OECD고용노동사회국 수석행정관

35 아직 갈 길이 먼 DDA 규범 협상
원도연 주제네바대표부 1등서기관

정책 그 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84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살리는 재활용
권기대 나라경제 기자

85 양적 재활용보다는 질적인 면을 중시하는 제도로 개선
유명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

86 "제품 설계 단계부터 재활용을 생각해요"
선용석 롯데칠성음료 환경기술팀장

87 시장기구에 의한 자율적 지원체계 필요
박준우 상명대 금융경제학과 교수

연중 기획

작지만 강한 기업

80 '죽 쑤는' 인생, 프랜차이즈의 '本' 되겠다
김철호 본아이에프 대표

82 우리 외식업체들도 해외시장 진출해야
최인한 한국경제신문 생활경제부 기자

집중토론

38 지방재정 위기, 지방에만 맡겨도 되나
박완규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조봉업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장
이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이달의 이슈

관광 · 레저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한다

65 2019년 관광산업이 세계 GDP의 9.5% 차지한다
안선경 나라경제 기자

66 1,200만명 외국관광객 유치하면 일자리 4만개 창출된다
이정미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사무관

68 소득 3만달러 시대, 해양관광레저산업이 선도한다
손명수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과장

70 맷돌 갈고 새끼 꼬고 … "농촌 체험 너무 재밌어요"
표초희 나라경제 기자

72 우포늪, 세계가 주목한 생명의 보고(寶庫)
이승렬 국제신문 주말레저팀 차장

74 "하룻밤 60만원 넘는 '해랑열차' 일본인에게 대인기죠!"
길기연 코레일관광개발 사장

76 마카오의 베네시안 · 日 나오시마 단지, 명확한 테마로 관광객 끌어
김덕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78 관광산업 경계 풀면, 모든 것이 관광자원
이석호 방송통신대 관광학과 교수



칼럼

12 김 대리의 환경노트
그린 소비자와 에코 보보스(Eco Bobos)
유복환 환경부 감사관

57 나라 밖 경제
미국경제 지나친 비관도, 유럽경제 지나친 낙관도 금물
조현주 KDI 경제뉴스분석팀 전문원

60 그들은 바쁘다 –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콘텐츠기획과
현장은 가깝게, 정책정보는 빠르게
박주선 주무관

63 마음 들여다보기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심리학'
황상민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

88 클래식 카페
'호두까기 인형'과 미하일 셰먀킨
장일범 음악평론가

90 생애설계와 자산관리
원칙을 지키는 투자가 최선이다
강창희 미래에셋 투자교육연구소장

92 통계로 본 나라경제
10년 후 우리나라 인구는?
송요성 통계청 인구동향과 사무관

94 그 길을 걸었다 – 뱃길 따라 100해리, 흑산도와 홍도
서해 최고 비경을 만나러 가는 뱃길
이용한 시인

98 시평
재정규율 강화하는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
박정수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소장



나라경제는 KDI와 14개 경제부처가 함께 만듭니다.

나라경제

2010. 9 [제21권 9호 통권 238호]

발행 KDI 경제정보센터
편집 경제부처합동편집위원회

발행인 현오석 KDI 원장
편집인 박철규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문형표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편집주간 심재학 KDI 경제정보센터 정책정보실장 대행

편집위원 기획재정부 신민식 정책관리담당관
교육과학기술부 박필환 과학기술정책과장
외교통상부 최철규 통상기획홍보관
행정안전부 조봉업 재정정책과장
문화체육관광부 조현래 기획행정관리담당관
농림수산식품부 최명철 홍보담당관
지식경제부 전응길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보건복지부 이창준 정책기획관
환경부 김영훈 정책총괄과장
고용노동부 박종필 기획재정담당관
국토해양부 김경욱 기획담당관
방송통신위원회 조경식 기획재정담당관
공정거래위원회 곽세붕 경쟁정책과장
금융위원회 김인 정책홍보팀장

편집간사 김보열 기획재정부 정책관리담당관실

편집장 이재열
취재 · 편집기자 유성임, 안선경, 권기대, 표초희, 김솔나

배포 김경숙

발행처 KDI 경제정보센터
ISSN 1227-8033 09
130-0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49
전화 02-958-4656
팩스 02-3295-0744
홈페이지 http://nara.kdi.re.kr
e-mail nara@kdi.re.kr

발행일 2010년 8월 31일(매월 말일 발행)
제21권 9호 (통권 238호)
등록일 1990년 11월 14일 (문화 라 04859호)

기사 문의 02-958-4634
광고 문의 02-958-4614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 02-958-4656
구독료 권당 3,000원 연간 30,000원

제작지원 · 인쇄 성우애드컴(주)
사진 이래스튜디오

*「나라경제」는 한국 간행물 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나라경제」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필자의 소속기관이나 본지의 공식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글과 사진은 KDI의 서면 허락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내연금 갖기 캠페인은
우리 모두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내연금'을 갖자는 취지입니다

평생월급 국민연금
상담은 국번없이 1355

내연금 갖기 캠페인

서로가 맺은 약속이기에 꼭 받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기에 많이 받고
물가가 오른 만큼 더 받는
평생 월급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으로 연금 받기

노후에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합니다.
60세가 되었을 때 120개월을 채우지 못했다면
임의계속가입을 해서 120개월을 채우면
그 때부터 연금을 받게 됩니다.

가입기간 20년 이상으로 노후걱정 덜기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연금액이 많아집니다.
지금은 다소 어렵더라도 젊을 때부터 시작하여
가입기간을 20년 이상 늘려야 노후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가입하여 노후 든든

부부가 함께 가입해서 각자의 연금을 받는다면
훨씬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와 같이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의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NPS 국민연금 www.nps.or.kr 상담전화 1355

인터뷰 **현정택** 무역위원회 위원장

때 _ 2010년 8월 17일 오후 3시
곳 _ 위원장 집무실(과천)
대담 _ 이재열 나라경제 편집장

세계일류 무역구제기관으로 도약 이끌 것

KDI 원장 재임 이후 학계에 계시다 다시 공직을 맡았는데, 소회를 간단히 밝히신다면?

여성부 차관, 외교부 경제통상대사, 청와대 경제수석 등 항상 공직 가까이에 있었던 것을 큰 행운으로 생각한다. 그동안 쌓은 경험과 지식이 무역위원회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려 한다. 무역위원회라는 조직이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일하는 곳인 만큼 양자의 관점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경제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닌 일반국민들은 무역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잘 모른다. 무역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무역위원회는 1987년에 설립된 준사법적 행정기관으로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등 무역구제제도의 운용이 핵심 업무이다. 덤핑 또는 시장개방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적재산권 침해물품과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수출입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특히 힘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자유무역이 확대되면서 정부의 관세 장벽, 보조금, 산업보호정책 등 사전적 보호무역조치가 무력해지고 세이프가드,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 등 사후적 무역구제수단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듯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의 국제적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전문성을 높이도록 주문하고 있다. 또한 최근 지적재산권 침해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공정 무역행위도 늘고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영역에 대한 대비에도 노력하고 있다.

WTO 체제 확립과 FTA 체결 확산으로 우리 수출이 비약적으로 늘고 있지만, 시장이 개방되고 교역량이 늘면서 덤핑 수입 등 불공정무역도 증가하고 있다. 무역위원회가 더 한층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어깨가 무겁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다. 개방을 많이 하고 경쟁에도 더 적극 나서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무역구제제도를 상당히 신중하게 운용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WTO와 FTA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무역장벽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국내 업체의 적응능력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럴 때 무역구제제도를 통해 우리 업체들의 적응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를 완충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지향하는 무역 자유화나 FTA 추진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앞으로 국내 기업의 대외 적응능력을 키워주는 데 적극 매진하려 한다.

그렇다면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FTA 체결로 피해보는 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1949년 경북 예천 生
서울대 경제학과, 미 조지워싱턴대 경제학 박사
1977~1987년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 · 정책조정국 근무
1995~1996년 재정경제원 대외경제국장, 부총리 비서실장
1997~1998년 주OECD대표부 경제공사
2001~2002년 초대 여성부 차관
2002~2003년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2003~2005년 외교통상부 대외직명 대사(경제통상)
2005~2009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2009년~현재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
2010년~현재 무역위원회 위원장

무역위원회는 개별 FTA 협상 과정에 참여해 국내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EU FTA의 경우 긴급구제조치(양자 세이프가드), 양자 간 무역구제 위원회 설치를 협정문에 반영시키기도 했다. 앞으로는 무역조정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것이다. 이 밖에도 수입 모니터링제도를 강화해 수입 급증에 긴밀히 대처하고, 미국·EU·중국·인도 등 주요 교역국과 양자협력 채널을 유지하는 한편, 협력 대상국도 확대할 것이다.

> 국제무역규범의 룰을 지키면서 국내 업체가 외국 무역구제기관의 잘못된 판정으로부터 받는 피해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공정한 국제무역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국내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무역구제제도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다. 홍보를 강화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많은 국민들이 FTA를 통해 외국상품이 쏟아져 들어오면 국내 기업이 다 무너진다고 생각하는데, 국제규정이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구성돼 있지 않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우선, 아무리 FTA라 할지라도 수입이 급격히 늘어나면 한시적·긴급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제도가 있다. FTA로 인해 산업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원해 주는 무역조정지원제도도 있다. 이러한 제도를 널리 알려 경제주체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매우 낮은데 앞으로 홍보를 계속 늘리는 한편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세계가 지식기반 사회에 본격 돌입하면서 이른바 '짝퉁'이라 불리는 지적재산권 침해나 원산지표시 위반과 관련한 피해가 많이 늘고 있다. 이 문제에도 적극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닌가.

옳은 말씀이다. 무역위원회도 같은 문제인식 아래 얼마 전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국경 간 조치 강화 등을 담은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7월 6일부터 시행)했다.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으로 판정한 상품이 국내로 공급되지 못하도록 세관에서의 통관보류 등 국경조치를 강화했다.

또 위원회의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수출입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현행 3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처벌 수위를 크게 높였다. 앞으로도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날로 지능화되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할 생각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가 심화되자 세계 각국은 보조금 등 다양한 보호무역적 조치를 도입하기도 했다. 여기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개방과 경쟁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보호무역 조치가 늘어나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제1차 G20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각국이 더 이상 새로운 무역·투자 장벽을 만들지 말라는 동결(Stand-still) 선언을 제안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방지하는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렇게 국제공조의 틀 속에서 보호무역주의가 널리 퍼지지는 않고 있지만, 경제위기 시에 보호무역조치가 많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이를 경계할 필요는 있다. 더욱이 최근 인도·아르헨티나 등 개도국이 반덤핑 제소 등 무역구제 조치를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매년 국제포럼 개최 및 주요국과 양자협력 채널을 통해 무역구제 조치가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논의하고, 필요 시 상계관세 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과거에는 우리가 주로 미국과 EU에 의해 수입규제를 받았지만, 요즘은 중국과 인도의 규제 건수가 가장 많다고 들었다.

우리나라는 2010년 8월 현재 19개국으로부터 총 119건(조사 중 20건 포함)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으며, 가장 많이 규제하는 곳은 중국·인도로서 전체 규제 건수의 38.6%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교역규모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며, 인도는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정책적으로 수입규제를 활용한 결과로서 우리나라만 특별히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무역위원회로서는 주요국과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미국·EU·중국 등의 무역구제기관과 양자협력 채널을 마련했고, 올 초 인도와 신규로 무역구제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 협력채널에서 무역구제 조치 현안을 논

의,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무역위원회가 국내 이해당사자들의 조사 요청을 처리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국내 업체가 해외에서 받는 무역제재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데도 신경써야 한다고 밝히신 바 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있다면?

무역위원회가 국제무역규범을 위반하는 교역상대국의 제도·관행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조사할 수 있는 법률의 근거가 있다. 지금까지는 신청된 조사에 대한 처리를 수동적으로 해왔지만, 앞으로는 이 조항에 근거해 해외 무역구제기관의 부당한 판정에 따른 국내기업의 피해는 없는지, 공정무역에 장애가 되는 비관세 장벽은 무엇인지 등을 적극 조사할 계획이다. 우선, 해외조사 동향 자료를 수집·분석할 수 있도록 내년도 신규 예산을 확보하려 한다. 예산이 확보될 경우, 내년부터 국내 업체가 주로 진출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현지 로펌과 연계해 피해사례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지금껏 여러 조직을 이끌면서 위원장께서는 어떤 리더상을 추구해 왔는지 궁금하다.

매우 평범한 얘기이긴 하지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앞과 다소 상충되지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다. 병원에 한 2주 정도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내가 없어도 가정이나 학교(인하대)가 잘 굴러가더라(웃음). 독선이나 아집 같은 것을 버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그리고 굳이 리더십과 관련해서는 저 사람을 보면 뭔가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을 때, 그 조직이 잘 운영되는 것 같다. 또한 철저하게 'merit-based'(실적 중심)로 사람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그 분야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을 사심 없이 뽑아 쓰면, 결과적으로 학교나 지역 출신상으로도 상당히 균형 잡힌 인사가 된다고 본다.

무역위원장에 취임하신 지 약 3개월여가 된다. 여러 구상이 많으실 텐데 앞으로 무역위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려 하는지 포부나 계획을 말씀해 달라.

23여년간 무역위원회가 국제규범을 엄격하게 적용, 공정무역질서 확립의 파수꾼 역할을 해왔던 것을 높게 평가하고 싶다. 이런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갈 것이지만, 앞으로는 지금까지와 약간 다른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경제국과 FTA 체결이 이뤄지고 수출입 규모가 더 확대되면서 국내 주력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 수입이 늘어날 경우 국내 산업을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지가 중요해질 것이다. 우리 수출업체가 해외에서 부당하게 받는 수입규제에 대해 무역위원회가 역할을 다해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원칙을 지키면서 보다 객관적인 기준에 입각해 무역구제 관련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 나가는 한편, 국제무역규범의 룰을 지키면서 국내 업체가 외국 무역구제기관의 잘못된 판정으로부터 받는 피해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공정한 국제무역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앞장설 계획이다.

개인적으로는, 무역위원회를 우리나라 무역 위상에 걸맞도록 키워보고 싶다. 그간 우리나라는 대외 진출에 우선순위를 두었기에 무역구제제도가 너무 부각되면 개방국가로서의 이미지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조심한 측면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전 세계가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무역활동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미국·EU·중국 등의 무역구제기관과 같이 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싶은 것이 개인적인 포부이자 소망이다. 나라경제

* '김 대리의 환경노트'는 필자가 환경부에 근무하면서 느낀 일상을 에피소드 형식으로 풀어낸 에세이다.

그린 소비자와 에코 보보스(Eco Bobos)

'환경이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그렇다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환경을 고려해야 하는 걸까? 지구를 살린다는 도덕적 책임을 느끼고?' 김 대리는 과연 기업의 친환경 가치가 수익을 가져다줄지 의문이 들었다. 김 대리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을 보고 서진주 대리가 다가왔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해요?"

"환경이 제품에 플러스알파가 될 것 같기는 한데 뭔가 확신이 안서요. 정말 환경이 제품에 가치를 더해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 소모적인 경쟁을 피할 수 있게 해줄까요?"

"기업이 친환경성을 시장에서 경쟁 요인으로 삼는다는 구상은 좋은 아이디어예요. 지구온난화로 환경 문제가 이슈가 되고 친환경 웰빙 소비트렌드가 확산되는 것과도 맞는 듯해요." 서 대리는 천천히 커피를 저으며 이야기했다.

"그런데 기업의 친환경 가치가 어떻게 회사에 수익을 가져다줄지 모르겠어요." 김 대리가 다소 자신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 대리님 혹시 '그린 소비자'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서 대리는 눈을 반짝이며 김 대리에게 물었다.

"환경을 중시하는 소비자, 뭐 이런 뜻 아닌가요?"

"맞아요. 환경 문제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겨난 친환경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집단을 말해요.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품질이나 가격도 중요시하지만 별 차이가 없을 경우 강력한 구매결정 변수로 환경 친화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서 대리는 그 예로 홍보실 주관으로 우수 고객을 초청해서 생태체험 관광을 한 경험을 들었다.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대다수가 제품가격이 10~20% 정도 비싸더라도 친환경 제품을 구매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친환경 제품과 일반 제품의 가격 차이를 '그린 프리미엄'이라고 해요. 환경과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린 소비자는 더욱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추세는 환경 가치를 중시하는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

김 대리는 녹색 환경노트에 서 대리의 말을 받아 적었다. 그런 김 대리의 모습을 보며 서 대리는 흐뭇한 미소를 짓고는 덧붙여 말했다.

"최근 신문기사에 따르면 그린 소비자들은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적은 에너지 사용, 적은 포장 등 제품이 환경 친화적 요소를 갖추고 있는지도 염두에 두고 구매를 한대요."

서 대리는 자신의 책상에서 스크랩 파일을 꺼내들고 와 김 대리에게 건넸다. 거기엔 '그린 소비자'와 '에코 보보스'에 관한 신문기사가 있었다. 나라경제



유복환 환경부 감사관
연세대, 캠브리지대 박사(경제정책 전공).
기획재정부에서 환경정책 등 주요 경제사회정책 기획과 조정업무를 수행했으며, 국내 첫 스토리텔링 환경경영 이야기책인 「그린 이즈 머니」(Green is money)를 썼다.
bhyu7@hanmail.net



에코 보보스

에코 보보스(Eco Bobos)는 환경을 뜻하는 '에코'와, 부르주아의 물질적 부를 갖추고 관습이나 규율을 무시한 채 자유분방한 삶을 사는 보헤미안의 정신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을 뜻하는 부르주아 보헤미안(Bourgeois Bohemians), 즉 '보보스'의 합성어다. 환경을 생각하는 부르주아 보헤미안이라는 뜻이다.

이들은 물질적 풍요를 바탕으로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추구한다. 환경을 자신의 지위를 상징하는 소비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점이 그린 소비자와 다른 점이다. 고급 하이브리드카를 타고, LED조명을 사용하며, 유기농 식품을 사먹고, 재활용품을 쓰는 것은 기본이다. 환경보호단체에 기부는 하지만 환경운동가처럼 환경보호를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에어컨 사용을 자제한다든지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삶의 방식은 추구하지 않는다.

최근 국내의 한 백화점 조사에 의하면 에코 보보스가 식품과 화장품 군에서 친환경 제품을 구입한 1인당 평균 구매금액이 일반고객의 세 배 정도였다고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2년, 이제 우리는?

GLOBAL FINANCIAL CRISIS

2008년 9월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어느덧 발발 2주년을 맞았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라는 평가 속에 세계경제의 극심한 침체가 우려됐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세계경제는 안정을 되찾는 모습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한 나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제는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아니라 '어디로 갈 것이냐'가 더 중요한 시점이다. 『나라경제』는 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패러다임 변화에 한국경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책담당자 · 관련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들어보았다.



1959년 대구 生
영국 옥스퍼드대 경제학 박사
1990~1994년 옥스포드대 교수
1996~2000년 옥스포드대 교수
2000~2005년 영국 런던 정경대(LSE) 교수
2006~현재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2009~현재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

대담 _ 이재열 나라경제 편집장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 직격 인터뷰

"외환 부문 취약성 개선이 한국경제의 과제"

공기업 국책사업, 부채 우려에도 불구 금융위기 극복에 도움
'글로벌 금융안전망' 11월 G20 회의에서 합의될 것

미국 주택담보대출 부실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벌써 발발 2년을 맞는다. 현재 한국을 비롯해 세계경제는 위기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번 금융위기가 얼마나 더 지속될 것으로 보나?

금융위기가 발발한 지 2년이라 했지만 3년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는 2007년 여름부터 시작돼 그때부터 여러 파생상품들의 유동성이 사라졌다. 금융위기 자체는 어느 정도 극복이 됐다고 본다. 세계경제가 바닥을 친 시기가 2009년 2월이다. 아직 미약하지만 주요국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왔다. 문제는 금융위기로 인한 후유증으로 세계경제가 탄력을 받고 성장하는 모습이 아직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의 위기극복 노력을 평가한다면?

한국은 위기극복의 모범국이라고 볼 수 있다. 금융위기 당시 우리 경제는 실물기반이 워낙 탄탄하고 은행의 상태도 상당히 양호해 미국이나 유럽처럼 금융 부문이 너무 비대해져 생기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었다. 또한 위기가 닥쳤을 때 정책 대응도 상당히 좋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의 재정상태가 상당히 좋았다는 점이다. 추가적인 내수부양책을 쓰는 데도 불구하고 재정이 많이 악화되지 않았다.

공공 부문의 신속한 재정집행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다.

물론이다. 사실 재정정책은 통화정책과 달리 그 효과가 나타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의회에서 재정을 확보한 이후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업을 찾아야 한다. 미국은 의회에서 7,800억달러 규모의 추가 재정을 받았지만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한국에는 공기업이 있었다. 특히 LH공사와 같은 경우는 공공사업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곧바로 착수할 수 있다. 공기업을 통해 실제 사업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 자산이 생기게 된다.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LH공사의 경우, 대형 주택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아파트를 빌려주고 세를 받기 때문에 현금 흐름은 많지 않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자산이 생긴다. 현금 흐름을 먼 미래까지 생각한다면 부채를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자산이 생기는 것이다. 물론 일시적으로는 부채가 된다. 우리는 흔히 공기업 부채의 단점만 조명하는데, 사실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한 것은 공기업과 같이 재정집행을 빨리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던 데도 연유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에게는 혁신도시, 보금자리주택, 4대강 등 '즉시 착공이 가능한'(shovel ready) 사업도 많이 있었다. 대형 국책사업이나 공기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많지만, 이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도 부인할 수는 없다.

아쉬운 점은 없나?

아쉬운 것은 한국경제가 구조적으로 외부충격에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가 개방경제 전략을 추구하는 이상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하겠지만, 그런 만큼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하고 사전에 대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를 보는 시각이 많이 바뀐 것 같다.

정책입안자들의 시각과 접근방법이 변화하고 있다. 예전에는 금융을, 합리적 시장원칙을 통해, 즉 시장 시그널을 받아 자원이 가장 필요한 쪽으로 배분하는 메커니즘이라고 많이들 생각했다. 그렇지만 이번 위기를 통해 금융에도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됐다. 시장의 불완전성이 부각된 것이다. 특히 시장 메커니즘만 통해서는 왜곡이 생길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됐다. 왜곡은 시장 시그널에 거품이 생길 때 나타난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들은 대출을 더 늘리게 되고, 부동산경기를 더 부추기는 언뜻 선순환 작용이 나타난다. 하지만 이는 경제 펀더멘탈에서 더 멀어지는 것이다. 반면 위기가 터졌을 때는 펀더멘탈은 괜찮은데 경기가 위축이 되고, 위축이 되니까 대출을 줄이고 회수함에 따라 흑자기업들도 도산하게 되며, 경기가 추락하는 악순환이 나타난다. 이러한 일들이 시장의 불완전성에 의한 것이란 사실을 이번 위기를 통해 보다 확실하게 깨닫게 됐다.

시장의 불완전성을 완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뜻인가?

시장의 불완전성은 시장의 동력(힘)을 왜곡해 이를 다른 쪽으로 몰고 갈 수 있다. 기존의 왜곡요소가 있다면 이를 중화할 수 있는 감독규제 등의 공공정책을 펴 시장 메커니즘이 보다 더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시장의 위력은 대단하다. 하지만 가격시스템이 워낙 효과적이기 때문에 시장 시그널과 왜곡요소가 증폭 작용을 해 거품 · 위기 등을 초래한다. 이런 말(시장)을 고삐 없이 타려 하면 얼마나 위험한가. 시장 메커니즘에 고삐를 맨 뒤 적절한 방향으로 타고 가야 한다.

그렇다면 변화될 세계경제 환경 속에서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 돼야 하나?

외환 부문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것이 과제다. 이는 단기과제와 장기과제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시장왜곡 요소를 중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외환 취약성은 결국 은행 부문의 취약성이다. 자본유출입 통계를 보면 주식이나 채권보다는 은행권의 디레버리징(부채 축소)과 레버리징(차입) 사이클이 외환유동성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핵심 메커니즘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은행 부문을 적절히 규제함으로써 외환 취약성을 보

완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난 6월 도입한 선물환 규제도 이런 차원에서 온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금융구조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 한국금융의 취약성은 은행들이 단기로 외화를 빌려오는 데 많이 기인한다. 이러한 단기 외화부채 자금조달 방식에서 장기적 자금 구조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자금조달 시 달러로부터 원화로 가는 작업도 있어야 한다. 호주는 우리와 경제규모가 비슷하고 외부의존도도 높지만 호주 은행들은 호주달러 표시 채권을 팔아 자금조달을 할 수 있다. 한국의 은행들은 원화표시 채권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팔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원화표시 커버드 본드(Covered Bond)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커버드 본드는 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이지만 자산담보부 채권이거니와, 담보자산이 부실화될 경우 상환청구권을 보장해 준다. 이처럼 이중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채권 신용등급도 상당히 높고, 낮은 가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런 은행 커버드 본드를 국채와 비슷한 자산으로 생각하고 분명히 살 것이다. 올해 들어 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공사법」에 의거, 커버드 본드를 발행한 바 있다. 하지만 민간은행들이 커버드 본드를 발행할 수 있는 법은 아직 확고하지 않다. 커버드 본드 관련 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장기적인 작업을 통해 우리 금융구조의 체질을 더 튼튼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11월 G20 정상회의의 주최국인 한국은 1997년 말 외환위기 당시의 경험을 토대로 글로벌 안전망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왔고, 이는 이번 서울회의에서 주된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글로벌 금융안정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은 무엇이 있나?

G20에서 한국이 독자 개발한 의제 중 하나가 글로벌 금융안전망이다. 세계적 금융위기가 터지면 실물경기가 튼튼한지에 관계없이 돈이 빠져 나간다. 우리나라와 같이 유동성이 취약한 경제구조에서는 치명타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G20 의장국으로서 IMF에 국제 금융안전망 마련을 지시했고, IMF가 현재 신용공여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내용을 다듬고 있다. 이것들이 '신축적 신용공여'(FCL; Flexible Credit Line)와 '예방적 신용공여'(PCL; Precautionary Credit Line), 이 둘을 다 묶어 여러 나라에 동시에 제공하는 '위기전염 방지장치'(GSM; Global Stability Mechanism)이다. 이에 대해서는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예전부터 진행돼온 IMF 지배구조 개혁 과제도 있다. IMF의 대출자원이 현재 7,500억달러 정도인데 이는 사실 리먼 사태 이전의 2,500억달러에서 세 배가 증가한 것이다. 이를 1조달러까지 늘리자는 것이 IMF 내부 의견이다. 또 하나는 IMF 지배구조의 이전, 재분배이다. 쿼터 중 5%를 과잉, 과대 대표된 나라로부터 과소 대표된 나라로 옮기자는 것이다.

이 부분들은 11월 회의에서 대부분 타결되리라 본다. 상당한 컨센서스가 있고 또 그만큼 탄력이 붙었다고 할 수 있다. 피츠버그 정상회의 때 벌써 5% 이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다. 물론 구체적으로 누가 어느 정도 양보할지에는 타협의 문제가 남아 있지만….

마지막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2년 이후 세계경제 질서가 변화하는 시점에서 기업이나 국민 등 경제주체들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말씀해 달라.

통상적인 얘기지만,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으로서는 펀더멘탈을 튼튼히 한 후 사업성을 충분히 살리려는 노력을 많이 해야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잘되고 있다고 본다. 한편 정책입안자들은 일단 낙관적인 태도를 갖되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충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통일 문제가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다. 올 봄 호르스트 쾰러 독일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한 가지 주문이 있다면 그것은 통일에 대비하라는 것이다. 통일은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라는 말이 인상 깊었다. 이제까지는 통일을 골치 아픈 주제로 여겨 외면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이제는 이를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통일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우리에겐 기회도 된다. 지금 북한의 경제구조가 1960~70년대 초 우리와 비슷하다. 통일이 돼 어느 정도 융합이 되면 우리에겐 기회가 많다. 골드만삭스는 통일한국이 2040~50년대에는 프랑스와 독일을 추월하고 더 나아가 일본도 제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지금부터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의 공감대를 이뤄나가야 한다. 좀 더 긴 안목으로 통일 문제 그리고 우리의 장기적 위상 등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나라경제

정리 **유성임** 나라경제 기자

경제지표로 본 글로벌 금융위기 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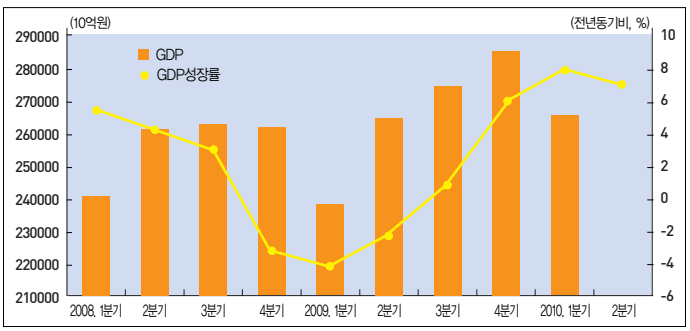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 지 2년이 돼가는 지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빨리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주요 경제지표를 통해 이를 확인해 봤다.

• **국내총생산(GDP) 및 경제성장률:**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8년 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5.1%를 기록해 큰 폭의 경기 위축을 경험했다. 하지만 2009년 초부터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해 2010년 1분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8.1%, 2분기에는 7.2%로 큰 폭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수출은 2010년 2분기 현재 전년동기 대비 33.1% 증가했으며, 수입은 43.1%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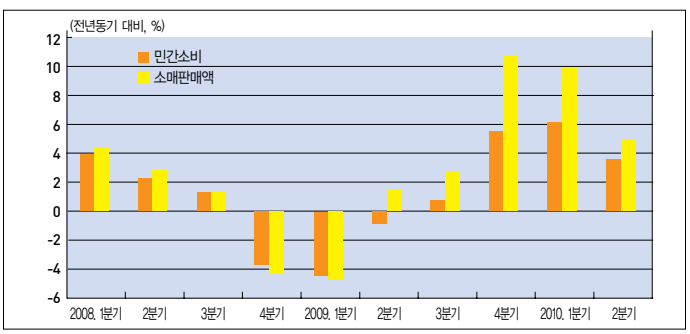
• **금융시장:** 2008년 말 1,400원대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은 2010년 7월 현재 1,1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코스피 지수 역시 2008년 12월 1,100대까지 급락했다가 2010년 7월 현재 1,700대까지 상승했다. 회사채 금리는 2008년 12월 8.35%까지 올랐으나 2010년 7월 현재 4.81%로 4%대에 머물고 있다.

• **소비:** 민간소비는 2008년 4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3.7%, 2009년 1분기에 -4.4%로 하락했다가 2분기부터 점차 개선되기 시작했다. 2010년 2분기 현재 증가율은 3.7%다. 소매판매액 역시 2008년 4분기와 2009년 1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각각 -4.2%와 -4.7% 하락했으나 2009년 2분기부터 플러스로 돌아서 2010년 2분기 현재 4.9% 증가율을 보였다.

• **고용:** 2010년 들어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취업자가 증가하면서 실업률은 소폭 하락하고 있다. 2010년 2분기 실업률은 3.5%로 전년동기 대비 0.3%p 하락했다. 고용률도 상승해 2010년 2분기 고용률은 59.6%로 전년동기 대비 0.3%p 증가했다. 나라경제









자료: 통계청



홍승제
한국은행
금융연구실장
sjehong@bok.or.kr

금융위기 가장 먼저 극복한 한국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시작으로 등장한 이번의 초대형 금융위기는 이전과 달리 세계경제가 상호 밀접하게 연결된 글로벌 경제하에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등 선진국에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번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역사적으로 가장 클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2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볼 때 경기침체의 폭은 예상과 달리 그다지 크지 않았을 뿐더러 세계경제도 빠르게 안정세를 되찾아가고 있다. 그중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빨리 위기를 극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2008년 8월, 158년의 역사와 아이비리그 출신 천재들의 집합소인 세계적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2년이 지난 지금 세계경제는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적극적 재정 · 통화 정책 실시로 위기 극복

이번 금융위기의 저변에는 1980년대 이후 나타난 여타 경제위기와 마찬가지로 금융자유화 시대에 금융기관의 신용공급, 글로벌 투자자금의 국경 간 거래가 적절히 통제되지 못한 상황에서 과도하게 늘어난 정부 또는 민간부문의 차입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위기의 파급 또는 형태 측면에서 보면 과거 개별국가 차원의 위기가 점차 글로벌 시스템 위기로 진화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대표적인 소규모 개방경제국인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 충격은 급격한 자본유출, 주가폭락과 환율급등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줬다. 그해 9~12월 사이에는 무려 462억달러나 유출되면서 심각한 외화유동성 부족을 야기했다. 그리고 위기 직전 1,400선을 넘은 주가는 2008년 10월 말 900대로 폭락했으며 달러당 1,100원 수준이던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까지 폭등했다. 외환당국은 보유외환을 줄여가면서 시장을 안정시키려 했으나 단기간 내 자본유출 급증과 환율불안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편 실물 부문을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2008년 4분기 중에는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4.5%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 외환위기 직후 1998년 1분기 중 성장률 -7%의 2/3에 이르는 수준이다.

리먼 사태 이후 심각한 금융 · 외환 시장의 불안정과 실물경제의 침체에 직면하자 정책당국은 확장적 거시정책과 강화된 국제공조 등을 통해 위기수습에 나섰다. 긴축

정책과 구조조정에 정책의 초점을 맞춘 지난 외환위기 때의 대응방식과 달리 적극적인 정책금리 인하와 국가 간 통화스왑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세계경제가 금융·실물 면에서 상호 긴밀하게 연계돼 있어 나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환경에 직면한 데다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에서 글로벌 불황을 막기 위한 정책공조가 강조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원화 및 외화 유동성을 이례적인 수준까지 확대 공급했다. 한국은행은 금융불안을 완화하고 경기의 과도한 위축을 막기 위해 2008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기준금리를 여섯 차례에 걸쳐 인하하고 총액대출한도 증액, 은행자본확충펀드 및 채권시장안정펀드 대출 등을 통해 취약 부문에 대한 자금지원을 병행했다. 또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외환 및 미국 연준, 일본은행, 중국 인민은행과의 통화스왑 계약을 통해 금융기관에 외화유동성을 적극 공급했다.

정부도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추진했다. 2008년 11월에는 11조원 규모의 수정예산안을, 다음해 3월에는 28조원에 달하는 추경예산안을 각각 발표했다. 이 같은 대대적인 경기부양 결과 2009년 관리대상수지는 GDP의 4%나 되는 적자를 기록했다. 또한 2008~12년까지 감세를 포함해 위기대응을 위한 재정지원 규모는 GDP의 6%를 넘는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재정 및 통화 정책의 실시와 더불어 지난 금융위기의 교훈을 바탕으로 정부는 G20을 중심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체계,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등 위기재발 방지를 위한 새로운 국제적 규칙을 설정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

경기회복세에 비해 고용 회복은 느려

이상에서 보았듯이 매우 적극적인 재정 및 통화 정책과 글로벌 정책공조를 통한 세계경제 회복에 힘입어 2009년 들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국제신용평가사나 국제기구들로부터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위기 극복과정에서 우리 경제는 몇 가지 장단점을 보여줬다. 우선, 우리나라 경기가 글로벌 경기흐름에 선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세계경기에 민감한 수출제조업 위주로 구성돼 있고, 특히 경기선행성이 있는 반도체 등 IT산업 비중이 높은 데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이나 유로지역과 달리 가계 및 금융기관 부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던 데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추진으로 기업 및 금융 부문의 대외충격 흡수 능력이 제고됐기 때문에 빠른 경기회복이 가능했다고 본다.

우리 경제는 매우 적극적인 재정·통화 정책과 글로벌 정책공조를 통한 세계경제 회복에 힘입어 2009년 들어서부터 지금까지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국제신용평가사나 국제기구들로부터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둘째, 수출이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돼 성장을 주도했다는 점이다. 이는 리먼 사태 이후 중국의 강력한 내수 진작책에 힘입어 대중 수출이 호조를 보인 데다 IT산업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이 높아지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점 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정부 부문이 경기회복에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극심한 경기침체에 대응해 SOC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자동차 관련 세제지원, 재정 조기집행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적극 시행함으로써 성장률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고용지원 시책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세에 비해 고용의 개선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렸다. 이는 고용이 경기에 후행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뿐 아니라 취업유발계수가 낮은 전기전자업종 등이 최근의 제조업 생산 증가를 주도하는 가운데 고용유발 효과가 큰 도소매·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영세자영업자의 감소세가 지속된 데도 상당부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도 세계경제의 흐름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지난 위기의 경험에서 나타난 우리의 장점을 살리고 취약점을 보완함으로써 미래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라경제



제2라운드 글로벌 경쟁을 준비한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
hsl2020@mosf.go.kr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을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이익은 사유화하고 비용은 사회화했기 때문'이라고 표현했다. 이번 금융위기의 한 단면을 잘 표현한 말이 아닌가 싶다. 2008년 하반기 리먼 브라더스 파산 등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파급됐다.



지난 6월 5일 부산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 중앙은행 총재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장 클로드 트리셰(맨 오른쪽)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글로벌 디레버리징(deleveraging)에 따라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했다. 주가는 급락하고, 환율은 급등했으며,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은 699bp까지 상승했다. 해외수요의 감소로 인해 수출이 크게 줄었으며, 실업과 자산가격 하락 그리고 심리 위축으로 내수도 감소했다. 수출과 내수의 동반 침체로 2008년 4분기 GDP는 전기 대비 4.5%까지 감소해 OECD 국가 중 가장 큰 폭의 경기위축을 경험했다.

과감한 재정확대 추진 … 경제체질 강화 노력도 병행

정부는 우선 경기의 급락을 완화하고 회복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정책 노력을 집중했다. 2009년도 수정예산 11조4천억원과 추경예산 28조4천억원을 편성하고 재정을 조기집행하는 등 재정의 역할을 강화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08~2010년간 우리나라의 재정확대 규모는 2008년 GDP 대비 6.5%로 OECD 회원국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물론 그동안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해 온 것이 과감한 재정확대를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재정정책과 함께 통화정책도 확장적으로 운용했다. 여섯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5.25%→2.0%, 325bp)하고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유동성을 신속히 공급하는 한편, 외화채무 지급보증, 미국 · 중국 · 일본과 각 300억달러의 통화스왑을 체결하는 등 외화유동성 부족을 해소했다.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확대하고 만기를 연장했으며,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은행자본확충펀드 등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했다.

갑자기 밀어닥친 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서민 ·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노력도 강화했다. 실

업 증가 등 고용이 악화되는 상황에 대응해 세제지원 등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확산하고, 희망근로 · 청년 인턴 등 재정지원 일자리를 확대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생계구호, 긴급복지 등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든든학자금 · 미소금융 · 보금자리주택 등 3대 서민대책을 중심으로 친서민 정책기조를 강화했다.

위기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해 경제체질 개선과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병행했다. 건설 · 조선 · 해운 등 부실업종과 대 · 중소기업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을 추진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도록 노력했으며, 강화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적용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 또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녹색성장 등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글로벌화된 경제여건하에선 위기극복을 위한 세계 각국의 국제공조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세계경제 협력의 최상위 협의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G20 정상회의를 신흥개도국 중 처음으로 유치했으며, 경제위기 극복과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G20 의장국으로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대응에 힘입어 우리 경제는 빠르게 회복했다. 2009년 OECD 30개 회원국 중 플러스 성장을 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3개국 밖에 되지 않는다. 2010년 상반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7.6% 성장해 10년 만에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위기 전의 성장궤도를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해외언론 ·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도 우리를 위기극복의 모범사례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위기기간 중 한국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파이낸셜 타임즈는 최근 "한국경제의 강한 회복세를 멈출 수 없을 것 같다"고 평가했으며, 지난 6월 한국을 방문해 우리 경제 전반을 점검한 IMF도 올해 성장전망을 기존 4.5%에서 5.75%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이라고까지 평가됐던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 지도 2년이 돼가고 있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기업 · 가계 ·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고군분투한 결과 어느 나라보다도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해 가고 있다. 그러나 위기를 넘어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성장엔진 다양화 및 수출 · 내수의 균형성장을 도모

무엇보다 경제지표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한편, 거시경제의 성과가 대기업 · 수출기업 중심에서 여타 취약 부문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 간 거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 소상공인의 활력을 높여 나갈 것이다.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세계경제 환경은 '불확실성의 상시화'라는 특징을 띠고 있다.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는 대내외 경제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대외충격에 강한 경제구조를 만들어가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끝으로 미래에 대한 대비에 힘쓸 것이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성장엔진을 다양화하고 수출과 내수의 균형성장을 도모하려 한다. 정부는 아울러 중장기적 시계하에서 저출산 · 고령화와 기후변화, 재정부담 증가 등 미래 위험요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성장엔진을 다양화하고 수출과 내수의 균형성장을 이뤄나갈 것이다. 아울러 중장기적 시계하에서 저출산 · 고령화와 기후변화, 재정부담 증가 등 미래 위험요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논어」에 '무원려 필유근우'(無遠慮 必有近憂)라는 말이 있다. 먼 앞날에 대한 헤아림이나 준비가 없으면 가까운 시일에 근심할 일이 반드시 생긴다는 뜻이다. 우리의 성공적인 위기극복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에서 누가 살아남아서 도약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제2라운드의 글로벌 경쟁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국가경제의 먼 장래를 내다보면서 상황인식과 각오를 새로이 다져나가야 하겠다.



권해룡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무역 · 국제협력국장
hrkwon84@seoulsummit.kr

위기 이후 세계경제 G20 정상회의가 이끈다

G20에서의 개발 의제는 역량개발을 통한 개도국의 성장에 중점을 둬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도국들의 경제성장과 빈곤 극복을 지원하는 한편, 세계경제 측면에서도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G20 지속가능 · 균형성장 프레임워크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2008년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금융시장과 세계경제에 관한 정상회의'라는 이름으로 G20 정상회의가 처음 개최된 이래 올해 6월까지 모두 4차례의 G20 정상회의가 열렸다. G20 정상회의는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한 확장적 재정 · 통화정책, 신흥개도국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 확대, 무역 · 투자 분야 신규장벽 동결 합의를 통한 보호주의로의 회귀 방지 등을 통해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를 완화하고 예상보다 빠른 세계경제의 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불균형 해소와 금융개혁 주도하는 G20

G20는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고 세계경제의 지속가능 · 균형성장을 위한 거시경제 공조와 국제금융시스템 강화를 위한 개혁 노력을 주도해 오고 있다. 특히 2009년 9월 피츠버그 회의에서 정상들은 G20를 세계경제 협력의 주 논의의 장(premier forum)으로 지정하고 정상회의의 연례 개최에 합의했다. 이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 성격으로 출범한 G20 정상회의가 글로벌 경제이슈 논의를 위한 최고 거버넌스 체제로 자리 잡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2010년은 회복세로 접어드는 세계경제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지속가능 · 균형성장의 기반을 강화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강화된 세계 금융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가 이러한 과제를 잘 달성할 수 있느냐는 G20 정상회의가 여러 분야 개혁과제의 형태로 제시한 바 있는 약속들을 얼마나 잘 이행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는 또한 G20가 세계경제의 운영위원회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척도가 될 것이며, G20의 신뢰성과도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올해 11월 개최되는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기존 합의사항 이행과 관련한 주요 과제로는, 우선 세계경제의 불균형 해소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균형된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을 들 수 있다. 2009년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지속가능 · 균형성장을 위한 프레임워크(Frame work)에 합의한 바 있다. 이는 G20가 경기부양을 통한 경기침체 방지를 넘어 보다 적극적인 정책공조를 통해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고 세계경제의 지속가능 · 균형성장을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재정 · 금융 · 통화 · 노동 · 무역 · 구조개혁 등의 정책을 포괄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회원국 정책에 대한 상호평가 프로세스를 거쳐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지속가능 · 균형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취해야 할 국가별 정책대안을 종합한 행동계획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위기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개혁노력을 전개하는 데 G20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2008년 11월 워싱턴 정상회의에서는 금융 분야 47개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2009년 4월 런던 정상회의에서는 보상체계 · 신용평가사

등을 포함한 8개 분야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진전이 있었다. 올해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은행 자본 및 유동성 규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 도출을 추진 중이다. 한편 IMF 개혁과 관련해 서울 정상회의 시까지 신흥국으로 IMF 쿼터 비중 5% 이전 등 쿼터 및 거버넌스 개혁을 추진 중에 있다.



서울 G20 정상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셰르파회의와 개발 실무그룹회의가 지난 7월 19~22일 동안 서울에서 열렸다. 사진은 서울 셰르파회의 모습

韓, 개발이슈 성공 시 위상 크게 높아질 것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함께 우리나라가 제안한 개발이슈가 G20의 중요 어젠다로 본격 논의된다. 6월 캐나다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G20 개발 실무그룹을 설치하고, 이 실무그룹이 '개발 어젠다와 다년간 행동계획'(development agenda and multi-year action plans)을 마련해 서울 정상회의에서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G20가 위기극복 이후에도 경제 분야에서 세계적인 차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중요 이슈를 다루는 유용한 포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G20에서의 개발 의제는 역량개발을 통한 개도국의 성장에 중점을 둬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도국들의 경제성장과 빈곤 극복을 지원하는 한편, 세계경제 측면에서도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G20 지속가능·균형성장 프레임워크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인프라, 민간투자 및 고용창출, 인적자원 개발, 무역, 저소득층·중소기업의 금융서비스 접근 개선, 복원력 있는 성장과 식량안보, 거버넌스, 개발경험 공유 등 개도국의 역량을 강화하는 협력에 중점을 둔다는 데에 G20 회원국 간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와 남아공 셰르파(Sherpa)를 공동의장으로 한 제1차 고위급 개발 실무그룹회의가 7월 19일~20일간 서울에서 개최됐다. 이 회의에서는 G20의 성장 중심 개발의제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서울 정상회의까지 작업계획을 구체화했으며, G20 개발 행동계획에 포함될 구체 과제 선정을 위한 원칙을 마련하기로 합의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원칙을 발전시켜 G20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향후 G20 개발의제 논의의 틀을 제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서울 정상회의에서 채택할 개발분야 다년간의 행동계획 마련과 관련해, 현재 G20 개별국가와 국제기구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장국으로서 G20 회원국의 다양한 제안을 종합하고 앞에서 소개한 원칙에 따라 우선순위 과제를 선정해 서울 정상회의에서 채택할 행동계획을 마련하는 작업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개별 과제의 성격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에 걸쳐 이행하고 향후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서 이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G20는 개발 분야에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해 나갈 때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으면서 세계경제 문제에 관한 핵심 거버넌스 체제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G20 개발의제의 성공은 이를 주도해 온 우리나라가 국제개발 문제의 주요 행위자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동시에, G20 내에서의 위상을 공고히 함으로써 국제경제 거버넌스에 있어 우리나라의 참여와 역할을 강화해 나가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남라경제



이성신
KDI 경제뉴스분석팀
책임전문원
sslee@kdi.re.kr

주요 외신들, "한국의 약체 이미지 사라지고 있다"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국, 유럽 등 선진국 경제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2009년에 한국경제가 예상외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고 2010년 들어서도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자 주요 외신들은 놀랍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한편으로 한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잘 극복해낸 배경에 많은 관심을 드러냈다.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 일부 외신을 중심으로 외채상환 부담, 높은 수출 비중 등을 이유로 한국이 채무불이행 위기를 겪고 있는 아이슬란드의 전철을 밟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점을 감안하면 한국경제를 바라보는 외신의 관점이 단기간 내에 크게 반전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최근 1년간 한국경제 관련 외신의 보도동향을 짚어본다.



우리나라는 G20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국제무대의 중심에 서게 됐으며, 오는 11월 서울 정상선언은 새로운 경제질서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명박 대통령과 각국 정상들

"한국은 G20 의장국 역할을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고 있으며 … 세계의 규칙을 만드는 역할은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아시아 최고 부국 중 하나로 부상한 한국에 걸맞은 역할임에 분명하다."

Financial Times 2010년 3월 17일자

한국경제, 선진국 침체 속에서도 경기위축 모면해

2009년 초만 해도 해외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6%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됐다. 그러나 2009년 하반기 들어 경기회복세가 구체화하는 양상을 보이자 외신들은 서서히 한국경제에 대해 긍정적인 논조를 내비치기 시작했다. 예컨대 2009년 12월 10일자 *Bloomberg* 기사에서 미 월스트리트의 대표적인 한국투자 전문가인 헨리 세거맨(Henry Seggerman) 국제투자자문(IIE) 대표는 "경제성장세가 가속화되면서 한국 기업들의 주가가 부양되고 원화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리 아이켄그린(Barry Eichengreen) 미 UC버클리대 교수도 "한국의 경제·금융 기초여건이 놀라우리만큼 탄탄하며, 세계경제가 안정세를 유지하는 한 한국경제는 향후 5년간 평균 4~5%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결정적으로 2009년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 0.2%를 기록한 데 이어 2010년 1분기 GDP 성장률(전년동기비)이 전분기의 6%에서 2002년 말 이후 최고치인 8%에 가까운 수준으로 확대되면서 *Wall Street Journal*(이하 WSJ), *Bloomberg*, *Financial Times*(이하 FT) 등 주요

외신들은 예상외의 높은 성장세에 일제히 놀랍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특히 FT는 2010년 4월 28일자 칼럼에서 한국경제가 과거의 정상 수준을 되찾으려면 아직 멀었다고 전제하면서도 한국이 교과서적인 경기회복을 달성해냈다고 타전했다.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아시아의 스티븐 로치(Steven Roach) 회장, 샤론 램(Sharon Lam) 리서치 담당 부사장은 2010년 4월 27일 *Business Times* 공동 기고문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중 원화가치 약세가 한국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 측면이 있긴 하지만 통화 약세가 경쟁력 확보의 결정적 요소는 아니었다고 평가하며, 한국 기업들이 끊임없이 제품 디자인 및 품질 향상에 주력하고 전략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한 것이 경쟁력 향상에 더욱 유효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의 정부 정책이 미래지향적인 민간 부문의 전략에 부응해 지속적인 R&D 투자, 서비스 부문 개혁, 지역 개발 등에 초점을 맞출 경우, 향후 10년 동안 한국은 4% 이상의 잠재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외환위기 극복' 경험으로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

국가 재정위기를 겪으며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된 그리스가 한국을 본받아 위기를 조속히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 외신도 눈에 띄었다. 2010년 5월 10일 *Bloomberg*의



"경제성장세가 가속화되면서 한국 기업들의 주가가 부양되고 원화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헨리 세거맨 국제투자자문(IIE) 대표

아시아 담당 칼럼니스트인 윌리엄 페섹(William Pesek)은 그리스가 한국의 과거 IMF 구제금융 경험에서 세 가지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째, 한국인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한 금모으기 운동처럼 이미 위기가 닥친 이상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것. 둘째, 한국이 IMF 구제금융을 받은 이후 부실기업 및 은행 파산, 근로자 해고, 정부 부채 축소 등을 조속히 단행했듯이 피할 수 없는 구조조정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것. 셋째, 경제 붕괴가 오히려 한국에 전화위복이 됐듯이 구제금융 이후의 미래가 밝을 수 있다는 것. 페섹은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기업지배구조 개선, 제조업 위주 성장의 탈피 등 아직 남은 과제들이 많지만 이런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한국 기업들이 끊임없이 제품 디자인 및 품질 향상에 주력하고 전략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한 것이 경쟁력 향상에 더욱 유효했다."

스티븐 로치 모건스탠리아시아 회장

다른 국가들의 역할모델이 되기에 충분하며, 개도국이라는 꼬리표는 더 이상 한국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닛케이*는 2010년 5월 10일, 한국 기업들이 전자제품과 자동차 수요 확대가 이어지는 신흥국 시장을 개척하고 구미 등 선진국에서도 공세를 강화하는 등 세계시장에서 두드러진 약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하며, 한국 기업 경쟁력의 기초는 'IMF 외환위기' 극복을 통해 구축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외신들은 향후 경기회복세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대내외 변수들을 들어 경계와 우려의 시각도 견지해 나갔다. FT는 4월 28일, 한국이 저금리 유지, 예산 조기집행 등을 통해 위기관리 측면에서는 만점을 받았지만, 리스크와 유동성이 각국 중앙은행과 정부의 도움 없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FT는 6월 10일, 외국자본의 유출입 변동성, GDP의 80% 수준인 높은 가계부채 등 잠재적인 위험요인들이 한국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한국경제의 대중 의존도가 점점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중국경제가 부동산 거품, 노동문제 증가 등 늘어나는 도전과제 속에서 활기를 잃기 시작할 경우 한국경제에 타격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려면 보다 고통스러운 도전과제인 구조개혁에 착수해 또다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외신들은 한국경제가 예상외 호조세를 보이면서 2009년 말부터는 물가상승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금

리인상 전망이 급부상했으나, 경기회복세가 보다 공고해질 때까지 금리인상은 시기상조라는 정부측 견해와 점진적인 금리인상을 통해 물가상승에 대비해 나가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견해가 충돌을 빚으면서 정부와 한은이 정책 불협화음을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2010년 1월 정부가 금리를 결정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정부측 관료를 참석시키는 열석발언권을 1999년 이후 처음으로 행사했다. 이를 두고 WSJ은 1월 8일자 기사에서, 정부가 한은에 대해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하라는 압력을 행사하게 될 예상치 못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2월 12일자 기사에서는 금리인상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려면 수개월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조기에 금리인상을 시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금리인상 시점을 놓치면 2010년 하반기나 2011년에 급격한 금리인상을 단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마찬가지로 *Reuters*도 2월 12일, 글로벌 경기하강이 한창 고조되던 중에 단행된 팽창적인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작업을 다시 미루면 자산가격 거품이 촉발돼 향후 단기간 내에 큰 폭의 금리인상을 단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FT는 3월 12일, 정부가 한은 금통위의 열석발언권을 부활시킨 것이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리인상이 시기상조라고 거듭 발언해온 것은, 중앙은행과 정부 사이에 존재하는 통상적 수준의 완곡한 압력의 차원을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한은이 강조하고 있는 '한은의 신뢰성 · 전문성 · 독립성'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편 2010년 7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처음으로 0.25%p의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되자 FT · WSJ · 닛케이 등은 점점 견고해지는 경제성장 전망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결국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했다고 전했고, 2010년 2분기에 GDP 성장률이 전분기비 1.5%, 전년동기비 7.2%를 기록하자 추가 금리인상 전망이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G20 회의,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

외신들은 빠른 경기회복세와 더불어 더욱 높아진 한국의 국가 위상에 대해서도 많은 지면을 할애해 보도했다. 특히 올해 11월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려는



"한국은 다른 국가들의 역할모델이 되기에 충분하며, 개도국이라는 꼬리표는 더 이상 한국에 어울리지 않는다."

윌리엄 페섹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정부의 노력과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FT는 2009년 12월 31일, 세계무대에서 아직까지도 '리틀차이나' 혹은 '리틀재팬'으로 한국을 경시하는 분위기가 남아 있는 가운데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의 국가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 애써 왔다고 보도했다. *Newsweek*는 2010년 2월 8일판 기사에서, 한국정부가 중국의 강력한 계획경제와 일본의 성장 없는 경제에 대한 역동적 대안으로서 한국을 부상시키려 하고 있다며, 베트남 · 캄보디아 · 인도네시아 등의 공무원들이 경제모델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경제 및 경영관리 연수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FT는 2010년 2월 25일, 한국의 인구가 인도의 20분의 1에도 못 미치는데도 경제규모는 사실상 인도와 맞먹는다며 약체라는 한국의 이미지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FT는 그 근거의 하나로 한국 기업들이 경기침체에 따른 타격에도 불구하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가난한 자의 소니'(poor-men's Sony)라는 이미지를 벗은 지 그리 오래 되지 않은 삼성전자가 매출액 기준으로 2009년 미 휴렛패커드(HP)를 제치고 세계 1위 IT 기업에 등극했고 2010년 수익은 일본의 상위 15개 전자기업의 수익을 합한 것보다 많을 것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FT는 도시화 · 첨단화 · IT화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구매력 기준)이 약 2만8천달러로, 최대 라이벌 국가인 일본과의 격차가 5천달러에 불과한 데다 경제성장률이 일본보다 훨씬 견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FT는 2010년 3월 17일, 기업가 마인드를 지닌 이명박 대통령이 G20 의장국 역할을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고 있으며, 이 대통령의 표현대로 세계의 규칙을 만드는 역할은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아시아 최고 부국 중 하나로 부상한 한국에 걸맞은 역할임에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나라경제


쓰는 물이 많으면,
먹는 물이 부족해집니다
지구 전체의 물 중 1%만이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이며,
가정에서 쓰이는 대부분의 물은 1%의 식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을 절약하세요
kobaco
한국방송광고공사 | 공익광고협의회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bdkim@kif.re.kr

글로벌 금융안전망 반드시 관철시켜야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다. 되풀이되는 위기는 매번 상흔을 남긴다. 상흔을 치유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금융시스템 정비에 한창이다. 이번 위기과정에서 우리나라도 1997~1998년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혹독한 시련을 겪었다. 두 차례의 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며 현 시점에서 고민해야 할 금융의 화두는 무엇일까?

우리 상황에 맞는 시스템위험 관리방안 마련을

첫째 과제로 필자는 시스템위험 관리를 통한 금융의 안정성 확보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번 금융위기가 주는 대표적 교훈 중 하나는 시스템위험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것이다. 소위 '대마불사' 형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에 대한 국제적 규제강화 움직임도 이러한 자각에 기인한다. 그러나 나라별로 시스템위험을 야기하는 기저요인은 차별화될 수밖에 없다. 나라마다 경제 및 금융 구조가 다르고, 금융규제 및 감독시스템도 상이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위기의 근원지인 미국은 다기화된 감독 주체로 인해 감독 중복 및 사각지대가 발생해 시스템위험을 사전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반성에 따라 최근 입법화된 '도드-프랭크 금융개혁 법안'에서 시스템위험 감독 및 금융감독기관 간 총괄조정을 위한 금융안정협의회(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를 신설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어떠한 시스템위험의 잠재적 불안 요인을 상정할 수 있을까?



지난 7월 1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막된 '아시아21 컨퍼런스'는 아시아 경제의 역할과 전망을 폭넓게 재조명하고 세계의 성장을 견인하는 아시아의 역할과 국제금융안전망, 아시아 지역통합 확대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사진은 환영사를 하고 있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무엇보다도 외환 부문의 취약성을 꼽지 않을 수 없다.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자본자유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두 차례의 위기를 통해 자본의 불안정한 유출입과 과도한 환율 변동은 경제정책을 무력화시켜 정상적인 경제운용이 불가능하게 함을 경험했다. 같은 실수를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외환 부문의 취약성 개선을 위한 대책은 다양할 수 있으나 실효성 확보가 쉽지 않다. 가장 근본적 방법인 원화의 국제화는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렵다. 외환보유고 확충도 내외 금리차로 인한 보유비용 문제와 외환보유고의 실질적 위기방지 기능이 의문시돼 차선의 대책이라 할 것이다.

결국 통화스왑, 지역통화협정, IMF 등 국제기구를 통한 유동성 공급확대 방안이 비용 대비 효율

성이 가장 높은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글로벌 금융안전망(global financial safety net) 구축은 우리나라가 의장국인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반드시 관철되도록 국제적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자간 통화스왑은 미국이 반대할 경우 실현 가능성이 낮으므로 IMF의 유동성 제공조건 완화 및 한도 확대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또한 IMF의 지원에 대한 낙인효과(stigma effect;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부정적인 낙인이 찍히면 행태가 나쁜 쪽으로 변해 가는 현상)를 방지할 방안도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외환 유동성 공급채널 확보와 더불어 금융회사의 단기 시장성 외환조달에 대한 규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미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에 대한 양적 규제는 실시됐다. 각국별로 독자적 추진이 예상되는 은행세도 우리나라가 굳이 시행하고자 한다면 금융회사의 단기 시장성 외환조달과 연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은행세로 조성되는 자금으로 별도 기금을 만들어 중소기업의 선물환 매입 용도로 사용해 금융회사의 외환조달 수요 압력을 경감시켜 주는 것도 가능하다.

외환 부문 이외에 시스템적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가계부채, 부동산관련 대출, 중소기업의 구조적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 문제는 상호작용을 하면서 금융 불안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부동산시장의 연착륙과 가계 레버리지의 점진적 축소를 유도하는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중소기업이 전체의 30%를 상회하는 등 중소기업의 내재적 경쟁력 한계는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이다. 경기상황이 악화되고 공적 신용보증이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중소기업발 시장충격이 상당할 수 있다. 가계와 중소기업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거시건전성 감독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금융의 '삼성전자' 나와야

둘째 과제는 금융산업에서도 포스코 · 삼성전자 · 현대자동차와 같은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회사가 탄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기 이후 각국은 금융시스템 구조개혁과 동시에 국제금융시장에서의 경쟁력 선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중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의 해외 금융회사 인수 및 진출은 눈여겨볼 만하다. 금융규제 강화의 악조건하에서도 금융회사 간 글로벌 리더 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글로벌 경쟁력은 실물기업에 비해 한참 뒤처져 있다.

금융회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당국의 직접적 역할은 크지 않다. 금융회사의 자체적 경영판단에 의거한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 및 시행착오를 통해서 쌓인 유 · 무형 자산이 중 · 장기적으로 축적돼야 할 것이다. 다행히 우리나라 금융회사는 글로벌 위기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 않았고 건전성 등 기초체력도 양호한 상태여서 글로벌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기본조건은 갖추고 있다. 또한 자본조달비용 상승, 부동산대출시장 포화, 중견기업군 고객이탈 등으로 인해 국내 영업환경 악화가 예상되면서 과거의 대차대조표 확대를 통한 성장모델은 유효성을 상실할 전망이다. 이제 국내 금융회사들도 적극적 해외시장 개척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정책당국의 입장에서는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적극 장려하고 가급적 외국 금융회사들과의 경쟁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규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금융안정위원회, 바젤은행감독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금융의 국제규범을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이 요구된다. 현재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 측면에서는 각국별로 입장 차이가 확연해 가급적 자국 금융회사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 정책당국도 우리 금융회사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규제 부문에는 타국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대신,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우리 주장을 관철시키는 지혜가 필요하다. 나랏경제

우리나라가 의장국인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국제적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자간 통화스왑은 미국이 반대할 경우 실현 가능성이 낮으므로 IMF의 유동성 제공조건 완화 및 한도 확대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조동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dccho@kdischool.ac.kr

튼튼한 경제 펀더멘탈이 위기를 막는다



건실한 경제구조는 외부충격에 대한 내성을 강화할 뿐 아니라 위기 이후 탄력적인 거시경제정책 시행의 전제조건이 된다.

2008년 9월 발생한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은 전 세계 금융시장을 사실상 공황 상태로 몰아넣었다. 각국의 주가가 급락하고 주택가격은 하락세가 심화됐으며, 자금시장은 극도로 경색됐다. 세계 교역량이 20% 이상 급락하는 등 실물경제도 급속히 침체되면서 각국의 실업률이 치솟았다.

무역의존도가 높고 금융시장을 완전히 개방한 우리 경제가 이와 같은 세계경제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위기에 빠진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유동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단기외채가 급속히 회수됐으며, 이에 따라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는 급락했다. 아울러 전 세계적 수요급감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도 급락하면서 2008년 4분기 GDP는 직전 분기에 비해 무려 5%(연율 19%)나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10여년 전의 경제위기 악몽이 되살아나는 가운데 한국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급속히 확산됐다.

그러나 2009년 3월을 고비로 우리 경제는 안정되기 시작했다. 2009년 2분기부터 빠르게 반등해 2010년 1분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8%가 넘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경기회복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청년실업 문제가 남아 있으며 향후에도 세계경제 여건이 불안하기는 하나,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제위기라는 이번 세계 금융위기 와중에서 이제까지의 성과만으로도 우리 경제는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빠른 위기 극복, 견실한 경제 펀더멘탈에 기인

이처럼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데에는 정부의 시기적절하고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크게 기여했다. 세계적인 금융공황의 와중에서 정부는 미국 등과의 통화스왑을 통해 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을 즉각 추진했다. 한국은행도 금리목표를 기록적 수준인 2%까지 급속히 낮춤으로써 금융시장의 경색을 적극적으로 완화했다. 특히 환율이 급등하는 가운데에서도 환율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직접 개입을 자제하고, 당국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외환보유액만을 시중은행에 시장친화적인 경매방식으로 공급한 부분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해 크게 개선된 대응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외환보유액의 급격한 감소를 방지하

는 한편 시장의 외환경색을 어느 정도 완충함으로써, 저금리정책을 시행할 환경을 제공해 준 것으로 해석된다. 1997년에는 외환고갈이 고금리 정책을 채택해야 하는 가장 큰 근거가 됐다.

그러나 위기가 발생한 이후의 정책대응만으로 우리 경제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다. 사후적인 정책대응보다 훨씬 중요한 부분은 위기가 발발할 당시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 비교적 양호했다는 점이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가 발발할 당시와 비교하면, 그 이후의 구조조정 결과 우리 경제는 몰라볼 정도로 건강해진 상태에서 세계금융 위기를 맞이한 셈이다.

우선 재벌을 중심으로 대기업들의 재무구조와 수익성이 외환위기 이전 기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견실해졌으며, 그 극심한 금융시장의 혼란기에도 기업들의 연쇄부도 공포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견실한 재무상태를 기초로, 우리나라 주요 수출 대기업들은 금융위기와 함께 발생한 환율상승을 적극 활용할 수 있었다.

또한 은행 부문도 자본충실성이나 수익성이라는 측면에서 1997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돼 있었다. 따라서 기업의 연쇄부도와 은행 부문의 침몰이 상승작용하는 금융 악순환은 거의 원천적으로 방지될 수 있었던 셈이다. 정부 부문의 경우에도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금융시장의 동요를 일으키지 않고도 일시적 적자재정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건전성이 유지되고 있었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 주택구입과 맞물려 부채가 크게 증가한 가계 부문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참여정부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추진된 LTV(담보대출인정비율) 및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에 의해, 이와 관련된 금융위기 확산 가능성은 선진국처럼 크지 않았다. 특히 위기 이전 수년 동안 우리나라의 주택가격도 강남 3구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급등했던 것이 사실이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전국적인 주택가격 상승 정도가 훨씬 경미했었던 점이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급격한 부실화 가능성을 억제하는 데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 2008년 9월 위기 발생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은 선진국과 달리 급락하지 않았다.

이제 막 시작된 금리정상화의 점진적 추진, 고령화 사회와 통일 가능성을 염두에 둔 보수적인 재정정책 기조로의 회귀, 주택시장과 연계된 가계부채 증가의 억제 등은 위기 극복 이후 정책방향의 주요 의제가 돼야 할 것이다.

단기적 성과에 대한 집착 버려야

이처럼 한국경제의 빠른 회복은 정부의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정책대응과 우리 경제의 견실한 펀더멘탈이 중첩돼 나타난 결과다. 이 중 어떤 요인이 어느 정도 중요했는지를 정확히 계량화하는 작업은 쉽지 않다. 그러나 이 두 요인들 간 상호 인과관계에 대해선 당장 생각해볼 수 있다. 위기 직후 취해진 탄력적인 정책대응의 배경에는 한국경제의 상대적으로 양호한 펀더멘탈이 자리 잡고 있었다. 즉, 과감한 재정지출 확대의 배경에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건전했던 정부의 부채관리가 있었으며, 환율상승에도 불구하고 1997년 외환위기와는 정반대로 금리를 과감하게 인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동안 확충된 외환유동성 및 국내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건전성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다.

견실한 경제구조는 그 자체로 외부충격에 대한 내성을 강화할 뿐 아니라 위기가 발생한 이후의 탄력적인 거시경제정책 시행의 전제조건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위기극복 이후의 정책방향은 위기대응을 위한 비상대책들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 기초여건이 다시 부실화될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접근돼야 할 것이다. 이제 막 시작된 금리정상화의 점진적 추진, 고령화 사회와 통일 가능성을 염두에 둔 보수적인 재정정책 기조로의 회귀, 주택시장과 연계된 가계부채 증가의 억제, 지나치게 단기화돼 있는 외화부채에 대한 적극적 관리 등은 이와 같은 정책방향의 주요 의제가 돼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우리 내부의 가장 큰 걸림돌은 단기적인 성과에 대한 집착이다. 중장기적 시각에서 볼 때, 경제의 안전한 운행은 지속 성장에도 긍정적 요인이라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나라경제

〈세계는 지금〉은 OECD · WTO 등 국제기구에서 최근 다뤄지는 정책이슈나 동향을 각 부처 파견관들이 생생히 전해주는 코너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맞서 한국경제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청년실업 해소에 팔 걷어붙인 OECD

OECD는 청년들이 아무런 자격도 갖추지 못한 채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직업교육과 훈련을 충실히 실시하게 한다. 미숙련 청년을 도제고용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업급부 수급 자격을 갖추지 못한 학교 중퇴 청년들을 대상으로 적정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펴는 등 다각적 노력을 권고하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2008년 말 시작된 전 세계적 고용위기는 OECD 국가의 노동시장에도 다양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고용은 한 국가의 성장잠재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삶의 질과 직결된 이슈로 각국은 고용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정책수단을 모색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노동시장에서 볼 수 있는 공통 현상은 급격한 노동수요의 감소다. 이에 따라 예외 없이 실업률이 치솟고 경기에 민감한 청년실업은 일반 실업보다 훨씬 악화됐다. 스페인의 지난 5월 실업률은 19.9%, 특히 청년실업률은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 증가는 그 자체로 심각한 사회 문제이며 각국 정부의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부양책(stimulus measures) 가운데 급증한 실업자들의 소득을 보조해 주기 위해 모든 OECD 국가들이 막대한 재정지출을 감당하고 있어 전체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

핵심 근로연령층 · 고령자 노동참여 감소세 확연

최근의 노동시장 통계는 매우 복합적인 양상을 띤다. OECD 국가의 평균 실업률은 2009년 12월, 2차대전 이후 최고치인 8.8%를 기록했다. 이는 위기 직전 2007년 말 최저치였던 5.8%와 비교하면 3%p가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2010년 들어서 OECD 전체 실업률이 안정화되는 추세고(1,3,4월; 8.7%, 2,5월; 8.6%), 그리스발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급증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독일은 단시간 근로지원(Short Time Work scheme) 등을 통해 위기상황 이전보다 실업률을 낮추고 있다.

OECD 노동시장은 전반적으로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가 급격히 감소했으며 핵심 근로연령층(벨기에, 아일랜드, 이탈리아), 고령자(아이슬랜드, 한국, 멕시코)의 노동시장 참여가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이번 위기 상황에서 전통적인 취업취약계층이 가장 큰 악영향을 입었다는 것이다. 청년(15~24세)실업률은 2009년 말 19%를 기록(스페인; 40%, 프랑스 · 이탈리아; 25%)했고, EU국가에서 상실된 일자리의 대부분은 임시근로자(기간제 및 파견 근로)들이었다.

또 하나 특징적 현상은 보통 여성이 경기의 영향을 받는 것과 비교할 때, 이번 위기에는 남성의 일자리 상실이 컸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OECD는 전통적으로 남성이 다수를 차지해 온 분야인 건설(9.8%), 광업(9.4%), 제조업(9.1%)에서의 일자리 상실이 여타 산업에 비해 매우 두드러진 것 등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이에 줄어든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보조를 지급하는 국가가 독일을 비롯해 22개국, 사업주의 사회보장 기여금 등 비임금 비용을 감축(중소기업의 경우 청년,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경우도 존재)한 국가가 16개국, 고용보조 및 일자리경험 등의 프로그램을 채택한 국가가 16개국으로 나타났다. OECD는 이 같은 정책이 사중손실(편집자 주; 재화나 서비스의 균형이 파레토 최적이 아닐 때 발생하는 경제적 효용의 순손실을 뜻함),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심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회복이 가시화될 경우 이들 정책을 정리할 것을 권고한다.



OECD 국가들은 급격히 늘어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각종 정책수단을 모색하고 있다. 사진은 영국의 국가고용기관인 'Job Centre Plus'

과거의 성공적 정책사례와 비교할 때 OECD는 이번 위기 상황에서 실업 급증에 대응한 공공고용서비스(Public Employment Service; PES) 인력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ur Market Polices; ALMPs) 지출이 충분치 못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영국과 같이 국가고용기관인 'Job Centre Plus'가 인력과 예산을 신속히 늘려 효과적 고용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 국가가 예산수요 급증에 따른 재정압박으로 서비스 확충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바로 고용서비스와 연결돼 실업기간 중 집약적인 고용서비스[필자 주; 심층상담, 개인화된 지원(Individual Action Plan; IAP), 구직활동 상황에 대한 수시 체크 등]가 작동하지 못하게 했다. 동시에 노동시장의 빈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면서 직접적인 일자리 매칭 기능도 위축됐다.

OECD는 늘어난 구직자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제공 및 상담의 최소 주기를 유지하며, 줄어든 취업기회에 대응해 인턴십 등 공공 부문의 일자리 기회를 만들고 장기 실직자에게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프로그램이 제공되도록 기관의 역량을 확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OECD는 이번 위기가 과거와 달리, 특히 노동시장을 회복함에 있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한다. 더욱이 실업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어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길지 않은 많은 OECD 국가(대한민국, 미국, 캐나다, 일본, 핀란드 등)들은 급여지급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장기)실업자의 빈곤위험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최근의 일반적 추세인 비정규 근로자(non-standard forms of workers) 증가와 관련해 미국·프랑스 등 주요 OECD 국가들은 많은 비정규 근로자들이 실업보험(우리의 고용보험) 가입 최소기간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실업보험의 범위와 가입기간 등 요건을 완화하고 기간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많은 국가들이 기존 실업급부뿐만 아니라 주거보조 및 여

타 사회급부를 추가 지급함으로써 실직자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있다.

청년실업의 경우 대부분 국가에서 높은 증가를 보이는데, 이같이 높은 청년실업은 단순히 이번 위기상황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매우 장기적인 사회문제로 고착될 가능성이 있다. OECD 통계를 보면 청년실업은 핵심 노동연령층(임시 및 경기민감 일자리)과 비교할 때 경기민감도가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청년실업률이 여타 계층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OECD 각국은 취약 청년층(at-risk youth)에 초점을 맞춰 이들의 실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 OECD는 청년들이 아무런 자격도 갖추지 못한 채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직업교육과 훈련을 충실히 실시하게 한다. 미숙련 청년을 도제고용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업급부 수급 자격을 갖추지 못한 학교 중퇴 청년들을 대상으로 적정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펴는 등 다각적 노력을 권고하고 있다.

탄력적이면서 경쟁력 있는 노동시장 건설을 주문

OECD는 위기 상황에 대응한 회원국의 고용사회 정책이 매우 적시적이고 적정했던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정책이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언급한다. 경기부양책 또한 매우 유효한 것이어서 OECD국가 중 가장 먼저 위기에서 탈출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녹색성장전략 및 녹색일자리 계획을 연속 발표, 시행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킨 모범 사례로 꼽는다.

이와 관련해 OECD의 몇 가지 권고는 귀담아 들을 만하다.

먼저 노동시장 정책의 볼륨 및 민간공급자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행정적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권고한다. 둘째, 현존의 소득보조 정책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계층에 대한 지원(또는 노동시장 유도, 복귀 정책) 강화가 요구된다. 셋째, 현 위기를 기존 노동시장 기제 개혁의 기회로 활용하는 혜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당면한 '고령화(OECD 국가 중 최고 속도), 저출산(OECD 최저)'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 같은 OECD의 정책 권고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엇보다 고령화는 전체 노동력 감소는 물론, 재정지출의 급증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효과적 준비와 대응이 요구된다. 따라서 보다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고용사회 정책뿐만 아니라 거시정책 및 세제정책과의 효과적 조합이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OECD는 '보다 많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노동시장'이라는 모토 아래 노동시장 공급 및 수요 정책이 조화를 이룰 것을 요구한다. 노동공급 정책으로는 효과적 근로자 능력발전 시스템과 실업자(및 사회급부 수급자)를 노동시장으로 끌어 들이기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추진을 핵심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수요정책으로는 생산물 시장의 건전한 경쟁촉진과 고용보호법제 유연화 등을 제언하면서 이들이 서로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최근에는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새로운 기술'(New Skills for New Jobs)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전체적으로 탄력적이면서도 경쟁력 있는 노동시장의 건설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EU 등은 보다 효과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과학적이고 정밀한 노동통계 생산이 중요하다고 보아 노동통계국(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BLS) 및 EU의 통제기관인 유로스타트(Eurostat)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기도 하다.

위와 같은 OECD의 고용정책 동향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노동시장 정책설계는 과학적 분석 및 이에 대한 깊은 이해가 바탕이 돼야 할 것이다. 또 여성 · 고령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촉진 등 핵심 노동시장 화두를 슬기롭게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자체 고민과 더불어 OECD 등 이 분야 정책을 선도하는 기관과의 협력과 보다 실효적인 노동시장 정책구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라경제

*이 글은 필자의 개인 의견이며, 주OECD대표부 및 외교통상부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형우
OECD고용노동사회국
고용분석정책과 수석행정관
Hyoung-Woo.CHUNG@oecd.org

〈세계는 지금〉은 OECD · WTO 등 국제기구에서 최근 다뤄지는 정책이슈나 동향을 각 부처 파견관들이 생생히 전해 주는 코너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맞서 한국경제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직 갈 길이 먼 DDA 규범 협상

WTO에는 여러 협정이 있고 이들 모두 넓은 의미의 '규범'이라고 할 수 있으나, DDA에 있어 규범 협상(Rules negotiations)이라고 할 때는 반덤핑, 보조금, 지역협정 등 3개 분야가 그 대상이다. 2001년 DDA 출범 당시 합의된 도하각료선언은 이 같은 3개 분야에서 현행 WTO 규범을 명료화하고 개선(clarify and improve)할 것을 협상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규범 분야는 DDA 출범 당시부터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다. 농업과 서비스는 각각 농업과 서비스 협정에 추가 자유화 협상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있어 DDA 어젠다로 채택하는 데 이견이 없었고, 비농산물 역시 전통적 협상 대상이므로 어젠다 채택에 큰 무리가 없었다. 반면, 규범의 경우 출범 당시부터 어젠다 채택 범위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미국에게 있어서 반덤핑 협정을 개정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했고, 보조금 분야는 수산보조금 신규 규율의 도입을 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일본 등은 반덤핑 협정 규율을 강화하기를 희망했고, 수산보조금 신규 규율 도입은 신중한 입장이었다. 협상의 기초가 되는 각료선언은 이러한 대립 끝에 어렵게 합의된 타협점이었던 것이다.

제로잉 관행 두고 대립각 좁히지 못해

지난 10년 가까이 진행된 규범 협상은 몇 단계로 나눠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회원국의 제안서에 기초한 논의 단계다. 2002년 규범 협상그룹이 발족된 이후 공식제안서가 200여건, 비공식 제안서가 150여건 제출됐다. 이들은 기존 반덤핑 및 보조금 협정을 어떻게 개정할지, 수산보조금 신규 규율을 어떻게 도입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었다. 2007년까지의 협상은 이들 제안서를 토론하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2007년 11월 소위 '의장 텍스트'(Chair's text) 제출로 협상은 큰 전기를 맞게 된다. 갈마스(Amb. Guillermo Valles GALMES) 규범 협상그룹 의장은 2002년 이후 회원국의 제안서를 토대로 진행된 논의 결과를 반영해 본인이 직접 기존의 반덤핑 및 보조금 협정 개정안 및 수산보조금 신규 협정문안을 제시했다. 상세한 내용은 후술하겠지만, 의장이 제시한 개정안 및 신규 협정문안은 반덤핑, 수산보조금 등 핵심 분야에 있어 미국 등 특정 국가의 입장만을 편파적으로 반영한 치명적 문제가 있었다.

처음 갈마스 의장은 2008년 7월 개최된 각료회의에서 농업과 비농산물 분야에 있어 협상 세부원칙(Modalities)이 타결되면,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농업 및 비농산물 분야에서의 합의 도출이 지연되면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 2008년 12월 수정안을 제출했다. 의장은 기존의 반덤핑, 보조금 협정 개정안에 대해서는 개정안(revised text)을 제시했으나, 논란이 많았던 수산보조금 분야에 대해서는 세부 문안을 제시하지 않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이슈들을 열거한 일종의 질의서 형식의 로드맵을 내놓았다. 2007년 11월 제출된 의장 텍스트에 대한 비판을 의식했는지 의장은 많은 논란이 제기됐던 이슈들에 대해서는 2007년 텍스트 문안을 삭제하고, 논란이 있다고 언급하는 수준에서 처리했다. 의장이 회원국 간 의견 대립이 심한 주요 이슈들에 대해 현명



최근에는 수산보조금 협상 진전을 논의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형태의 고위급 비공식 회의가 제네바에서 활발히 개최되고 있다. 사진은 제네바 소재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 전경

한 대안을 제시하는 혜안을 보여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지만, 이들 이슈들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는 수준으로 물러난 것이다. 우리나라가 강력히 반대해온 이슈들이 텍스트에서 삭제됐다는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중요한 이슈들이 다시 원점으로 회귀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2007년 11월 의장 텍스트는 기존의 반덤핑 협정문을 50여군데 정도 개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 중 40개 정도의 이슈는 회원국 간 이견이 크지 않아 의장이 2008년 12월 수정안을 냈을 때도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 문안을 제시했고, 아직 일부 이견이 있긴 하나 어느 정도 안정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나머지 10여개 핵심 쟁점인데, 대부분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회원국 간 이견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 쟁점 중 단연 최대 쟁점은 제로잉(zeroing)이다. 제로잉이란 수출국의 내수가격(정상가격)과 수출가격 비교 시 마이너스 덤핑마진(정상가격이 수출가격보다 낮은 경우)을 합산하지 않고 이를 0으로 처리해 최종 덤핑 마진을 높이는 관행이다.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이 반덤핑 마진 산정 시 부분적으로 필요할 경우 채택해 온 방식인데, 현행 협정문상 제로잉을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그러나 WTO 패널과 상소기구는 해석상 이러한 방식이 WTO 반덤핑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러한 자국의 관행을 반덤핑 협정문에 삽입해 제로잉을 합법화하려고 한다. 이러한 관행으로 그간 많은 피해를 입어온 우리나라는 FANs 그룹(Friends of Anti-dumping Friends)과 공조해 제로잉을 WTO 협정에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을 주장해 왔다. 2007년 11월 의장 텍스트가 이러한 제로잉 관행을 일부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FANs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WTO 패널과 상소기구에서 금지하고 있는 관행을 허용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우리나라가 포함된 FANs 15개국이 중심이 돼 20여개 국가들이 공동으로 제로잉의 전면 금지를 촉구하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반덤핑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이 25개국 정도 되는 것을 감안할 때 거의 대부분 국가들이 참여했으며, 제로잉을 지지하는 국가들은 미국, 뉴질랜드 등 극히 일부였다.

수산보조금 규율 도입 여부도 관건

보조금 개정 협상은 다시 기존 보조금협정을 개정하는 협상과 수산물 관련 보조금 규범을 추가로 제정하는 협상으로 나뉜다. 이 중 수산보조금 규범 제정 협상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일반 보조금 개정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진하다. 일반 보조금 개정 협상과 관련, 2007년 의장 텍스트는 회원국의 적은 관심을 반영하듯 기존 보조금 협정문 내용을 크게 바꾸지 않았다. 그나마 비중 있게 논의됐던 쟁점들도 회원국 간 견해차가 커 2008년 수정텍스트에서는 대부분 삭제돼 기존의 보조금 협정으로 원상 복귀됐다. 규제가격(규제가격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출가격이 상이한 것을 보조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 수출신용, 보조금 혜택(benefit)의 판단 기준 등이 보조금 협상에서 관심 있게 논의되고 있는 이슈들이나 회원국 간 대립으로 합의 도출은 멀어 보인다.

보조금 협상의 최대 관심 분야는 새로운 수산보조금 규율을 도입하는 수산보조금 협상이다. 거의 모든 DDA 이슈가 교역 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수산보조금 협상에서는 이러한 교역 측면 외에 과잉어획(over-fishing)과 과잉어획능력(over-capacity)을 방지하자는 환경적 측면의 목표를 토대로 협상이 전개돼 왔다.

수산보조금 협상의 핵심 쟁점은 금지보조금 범위다.

2007년 의장 텍스트는 거의 전적으로 수산보조금에서 공세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소위 'Friends of Fish'(호주, 미국, 아르헨티나, 칠레 등) 진영의 입장만을 반영해 매우 포괄적으로 수산보조금을 금지했다. 의장 텍스트는 금지 보조금 대상으로 ①선박건조 및 수리 ②어선의 제3국 이전 ③운영비용(연료, 미끼 등) ④항구 인프라 및 인근 가공시설 ⑤어획물에 대한 가격 보전 ⑥어업 종사자 및 법인에 대한 소득 보전 ⑦입어료 ⑧불법 어획 ⑨기타 과잉어획 중인 어족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을 망라했다.

보통의 경우 의장이 텍스트를 제출하면, 회원국들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기 어려워 불만이 있기 마련인데, 'Friends of Fish' 진영이 의장 텍스트에 대해 일제히 만족감을 표시한 것은 이 텍스트가 얼마나 균형을 상실한 것인가를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의 영세한 어업 현실을 감안해 면세유 등 보조금을 어민들에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금지보조금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다. 우리나라는 EC, 일본, 대만과 공조해 의장 텍스트의 편파성을 강력히 비판했다.

금지보조금 범위와 함께 수산보조금 협상에서의 또 다른 핵심 쟁점은 어업관리제도(fisheries management system)다. 도하각료선언, 홍콩각료선언상 과잉어획을 방지하자는 협상 목표가 분명한 만큼, 효과적 어업관리제도를 통해 과잉어획을 방지하자는 데 이견을 제기하는 국가는 없었다. 다만, 어업관리제도는 개념적으로 그 범위가 모호한 만큼 실행가능하고 명확한 규범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들어서는 각 진영에서 새로운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회원국 간 이견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2007년 의장 텍스트를 지지하는 미국은 2007년 의장 텍스트를 정교하게 다듬는 텍스트 문안을 제시해 '굳히기 작전'을 전개하고 있고, 브라질, 중국, 멕시코, 인도 등 4개 개도국들은 개도국에 대한 특별 대우 확대를 요청하는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다. 우리나라는 기존 의장 텍스트의 광범위한 수산보조금 금지에 반대하면서 과잉어획에 대한 영향이 명백한 보조금은 금지보조금으로 규정하되, 나머지 그 영향이 불분명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과잉어획에 대한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경우에만 금지토록 하자는 취지의 제안서를 제출했다.

신임 프란시스 의장, 협상 진전 위해 적극 나서

지난 8년여간 협상을 통해 상당 부분 회원국 간 쟁점 해소가 이뤄졌고, 정치적 모멘텀만 다시 형성된다면 DDA가 언제라도 진전을 거둘 수도 있다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규범 협상, 특히 수산보조금 협상은 이러한 전체 협상 상황과는 다소 괴리가 있는 듯하다. 아직 의장이 수정 텍스트도 내지 못할 정도로 회원국 간 이견 대립이 심하고, 이러한 이견이 최근에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최근에는 수산보조금 협상 진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여러 형태의 고위급 비공식 회의가 제네바에서 활발히 개최되고 있다. 파스칼 라미(Pascal Lamy) WTO 사무총장이 직접 비공식 회의를 주재해 회원국들의 견해를 청취하기도 했고 EU, 인도 등 주요국들이 고위급 회의를 소집해 수산보조금 협상 향후 진전 방향을 협의하기도 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고위급 차원의 회의가 계속될 전망이며, 이와 병행해 규범 협상그룹 차원에서도 분야별로 강도 높은 협상이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7월 규범 협상그룹 의장으로 새롭게 선임된 데니스 프란시스(Dennis Francis) 주제네바 대사는 어려운 협상 상황을 감안, 올 하반기에 분주한 협상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최근까지 규범 협상그룹 회의는 전체 회원국이 모여 논의를 진행하는 전체회의(open-ended meeting) 형식이었으나 신임 프란시스 의장은 이런 전체회의만으로는 협상 진전을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 전체회의와 함께 핵심 국가들 간의 소그룹 회의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의 협상에서는 이러한 소그룹 회의가 중심이 돼 핵심 이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규범 협상은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다. 나라경제

* 이 글은 필자의 개인 의견이며, 주제네바대표부 및 외교통상부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원도연
주제네바대표부 1등서기관
dywon08@mofat.go.kr

지방재정 위기, 지방에만 맡겨도 되나

때 _ 8월 13일 오후 2시
곳 _ KDI 본관3층 회의실
진행자 _ 박완규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참석자 _ 조봉업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장
이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박완규: 최근 지방재정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그 핵심으로 호화청사 신축, 각종 축제 개최, 지방공기업 누적적자 등이 회자되고 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중 총 예산이나 재원 규모가 월등히 큰 성남시가 모라토리엄(Moratorium; 채무지급유예)을 선언해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는데 그렇게 심각한 상황인가?

이효: 우리나라 지자체 중 성남시가 처음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판교특별회계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연도 내 자금수급의 불균형이 나타난 것으로 구조적 문제는 아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다른 자치단체들도 자금수급 현황이나 회계처리상의 전용 문제, 채무부담, 재정압박 정도가 어떠한지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조봉업: 예산규모도 크고 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가 예기



치 않게 모라토리엄 선언을 함으로써 더 상황이 좋지 않은 지자체들이 재정위기에 빠질 어려움에 처한 것 아니냐 우려하게 만든 점이 안타깝다. 실제 성남시가 재정위기에 빠질 가능성은 적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편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지출이 늘어난 부분을 점검하는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박완규: 위기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고 다가올 가능성을 대비하자는 데 뜻이 일치하는 것 같다. 그런 만큼 이 자리에서는 대책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려 한다. 앞서 말씀드렸듯 호화청사 신축,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은 각종 축제 및 국제행사 등 낭비성 사업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조봉업: 정부는 지난 7월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자치단체의 청사신축을 규제하고 필요한 경우라면 내·외부 전문가 검토를 받도록 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을 고쳐 청사 표준면적 기준도 만들고 이를 위반한 경우 교부세를 감액하는 조치를 취한다. 행



이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사나 축제성 사업의 경우 투융자 심사범위를 현행 5억원에서 3억원 이상 행사로 확대했다.

이효: 재정지출에 있어서 소비성 지출, 혹은 낭비성 지출이 재정을 불건전하게 만든다. 이러한 문제요인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 지자체 행사나 민간이전 경비의 경우 총액한도를 설정하거나 사업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사후엔 사업성과를 평가해서 다음 연도 사업을 결정하는 데 활용하는 등 사업심사와 분석기능이 강화돼야 한다.

박완규: 인접 자치단체 간 유사·중복시설 건립도 문제다. 근래 몇 년간 자료를 보니 체육관·문화회관·복지관 등이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건립돼 국가 차원에서 보면 재원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았다.

조봉업: 자치단체 사업의 무분별한 중복투자, 과잉투자를 막기 위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인접 자치단체 간 중복시설을 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이 제도를 내실화해서 유사 낭비성 중복투자를 최소화할 것이다. 사업부처 차원에서도 통제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나 보건복지부가 시설 건립비를 지원할 때 인접 자치단체 현황을 함께 검토하고 분석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효: 옳은 말씀이다.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문화예술회관, 종합운동장 등 공공시설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더욱이 공공시설의 유지비용이 매년 상당하고 여기에 기회비용까지 고려하면 자원낭비가 심각하다. 시설공동 활용방안 등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개선해야 한다.

박완규: 그런데 일부에서는 성남시 사례 이후 정부가 발표하는 각종 대책이 자치권을 침해하고, 지자체를 옥죄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다.

조봉업: 기본적으로 지방재정은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 경제가 좋거나 분권이 강조되는 시대에는 자율성이 더 중시된다. 반면 위기 국면에는 책임성을 중시하면서 접근해야 한다. 자치단체나 시민단체, 야당에서는 중앙정부의 지도감독이 지나치다고 지적한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다. 전에는 간접적·사후적 통제수단을 사용했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 정상화 과정에서 지방채가 급증했다. 이것이 자치단체의 신뢰하락으로 이어지고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다. 특히 일부 과도하게



이효 연구위원

> 소비성 지출, 혹은 낭비성 지출이 재정을 불건전하게 만든다. 이러한 문제요인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 총액한도를 설정하거나 사업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사후엔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등 사업심사와 분석기능이 강화돼야 한다.

채무가 늘어난 곳이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통제가 바람직하다.

이효: 재정파산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다. 실제 재정파산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주민이 입는 피해가 상당하다. 병이 나고 고치는 것보다는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다.

박완규: 지난 6·2 지방선거를 통해 광역자치단체 16곳 중 8곳, 기초자치단체 228곳 중 124곳의 단체장이 교체됐다. 그 결과 전임 단체장 추진사업 또는 정책 뒤집기가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엄청난 예산 낭비와 함께 주민들의 혼란이 예상되는데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하나?

조봉업: 단체장이 교체되면 전임 정책이 재검토되고 수정될 수 있다. 그러나 추진 중인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없이 정치적 또는 임의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매몰비용이나 행정의 연속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기존 정책의 비효율은 개선하되 연속성은 보장돼야 한다. 중앙정부 차원의 개입은, 고유 사무는 자체 예산으로 추진되는 만큼 위법하지 않는 이상 자치단체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겠다. 고유 사무지만 국비가 보조되는 경우 사업변경에 따라 당초 목적이나 취지가 달라진다면 적정 권고, 국비 지원 취소·축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감독이 가능하므로 일방적으로 중단한다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물론 그 전에 슬기롭게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효: 대규모 사업이 상당 경우 진척됐음에도 불구하고 재원확보 등의 측면에서 규모나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면,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객관적 기준에 따라 올바로 평가·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완규: 이번에는 지방공기업 부채 문제를 들여다보자. 지난해 전체 132개 지방공기업 중 부채비율 300%를 넘는 곳이 41개로 31%, 100~300%인 공기업이 45개로 34%나 됐다. '숨겨진 빚'인 지방공기업 부채를 감안하면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은 경우에 따라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는데.

이효: 부채과다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현재는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전체 부채규모와 원리금 상환 내역이 파악되질 않아 자치단체에 미칠 재정위험도도 진단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 단위의 일제 점검을 통해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칠 지방공사, 공단의 부채까지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재정분석제도, 공기업 평가제도를 통합해 살펴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물론 이때도 개별 공기업별로 적자가 생기거나 경영 부실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재정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통합분석과 함께 공기업 사업별, 회계실체별 재정상태를 분석해야 한다.

조봉업: 2005년 이후 각종 개발사업이 확대되면서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이 늘어났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도 원인의 하나다. 그렇다고 지방공기업 부채를 급격히 줄일 수는 없다. 정부로선 지방공사채 발행규모를 재산의 10배 수준에서 6배 정도로 줄이고, 채

> 올해 중으로 개별 자치단체의 채무증감, 세입세출, 재정수지 자금현황, 공기업 관련 재정상황을 상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정상·주의·심각으로 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조봉업 과장

무가 있는 공기업은 5개년 채무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하는 등 부채조정을 위해 힘쓰고 있다. 사실 지난 3월 지방공기업 진단을 실시해 이미 30여개 기업에 청산, 자체개선 명령 등을 내렸다. 그런데 최근 LH사태 등이 불거지면서 다시 공기업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9월 중 그 결과가 나오면 지방공기업 관련해 부채, 조직 및 인사, 재정 등 체계적 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박완규: 방만하고 부실한 재정운용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과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한 자치단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이효: 재정 인센티브 관련해서는 지방세를 적극 징수해 세입실적이 높아지면 교부세가 줄어드는 등의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 이때 세입확충, 세출절감 등 자치단체의 재정운용 노력이 제대로 평가돼야 하는데 이를 평가하는 기준이나 지표가 아직은 미흡하다. 이것을 어떻게 측정해서 재정 인센티브와 연결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조봉업: 효율적 재정운영 단체는 교부세를 많이 주고, 낭비성 지출이 많고 세입확보가 미흡한 자치단체는 감액하려 한다. 보통교부세(편집자 주;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나뉜다. 보통교부세는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이며, 특별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정수입 감소가 있을 때 교부한다.)를 산정할 때 인센티브와 패널티 규모를 늘리고 지방재정분석제도와 전면 연계할 것이다. 자체노력 항목도 10여가지가 되는데 이 비중을 2010년 2.6%에서 5%까지 늘릴 것이다. 이를 통해 2011년부터 세출과 관련해서 행사축제 경비 등을 절감하는 효과도 보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등 세입확충 노력에 대한 재정분석 결과도 반영해 잘하는 자치단체와 못하는 자치단체를 구별할 계획이다.

박완규: 투융자 심사제도,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 조정 등 지방재정 관리제도가 본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보완돼야 한다고 보나?

이효: 제도 간 유기적 연계가 부족하다. 특히 지방채 발행제도, 투융자심사제도, 재정분석제도 등 사전적 · 사후적 수단들이 사업성과와 분리돼 운영되고 있다. 자치단체는 프로그램 단위별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할당, 집행한 다음 그 결과를 평가하고 효율성을 판단해야 한다. 재정운영의 세입과 세출, 목표와 실적, 회계처리, 결산 및 감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단계마다 점검돼야 한다.

조봉업: 그간 사후적으로 운영된 부분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전적 · 사후적 관리를 연계해서 지방재정관리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방채의 경우 지난해 경제회복을 위해 한도액을 풀어줘 그 규모가 늘었다. 현재 약 8조9천억원 수준에서 내년에는 8조3천억원으로 줄일 것이다. 사후적으로 순세계잉여금(편집자 주;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지금은 20~30%에서 적용하는데 30~60%로 늘려 우선적으로 지방채 상환에 활용할 수 있게 의무화한다. 재정분석과 관련해서는 인센티브나 패널티가 약했는데 보통교부세를 직접적으로 연계해서 강화하려 한다. 재정분석 결과를 이전에는 개별 자치단체별로 공시했는데 이젠 정부 차원에서 통합해 주민들이 전국 평균을 비교해 자기 지역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려 한다.

>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은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두 재정시스템이 좀 더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이룰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자주 만나서 현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협조했으면 한다.**



박완규 교수

박완규: 행정안전부는 올 12월까지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어떤 제도이며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어떤 순기능이 예상되나? 외국에도 유사한 제도가 있나?

조봉업: 지난달 발표한 대책 중 가장 눈여겨볼 부분이다. 올해 중으로 개별 자치단체의 채무증감, 세입세출, 재정



수지 자금현황, 공기업 관련 재정상황을 상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자치단체 재정상황을 분석해서 정상·주의·심각으로 분류해 등급을 부여한다. 심각한 자치단체는 지방채 발행을 제한하고 신규사업을 금지한다. 주의 단계의 자치단체에는 자구노력을 먼저 하도록 할 것이다. 일본은 2007년 6월 이 같은 방안이 나왔고, 미국도 연방·주별로 위기관리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이효: 재정파탄을 경험한 국가는 이미 사전경보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일본·프랑스·미국·콜롬비아 등이 해당된다. 재정수지가 2년 연속 적자라든지, 채무 총규모나 원리금 상환기준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위기를 경고하고 대책을 마련한다. 우리는 재정파탄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는 있지만 재정위험지표나 판단기준을 세우기 어렵다. 재정위기 관리를 위한 한국적인 사전경보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박완규: 사전경보시스템이 비단 지방채무에 국한되지 않고 세입·세출을 모두 포괄해 지방재정의 전반적 상황을 진단하고 대책을 준비할 수 있고, 중앙에서도 지원할 수 있게 발전하길 바란다. 이번에는 주민참여에 대해 말씀 나눠보자.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또 주민소송제도나 주민소환제도, 주민의 감사청구 등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제도들이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조봉업: 전국적으로 100여개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다. 이것을 강행규정화해서 형식은 다양하더라도 주민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려 한다. 지난해 전라북도가 주민참여와 관련해서 좋은 사례를 보여줬다. 70개 사업을 선정해 예산편성부터 주민들을 참여시켜 평가가 높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아니면 다시 담당부서가 설명을 하는 방식이었다. 모든 사업이 아니라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부터 시행하게 되고 낭비성 지출도 줄었다. 예전엔 재정운영의 효율적 사례만 알렸는데 이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해서도 우수 사례를 적극 전파하려고 한다.

이효: 더불어 주민참여예산 관련 시민위원회, 조정회의, 토론회 등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진행 과정의 평가시스템도 필요하다. 이들이 재정분석제도, 정부평가제도에 따라 연동되고 주민의 감시와 외부 감사기능도 보완돼야 할 것으로 본다.

박완규: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은 모두 국민의 세금이다. 따라서 두 재정시스템이 좀 더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이룰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자주 만나서 현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협조했으면 한다. 언론에서는 지방재정이 위기라고 표현하지만 현재 상황이 그렇지는 않다는 데 의견의 일치가 있었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고 기존 제도를 정비하며 위기경보시스템 같은 새로운 제도 도입에도 이견이 없었다. 여기서 논의된 여러 의견들이 지방재정 건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나라경제

정리 **표초희** 나라경제 기자

경제정책 해설

44 **일자리 창출 · 서민생활 지원을 강화한다**
2010년 세제개편(안)
기획재정부

46 **2015년 5대 IT융합 강국으로 도약**
IT와 타산업 간 융합 확산전략
지식경제부

48 **중앙과 지방이 함께 일자리 만든다**
'지역 일자리공시제' 본격 시행
고용노동부

50 **철도 · 버스 등 대중교통, 한 곳에서 갈아탄다**
'복합환승센터 설계 · 배치 기준' 제정 · 고시
국토해양부

52 **건물 내 인터넷은 기본, 디지털방송까지 인증제 확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 지침 개정
방송통신위원회

54 **서민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햇살론' 출범**
10%대 금리로 생계자금 · 운영자금 지원
금융위원회



일자리 창출 · 서민생활 지원을 강화한다

2010년 세제개편(안)

정부는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서민의 체감경기를 개선시키는 것임을 감안해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데 가장 큰 주안점을 둔 2010년 세제개편(안)을 지난 8월 23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조세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활력 있는 경제 · 건전한 재정을 이루는 것을 비전으로 설정했고, 일자리 창출 지원, 서민생활 안정, 지속성장 지원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4대 기본방향으로 잡았다.

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 인원에 비례해 적용

우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이다. 고용친화적 세제 구축을 위해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신규 고용창출 인원에 비례해서 받게 함으로써 고용창출형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기업의 투자금액에 대해선 현행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와 같이 7%를 세액공제하되, '고용증가인원×일정금액'(고용증가인원 1인당 1천만원, 청년 고용의 경우 1인당 1,500만원)을 공제한도로 설정토록 했다. 아울러 외투기업 · 지역특구 입주기업의 감면수혜 규모(3년 100%, 2년 50%)를 투자금액의 일정수준(50~70%)으로 한정하고,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일정수준(20%)까지 추가감면을 허용토록 했다. 또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5~30%)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제상 우대 적용되는 소기업 여부 판정 시 업종별 인원 기준은 폐지하고 업종별 매출액 기준만 적용토록 했다.

청소업(3,029개), 경비업(960개), 시장 · 여론조사업(413개), 인력공급업(8,296개) 등 고용유발 효과가 큰 업종을 세제지원 대상 중소기업 업종에 추가했다. 또한 해외 사업장을 폐쇄하고 국내로 복귀해 창업 ·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3년간 100%, 2년간 50%의 소득세 · 법인세를 감면토록 했다. 그리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 소득세 · 법인세를 4년간 50% 감면해 고용여건이 취약한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토록 했다.

둘째, 서민 · 중산층을 위한 지원이다. 저소득 근로자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을 인하(8→6%)해 저소득 일용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한편, 대학생 근로장학금의 소득세를 비과세해 근로장학금 수령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소했다. 또한 경차소유자에게 유류세(교통세,개소세)를 환급(연 10만원 한도)하는 제도의 일몰도 2년간 연장했다.

음식 · 숙박업,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영세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우대제도(30% 추가공제, 결제액의 2→2.6%, 소매업의 경우 1→1.3%)의 일몰을 2년간 연장했다. 음식점 등이 매입하는 농 · 축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편집자 주: 음식업자가 구입하는 농산물 구입가액 중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 적용 시 우대제도[기준공제(3/103)→우대공제(유흥주점 4/104, 법인 6/106, 개인 8/108)]의 일몰도 2년간 연장했다. 또한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특례제도의 일몰을 2년간 연장했다.

중소기업 경영안전 지원을 목적으로 '상생보증펀드'(신 · 기보)에 출연

하는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7%)를 신설했다. 대기업이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해 받은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제도의 일몰을 3년간 연장하고, 납품 중소기업에 현금성 결제를 하는 경우 지원하는 세액공제제도[지급기한 30일 이내: 세액공제율 0.5%(대기업 0.4%), 30~60일: 0.15%] 일몰도 3년간 연장했다.

3D · 녹색기술 R&D 세액공제 추진

셋째, 지속 성장을 위한 지원이다. 현재 일반 R&D 투자는 투자금액의 3~6%(중소기업 25%)가 세액공제되나, LED응용, 바이오제약 · 의료기기 등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 R&D투자에 대해선 투자금액의 20%(중소기업 30%)를 세액공제토록 해 대폭 우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최근 신성장기술로 부상하고 있는 3D 기술, 녹색기술, 차세대 LCD기술, IT융합기술 등을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녹색성장 등 신성장동력 산업 관련 주요 원자재 · 부품 등(46개 품목)에 대해 기본관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방송사업자가 수입하는 디지털TV 방송장비에 대한 관세감면(50%) 제도의 일몰을 2년간 연장토록 했다. 환경보전시설(10%) ·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7%) 투자세액공제의 일몰기한도 3년간 연장했다.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각종 구조조정 지원세제의 일몰기한을 2년간 연장하고, 2011년부터 상장사 및 금융회사에 대해 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이 의무화되는 점을 감안해 관련 「법인세법」을 보완했다. 물류전문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 대비 증가한 제3자 물류비용을 세액공제(3%)하는 제도의 일몰도 2년간 연장했다.

한편, 저출산 ·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 장려를 유도할 수 있도록 다자녀 추가공제를 확대(2자녀 50만원→100만원, 2자녀 초과 시 1인당 100만원→200만원)하는 한편,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 지원을 위해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300만원→400만원)했다.

마지막으로,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다. 의사 · 변호사 · 학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사업자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등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도록 의무화하는 등 과표 양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0개 항목을 중심으로 비과세 · 감면제도를 대폭 축소 · 폐지토록 했다. 일반적 설비투자 지원제도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고, 생산성향상시설 · 안전설비 등 각종 기능별 투자세액공제는 유지하는 등 단순한 보조금 성격의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일자리 창출,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

신규세원 발굴을 위해 미용목적 성형수술(쌍꺼풀수술, 코 · 가슴성형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인술에 한함), 수의사 애완동물 진료용역, 성인 대상 영리학원(무도학원, 자동차학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로 전환(2011년 7월 1일 이후)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기반을 확대할 예정이다.

2010년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증가 효과는 1조9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증가 요인은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1조5천억원), 지역특구 · 외국인 투자기업 세제지원 한도 신설(1,300억원) 등 2조9천억원이고, 감소 요인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신설(5천억원),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1,800억원) 등 1조원이다. 세부담 귀착효과(OECD의 서민 · 중산층 기준(총 급여 5천만원) 가정)는 대기업 · 고소득자 귀착분이 1조3천억원(90.2%)이며, 중소기업 · 서민중산층 귀착분이 1,400억원(9.8%)이다. 정부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4개 세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9월 중 입법 예고, 부처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후 9월 말 올해 정기국회에 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올해 말까지 공포해 원칙적으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나라경제

2010년 세제개편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데 가장 큰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 지원, 서민생활 안정, 지속성장 지원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4대 기본방향으로 정했다.



안택순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taeksoonahn@mosf.go.kr

2015년 5대 IT융합 강국으로 도약

IT와 타산업 간 융합 확산전략

21세기의 최대 화두는 무엇일까? 바로 '융합'이다. 21세기 세계경제는 기존의 다양한 기능·기술·산업 간 창조적 결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융합시대'로 급속히 전환 중에 있다. 특히 IT가 '전 산업의 인프라' 또는 '생산요소'로서 그 역할이 확장되고 건강·재미·감성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니즈(needs)가 다양화되면서, 융합을 통해 만드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는 개인의 삶을 편리하고 가치 있게 바꾸고 있다.

창의적 IT융합 역량을 강화

3D기술과 서비스가 융합되면서 3D영화·3D방송 등은 새로운 경험과 만족을 제공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스마트TV·u-Health 등은 IT기반의 신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IT기반의 융합(이하 'IT융합')은 기존 제품·서비스 및 공정의 혁신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자동차·조선 등 우리 주력산업이 중국 등 개도국의 추격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차별화 수단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스마트폰과 같은 IT융합 제품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근본 원인은 융합을 선도할 창의적 융합 인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우리의 IT융합은 IT활용 또는 IT의 물리적 결합 위주로 이뤄져 새로운 서비스 모델 개발단계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 자동차·조선 등 글로벌 수요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IT기업과의 협력 기반이 부족해 IT융합시장을 외산제품이 주도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EU·일본 등은 도요타와 도시바, BMW와 인피니언 등 자국 자동차 기업과 반도체 기업 간 협조가 활발하지만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간 협조는 아직 요원한 실정이다. 융합 신제품이 개발돼도 이에 대한 시험·인증, 테스트베드, 표준, 통계 등 융합 인프라가 미비한 점도 IT융합시장 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이에 정부는 IT와 자동차·조선 등 타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해 2015년 5대 IT융합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부처 합동으로 2010년 7월 'IT융합 확산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선진국 모방(catch-up)의 IT융합에서 벗어나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창의 IT융합 R&D 프로그램'을 도입해 글로벌 IT융합 신제품의 10%를 우리나라가 창출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융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일반대중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기술개발 과제화해 R&D 자금을 지원할 것이다. 또한 창의적 R&D 결과물의 시장진출이 원활하도록 기획단계부터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시범사업·제도개선 등을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다.

무엇보다도 업계 최대 애로사항인 IT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수요조사를 통해 인력공급이 시급하다고 제기된 의료·기계·건설·조명 분야에서 향후 5년간 780명의 석·박사급 IT융합 인재를 우선 양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 산업 분야에서 2천명의 IT융합 인재를 양성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현장 중심의 IT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폴리텍 대학의 융합형 훈련 직종 확대, 중소기업훈련 컨소시엄을 통한 IT융합 특화훈련 지원, 주력산업체와 IT연구소 간 공동기술개발을 통한 IT융합 연구인력 양성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연구 중심의 교과과정과 공학·인문·경영 등 다학제적 교수법을 채택하는 등 창의적 연구환경을 갖춘 한국형 'MIT 미디어랩'을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1개씩 대학에 조성한다.

IT융합 부품 국산화율, 2015년까지 35%로 확대

또한 IT융합 핵심부품 개발로 2009년 10% 수준인 부품 국산화율을 2015년까지 35%로 확대할 계획이다. 스마트TV · 스마트홈 등 융합제품 간 초고속 무선통신을 지원하는 핵심 네트워킹 부품인 4세대용 베이스밴드모뎀(LTE-advanced)이 2015년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겨냥한 칩 개발을 민관 합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자동차용 시스템반도체는 자동차-반도체 기업 간 컨소시엄을 통해 섀시(chassis) 제어용 등 주변 분야부터 개발을 시작해 점차 생명 · 안전과 관계된 분야로 확대할 예정이다. 융합제품의 두뇌라 할 수 있는 임베디드SW를 육성하기 위해 지난 2월 발표한 'SW 강국 도약전략'도 추진하고 있다.

융합기술은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고 불확실성도 높아 민간의 선제적 투자가 어렵다. 이에 따라 민간의 투자 위험부담을 덜어주고 초기 융합수요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건설 · 섬유 · 의료 · 에너지 · 로봇 · 농식품 · 환경 · 방송통신 등에 IT융합 시범사업을 추진해 2015년까지 85조원 규모의 IT융합 시장 창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요기업과 IT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원도 한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현대자동차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2008년 11월부터 '차량IT혁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조선산업에서도 이와 같이 기업 간 협력을 바탕으로 IT융합을 본격화하기 위해 '조선사-IT기자재업체-선주' 등이 참여하는 '조선IT혁신센터'를 올 하반기 중 구축해 조선 IT기자재 공동 기술개발, e-내비게이션(Navigation) 표준화 등 IT융합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동차 · 조선 산업과 IT기업 간 협력 모델은 앞으로 의료 · 국방 등 다른 산업으로 점차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끝으로 IT융합 인프라 조성에 힘쓸 것이다. IT융합 제품의 원활한 시장 출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시험 · 인증, 표준, 통계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LED를 이용한 광고물 설치 허용, 소방로봇 제품의 시험평가 · 인증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등 관련 부처가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병행해 IT융합제품 신뢰성 검증 체계를 만들고, 범부처 차원의 'IT융합 분야 표준화 대응방안'도 수립해 융합기술 표준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21세기 세계경제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제 IT융합시장을 선점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지난 세기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보다 짧은 기간 동안 세계적인 IT산업을 일으키고 IT인프라를 구축했던 것처럼, 융합을 통해 'IT강국 Korea'가 대한민국의 힘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나라경제

〈표〉 IT와 타 산업 간 융합 주요과제

분야	주요 과제
건설 + IT	3D건축기법(BIM)을 2010년 토탈 서비스 공사에 시범적용하고 2012년부터 500억원 이상 턴키 · 설계공모 공사에 의무화(조달청)
섬유 + IT	2011년 동대문 첨단의류기술센터 내 '디지털의류기술 확산센터'를 개설해, 패션디자이너, OEM업체 등 섬유패션 스트림 간 IT융합 비즈니스 모델 확산(지식경제부)
의료 + IT	스마트케어 시범서비스를 실시(2010~12년)하고, u-Health 산업 종합지원센터(2010년)를 통해 표준개발, 인력양성, 수출정보 제공 등 지원(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농식품 + IT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정밀화, 지능화 구현을 위한 IT융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농림수산식품부) *주: RFID/USN, LED 등 IT기반의 생산 환경제어, 병해충예찰, 품질관리, 이력관리 및 지능형 농업용 로봇 핵심기술, 공장형 식물생산 기술개발 등
환경 + IT	하천관리, 폐기물처리 등 환경관리 선진화를 위한 IT융합기술 개발 및 사업화* 추진(환경부) *주: 하천 IP-USN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예측시스템 구축, 수질 종합 환경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체계 구축 등

정부는 IT와 자동차 · 조선 등 타산업 간 융합을 촉진해 2015년 5대 IT융합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창의적 IT융합 프로그램 강화, IT융합 인력 양성, IT융합 부품산업 육성, IT융합시장 창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IT융합 확산전략'을 발표했다.



김정환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정책과장
kimj@mke.go.kr

중앙과 지방이 함께 일자리 만든다

'지역 일자리공시제' 본격 시행

단순조립형 제조업의 해외이전, 지식정보화, 공장자동화 등의 영향으로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창출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1997년 60.9%였던 고용률이 20 10년 2월에는 56.6%로 낮아졌으며, 고용탄성치(취업자증가율/GDP증가율)도 2002년 0.40에서 2008년 0.28로 감소했다. 그간 정부는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중앙 주도의 일자리 대책을 제시했으나, 각 자치단체별 경제 및 고용 여건의 편차가 커 지역 상황에 맞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소통하면서 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내실 있는 일자리 전략을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효과적인 일자리 전략을 가진 지자체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단순한 '구호 수준'의 일자리 공약을 넘어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모델을 만들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역고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으로서 '지역 일자리공시제'를 도입했다.

'지역 일자리공시제'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 목표와 일자리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중앙정부는 그 대책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지역일자리 성과를 높이는 고용활성화 전략이다.

〈표〉 '지역 일자리공시제'의 세부 내용

【일자리 목표】
- 공통지표: 임기 중 달성코자 하는 연차별 고용률 증가 및 취업자 수 증가
- 개별지표: 각 지자체 일자리 대책의 개별 사업별 목표
  (예: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000개 창출, 취업알선을 통한 000명 일자리 제공 등)

【일자리 대책】
-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대책을 발굴 · 공시
- 투자유치 · 전략산업 육성 등 일자리 창출, 일자리 유지 및 미스매치 해소, 직업능력개발, 일자리 인프라 구축, 유관기관 등 협력네트워크 구축 · 운영 등

지자체장이 일자리 창출 목표와 대책을 공표

'지역 일자리공시제'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 목표와 일자리 대책을 제시하고 중앙정부는 그 대책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지역일자리 성과를 높이는 고용활성화 전략이다. 광역 지방자치단체(16개)의 시 · 도지사와 기초 지방자치단체(228개)의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중앙정부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지자체장은 지역고용심의회, 지역노사민정협의체, 지역고용포럼 등 지역 내 고용관련 기구를 활용해 구체적인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수립해 지역 언론,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올해 12월까지 지역주민들에게 공표하면 된다. 이때 일자리 목표는 고용률 증가, 취업자 수 증가 등 통계조사를 통해 확인 가능한 지표와 함께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별 일자리 창출 목표를 제시해야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일자리 대책은 일자리 창출, 일자리 유지 및 미

스매치(mismatch) 해소, 직업능력개발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대책을 발굴해 공시하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 제공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일자리공시제에 참여하는 지자체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이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8월 말까지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중 원하는 모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각 지역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대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역 고용 전문가를 통해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어 11월에는 '시행계획 경진대회'를 열어 일자리공시제 시행계획이 우수한 지자체를 선발·포상하고 타 지자체에도 널리 알릴 계획이다. 2011년부터는 대책과 추진과정의 개선·보완점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해 일자리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12년부터 매년 추진실적 확인과 함께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모범적인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참여 지자체 및 우수 지자체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발굴사업 개발비 지원 등과 연계해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 시 우대해 지원한다. 또한 지역 일자리공시제에 참여하는 지자체와 우수한 성과를 낸 지자체는 중앙정부 차원의 홍보를 통해 지자체의 노력을 격려하고, 그 사례를 적극 전파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 지자체(장) 및 담당 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예정돼 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일자리 공시제'는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해 성과를 내면, 중앙정부가 그에 걸맞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사진은 경기일자리센터의 홍보 포스터

이와 함께 정부는 통계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주요 고용통계는 지역 수준에서는 시·도 단위까지만 유의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실정이어서 기초 지자체 단위의 일자리 목표 및 대책 수립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기초 지자체 단위의 고용통계 산출이 가능하도록 지역별 고용조사를 연 1회에서 연 4회로 확대 실시한다. 또한 고용률, 빈 일자리 정보, 실업자 정보 등 지역별 고용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군·구 단위의 사업체 고용동향 조사를 연 2회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도 개선해 지역 단위로 다양한 고용보험통계를 산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이미 OECD 선진국들은 산업이나 경제정책만으로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을 깨닫고 지역별 일자리 전략 개발을 주요 정책 목표로 추진해 왔다. 지역 일자리 공시제는 중앙이 일자리 정책을 결정하고 지방이 이를 단순하게 집행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지방이 주도하면 중앙이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주요한 정책적 전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자체 선거 과정에서 제시됐던 많은 일자리 공약들이 보다 현실성 있는 목표와 대책으로 새롭게 재탄생해 고용촉진 및 국가의 균형 잡힌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라경제



이재국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과 사무관
light@molab.go.kr

철도·버스 등 대중교통, 한 곳에서 갈아탄다

'복합환승센터 설계 · 배치 기준' 제정 · 고시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말 지자체와 공기업으로부터 사당역, 용산역 등 총 26개 지역에서 복합환승센터 접수신청을 받았다. 사진은 서울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조감도

교통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94%가 도로에서 발생한다. 자동차 등록대수가 1,800만대에 육박하고, 매년 3% 이상 차량대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도로·승용차 중심의 교통체계를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 중심의 녹색교통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

환승불편으로 대중교통 이용 꺼려

소득이 증가하고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단순히 요금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시대는 지났다. 대중교통이 승용차에 비해 경쟁우위를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빠르고 편리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1개의 대중교통 수단만으로는 최종 목적지까지 갈 수 없다. KTX · 고속버스 등을 이용해 역 · 터미널에 도착하면 지하철 · 시내버스와 같은 접근교통수단을 이용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곳에 도착할 수 있다. 또한 도심에서도 교통수단 간 환승이 수시로 일어난다. 따라서 환승의 편리성은 대중교통 이용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교통수단을 갈아타기 위해 이동해야 하는 거리가 지나치게 길고, 동선도 복잡하다. 엘리베이터 · 무빙워크 등 편의시설도 부족해 대중교통보다 승용차에 대한 선호가 높다. KTX역에서 버스 정류장, 지하철 승강장 등 접근교통수단까지의 평균 환승거리는 358m로 영국 · 일본 등 선진국보다 2배 이상 길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환승 등에 소요되는 시간이 전체 통행시간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교통시설을 교통수단 간 연계라는 네트워크 관점에서 개발하지 않고, 교통시설 이용자의 편의 측면을 도외시한 결과다.

정부는 올해 1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령」을 개정해 복합환승센터의 개발근거를 마련했다. 복합환승센터는 철도역 · 버스터미널 · 공항

등 주요 교통결절점에서 다양한 교통수단을 한 번에 갈아탈 수 있도록 각종 환승시설을 구축하고, 문화·상업·업무 등 사회경제활동을 위한 지원시설을 복합적으로 구성한 시설이다. 지난 7월에는 복합환승센터 설계 및 배치 기준을 제정·고시해 복합환승센터에서 교통수단 간 환승편의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했다. 이 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에서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합환승센터 설계 및 배치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합환승센터에는 철도역, 버스터미널, 공항, 항만 등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교통시설을 집단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교통시설별로 개발 및 운영주체가 서로 달라 교통시설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지 못했다. 이에 교통시설의 집단적 배치로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교통수단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히고, 전국 각 지역에 대한 교통접근성을 향상시켰다.

둘째, 교통수단 간 환승거리에 대한 서비스 등급을 설정하고, 복합환승센터에서는 버스 정류장, 지하철 승강대, 자전거 보관대 등 접근교통수단의 환승거리를 180m 이내(서비스 등급 C 이상)로 대폭 단축했다. 즉, KTX역 등에서 2~3분내에 교통수단을 갈아타고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편리하고 쾌적한 환승을 위해 계단이 있는 구역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환승편의시설의 설계기준을 제시했으며, 복합환승센터 이용자에게 환승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도 갖추도록 했다.

복합환승센터에는 철도역, 버스터미널, 공항·항만 여객터미널 등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교통시설을 한 곳에 배치하도록 했다. 또한 버스 정류장, 지하철 승강대, 자전거 보관대 등 접근교통수단의 환승거리를 180m 이내(서비스 등급 C 이상)로 대폭 단축하도록 했다.

〈표〉 교통수단 간 환승거리 서비스 등급

서비스 등급	A	B	C	D	E	F
환승거리(m)	60 미만	60~120	120~180	180~240	240~300	300 이상

주: 환승거리는 교통거점과 개별 접근교통수단 간 환승거리의 평균값

대중교통 중심 도시개발을 선도

정부는 복합환승센터를 단순히 환승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에 머무르지 않고 교통기능과 상업·문화·업무시설 등이 어우러진 도시의 고밀도 복합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철도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은 사람들이 모이고, 각종 거래가 활발한 교통거점(Hub)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이점을 활용해 복합환승센터를 통해 국가·광역·도시교통의 수송 효율성과 환승편의를 향상시켜 대중교통 활성에 크게 기여하는 한편, 교통결절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설의 고밀도 복합개발을 통해 도시성장과 국토공간구조의 개편을 유도할 수 있는 '대중교통 중심 도시개발'(Transit Oriented Development)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대중교통 중심 도시개발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에 따른 교통혼잡과 환경오염에 대처하기 위해 '선 교통시설 개발, 후 도시개발'의 원칙 아래 교통과 도시개발을 연계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도출된 개념이다. 그 핵심내용은 고밀도 토지이용, 대중교통, 보행 및 자전거 이용에 편리한 도시환경 등을 계획요소로 교통결절점에 대한 고밀도 복합개발을 통해 직주근접형 도시를 조성해 주거, 직장 또는 쇼핑시설에 대한 통행수요를 감축하고, 승용차 이용수요를 대중교통과 보행, 자전거 등 비동력 교통수단에 대한 수요로 전환하는 것이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은 복합환승센터 개발시 환승시설과 연계해 문화·상업·업무 등의 시설을 조성하고, 용적률과 건폐율을 현재보다 최대 15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규정해 대중교통 중심 도시개발을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

정부는 앞으로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교통결절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복합환승센터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나라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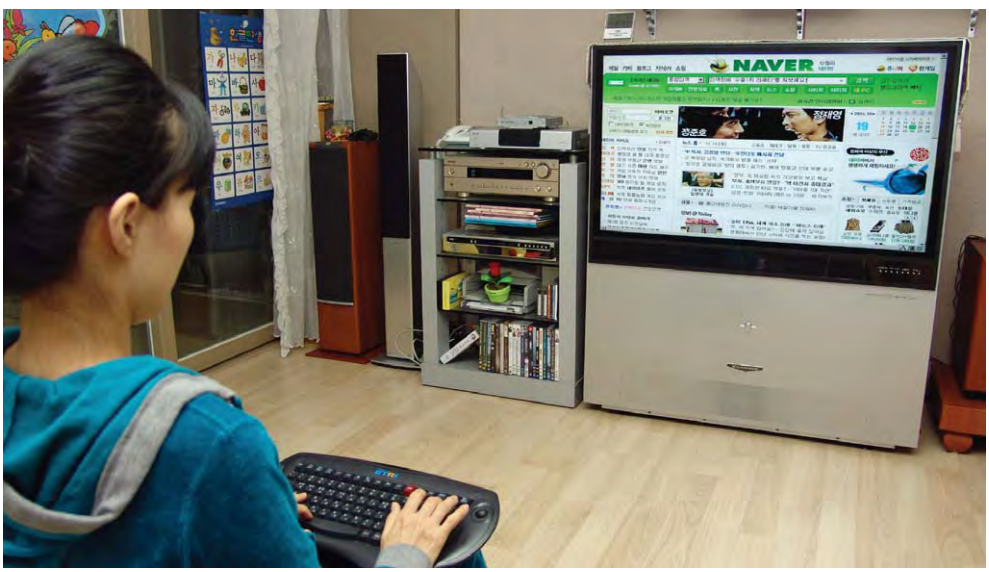


정도현
국토해양부
종합교통정책과 서기관
dohyuni7@korea.kr

건물 내 인터넷은 기본, 디지털방송까지 인증제 확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 지침 개정

세계적으로 산업사회에서 정보와 지식이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는 지식정보사회로의 대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각국은 지식정보사회의 기반이 되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반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초고속정보통신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1995년부터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해왔다.



인터넷에 한정하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가 디지털방송까지 확대됨에 따라 고품질의 3DTV · UHDTV 등 차세대 방송통신 서비스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거실에서 TV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습. 사진제공: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2012년 아날로그 방송 중단으로 디지털방송 환경 무르익어

그러나 KT, SKB, LGU+ 등 기간통신망의 고도화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의 사유재산인 건물의 구내통신망은 회선의 노후화, 설비의 수용 한계 등으로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기간통신망 및 가입자 구간이 아무리 고도화되더라도 구내통신망의 배선과 배관설비 등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최종 사용자인 일반국민은 고속의 정보통신 서비스 품질을 실감할 수 없다. 구내통신망은 통신과 방송 서비스를 가입자에게 전달하는 최종 구간으로 각종 서비스의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인프라다. 또한 구내통신설비는 건축물에 한번 설치되면 변경이 곤란하고 대부분 20년 이상 건축물의 수명과 함께하기 때문에 설계단계부터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표〉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실적(2010년 7월 말 기준 누계)

	예비인증		본인증		비 고
	건수	세대수	건수	세대수	
초고속건물	5,690	446,932	5,690	2,813,082	1999년 4월
홈네트워크건물	267	190,107	395	217,594	2007년 1월

주: 홈네트워크 인프라를 갖춘 초고속건물 1등급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홈네트워크건물 인증을 2007년 1월부터 연계 시행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초고속 인터넷서

건축물에 설치되는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지능형 홈네트워크 등의 이용을 위해 구내통신설비의 권장 기준을 정부가 제시함으로써 건축주의 자율적인 구내통신설비의 고도화를 촉진하고 원활한 정보통신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유도하며, 향후 등장할 차세대 정보통신 서비스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아울러 건설업체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건축물의 정보통신 서비스 수용 능력을 홍보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인증획득 여부를 건물 구입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인증제도는 구내통신선로설비 상태와 성능 검증 등 인프라 위주의 인증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고품질의 초광대역 융합서비스(통신·방송·인터넷 등의 통합 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하는 통합 네트워크)와 3DTV, UHDTV(초고화질TV) 등 미래 서비스 구현, 2012년 아날로그 방송서비스 중단에 따라 디지털방송 수신 및 서비스 이용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인터넷에 한정하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를 디지털방송까지 확대했다.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특등급 건축물'(광케이블 배선 건물)을 대상으로 디지털방송 수신품질 측정 등 디지털방송 심사기준에 대한 추가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초고속정보통신건물'(특등급)로 인증한다.

〈그림〉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인증 엠블럼



인증제도 개선, 디지털방송 품질 보장 초석될 것

이번 인증업무 처리지침의 주요 특징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특등급 건축물'(광케이블 배선 건물)을 대상으로 디지털방송 수신품질 측정 등 디지털방송 심사기준에 대한 추가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초고속 정보통신건물'(특등급)로 인증하는 것이다.

KBS가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에 대한 디지털방송 수신품질 측정과 수신양호 여부 등을 확인하며, 필요 시 지상파 디지털방송 수신품질 향상을 위해 수신환경 개선 등의 제반 조치(중계 안테나 설치 등)를 병행하게 된다. 또한 기존 특등급 건물에서 지상파 디지털방송 수신품질 향상을 위해 디지털방송 수신 설비를 추가 설치할 경우, 재인증할 수 있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로써 다가오는 디지털방송의 전면 시행에 따른 일반국민의 막연한 두려움과 혼선을 방지하고, 향후 고품질의 3DTV, UHDTV 등의 차세대 방송통신 서비스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시행 초기부터 사용하고 있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의 엠블럼을 발급기관 및 발급사유를 명시하도록 변경하여 인증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특등급 건축물'을 대상으로 광케이블을 직접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인출구(직렬단자)를 설치해 실질적인 FTTH(Fiber to the home; 가정 내 광케이블 또는 댁내 광케이블로 불리는 광케이블 가입자망 설치 방식으로 초고속인터넷 설비 방식의 한 종류)가 완성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정부는 이번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개정이 초고속정보통신 서비스와 함께 향후 고품질의 디지털방송품질 보장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방송뿐만이 아니라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사용하는 일반국민들의 고품질 인터넷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줄 제도로 자리매김하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방송통신



허성욱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기획보호과장
rh1017@kcc.go.kr

서민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햇살론' 출범

10%대 금리로 생계자금 · 운영자금 지원



지난 7월 26일 서울 영등포 농협에서 '햇살론' 출시 기념행사를 마친 뒤 진동수 금융위원장(우)과 허태열 국회 정무위원장(좌)이 영등포 농협의 1호 대출자와 상담하고 있다.

서울 충무로의 한 인쇄소에 다니는 A씨는 임신 6개월인 부인의 출산을 앞두고 병원비 등 목돈이 필요했지만 개인신용등급이 7등급이어서 은행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햇살론'이 출시돼 저축은행에서 800만원을 빌릴 수 있었다. 햇살론은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채무를 갚을 수 있지만 큰 소득이나 담보가 없고 신용도가 낮아 소액의 생계비나 운영자금을 고금리로 빌려써야 하는 서민을 위한 대출상품이다. 향후 5년간 약 10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며, 광역자치단체별로 16개 신용보증재단 및 그 중앙회를 보증기관으로 하는 보증부 서민대출 제도이다. 서민전용 대출인 만큼 서민을 주고객으로 하는 농협 · 수협 · 신협 · 새마을금고 · 저축은행 등 전국 약 3,600여개의 서민금융회사에서 대출이 이뤄진다.

주요 지원대상은 저신용 · 저소득 자영업자와 근로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경제지표가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서민의 체감경기는 아직 냉랭하다는 지적이 많다.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경기침체와 매출감소로 영세 자영업자와 근로자들의 금융수요는 커져 가는 데 반해 금융권의 서민대출 규모는 감소하고 있다. 결국 서민들은 사채나 대부업체 등에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등록 대부업체의 시장규모는 2007년 9월 4조1천억원에서 2009년 12월 5조6천억원으로 급성장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일자리 창출 노력과 함께 금융부문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기금을 통해 신용회복지원 프로그

램, 고금리 전환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미소금융 사업도 시작했지만 서민의 금융수요 충족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따라 성실한 경제활동으로 상환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서민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 당정협의를 통해 서민금융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관계 부처, 서민금융회사와 협의를 거쳐 올해 7월 26일부터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을 출시하게 됐다.

햇살론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농림어업인 및 근로자로서 신용 6~10등급(무등급 포함) 또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저소득자를 대출대상으로 한다. 금융소외 서민계층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무등록·무점포 자영업자도 인근 고정사업주, 상인회장 등에게 사업사실 확인서를 받으면 자영업자로 인정해준다. 3개월 이상 계속 재직 중인 근로자라면 정규직은 물론 일용직·임시직도 대출신청을 할 수 있다. 근로소득 미신고자도 고용확인서, 고용주의 영업허가서(사업자등록증), 3개월 이상의 급여이체 실적이 기록된 통장원본을 제출하면 가능하다. 그러나 상업적 원리에 의해 운영되는 만큼 연체·부도 등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하거나, 개인회생·파산절차 중인 경우는 보증대출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출금리는 일정한 상한금리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가 적정한 마진을 얻을 수 있도록 자율결정하게 해 경쟁을 유도했다. 이용자 선택에 따라 3, 6, 12개월 단위로 조정되는 변동금리 방식으로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된다. 올해 8월 기준금리 상한은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은 10.65%, 저축은행은 13.14%로 실제 대출금리는 10%대 초반 수준이다.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의 신용대출을 이용하던 서민들이 햇살론을 이용할 경우 금리수준이 30~40%대에서 10%대로 낮아져 서민의 이자부담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금리가 낮아질 수 있는 것은 대출금액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원리금의 85%를 보증해줘 금융회사의 대손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이다. 서민금융회사도 15%의 대출책임을 갖기 때문에 충실한 여신심사로 부실대출 등 도덕적 해이 발생을 스스로 막는다.

서민과 금융회사 모두 윈윈하는 모델될 것

대출자금은 생계자금, 운영자금, 창업자금으로 구분하고 용도에 따라 대출한도를 달리했다. 생계자금은 최고 1천만원 한도 내에서 3~5년 매월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대출된다. 운영자금은 최고 2천만원 내에서 신용등급, 사업자 등록 유무, 점포보유(임차포함) 여부에 따라 대출한도를 달리 정했고 1년 거치 4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창업자금은 신규 창업자 또는 기존 무등록·무점포 사업자가 점포를 구비해 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경우 대출이 가능하며, 최고 5천만원 한도 내에서 1년 거치 4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출해준다.

지난 7월 26일 시행된 이후 8월 13일까지 3주간 2만4,420건 2,050억7천만원이 대출됐다. 3주간의 1일 평균 대출건수는 1,628건, 대출액은 136억7천만원일 정도로 사업 초반 반응은 양호하다. 햇살론은 그간 고금리 부담으로 힘들어 하던 서민들의 금리부담을 덜고, 운영자금을 구하는 데 애로를 겪던 영세 자영업자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햇살론은 서민금융회사가 서민금융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반성에 기초해 출발했다. 과거 서민금융회사는 담보대출 위주의 관행과 저신용, 저소득층에 대한 여신심사능력 부족 등으로 서민대출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서민금융이라는 본연의 역할 회복을 위해 서민금융회사와 정부가 각각 1조원을 출연해 보증재원을 조성했다. 또한 서민금융회사에 적정마진을 보장해 시장원리에 따라 대출이 이뤄지도록 했고, 활발한 대출로 영업력을 확대할 수 있어 서민은 원활한 자금융통으로 경제활동이 촉진되는 선순환이 기대된다. 햇살론은 서민과 서민금융회사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관계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대출 부실화를 예방하는 한편, 현장점검과 의견수렴을 통해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신속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나라경제



배준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
jbae@korea.kr

이것이 궁금하다!

햇살론이란?

대부업 등에서 30~40%대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저신용 · 저소득 서민에게 10%대의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서민대출 공동브랜드다. 금리상한(7월 기준 취급금리 상한은 상호금융업권이 약 10.6%, 저축은행이 약 13.1% 수준) 내에서 서민금융회사가 금리를 자율 결정하도록 하고, 이용자 선택에 따라 3, 6, 12개월 단위로 조정되는 변동금리 방식(조달원가+스프레드)으로 운영된다. 7월 말부터 향후 5년간 약 10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며, 농협 · 수협 · 신협 · 산림조합 · 새마을금고 ·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가 취급한다.



대출대상은?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저소득 자영업자(무등록 · 무점포 포함), 농림어업인 및 근로자(일용직 · 임시직 포함)를 보증부 대출대상으로 한다. 개인 신용이 6~10등급 또는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대출 대상에 해당하며, 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 계층 및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저소득자도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보증대출 대상이다.

신용평가사 자료로 추정해보면 보증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개인신용 6~10등급의 1,292만명, 무등급 169만명,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저소득자로서 신용등급 1~5등급 579만명이다. 단, 연체 · 부도 등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하거나, 개인회생 · 파산절차 중인 경우 등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350만명은 보증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자영업자: 행상 · 노점상,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문판매원 · 우유배달원 · 학원강사 · 보험설계사 등

– 농림어업인: 농협 · 수협 조합원, 산림조합 조합원, 농림어업인 후계자 등

– 근로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인 일용직, 임시직, 파트타임직(근로소득 미신고자도 가능)

대출자금 용도는?

사업운영자금, 창업자금, 생계자금으로 나뉜다. 먼저, 사업운영자금은 현재 사업을 영위(최소 요구기간 없음)하고 있는 자영업자, 농림어업인에게 1년 거치 4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출한다. 최고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등급, 사업자 등록 유무, 점포보유(임차 포함) 여부에 따라 대출한도를 차등해 신용도와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대출은 방지하게 했다.

〈표 1〉 사업운영자금 대출한도

신용등급	유등록 사업자	무등록 사업자	
		점포보유(임차포함)	점포 미보유(노점 등)
6등급	2,0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7등급	1,700만원	1,200만원	800만원
8등급	1,400만원	900만원	600만원
9등급 이하	1,100만원	700만원	400만원

주: 신용 5등급 이상 저소득 사업자는 대상유형별 최고금액 지원

창업자금은 최고 5천만원 한도 내에서 1년 거치 4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출한다. 사업장 마련을 위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하고, 필요한 경우 5천만원에서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한도 내에서 운영자금까지 지원한다. 창업자금은 신규 창업자 또는 기존 무등록 · 무점포 사업자가 점포를 구비해 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점포구비 목적 이외의 경우는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신규 창업자는 정부, 공공기관 등의 창업교육을 최소 12시간 이상 이수하고 사업장을 확보해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한다.

끝으로, 생계자금은 최고 1천만원 한도 내에서 3~5년 매월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출한다. 3개월 이상 계속해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일용직, 임시직 포함)와 영업 중인 자영업자(무등록 · 무점포 포함), 농림어업인에게 자금을 지원한다.

〈표 2〉 생계자금 대출한도

신용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이하
대출금액	1,000만원	8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주: 신용 5등급 이상 저소득자는 신용 6등급의 대출한도 적용

'나라 밖 경제'는 해외 주요 경제저널의
유익하고 흥미있는 기사를 소개하는 난입니다.

미국경제 지나친 비관도, 유럽경제 지나친 낙관도 금물

Joy, pain and double dips, Economist, August 12th 2010

지금까지 미국이 유럽경제를 부러워한 적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최근 유로존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옅어지자마자 미국 경기회복에 대한 우려가 일면서 유럽을 부러워하는 드문 상황이 일어났다. 그러나 미국경제에 대해 절망하기는 너무 이르며, 유럽경제의 회복세를 확신하는 것 역시 아직은 시기상조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지난 8월 2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州) 찰스턴에서 열린 남부 의원총회에서 미국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완전한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관측가들은 미국이 2분기 2.4%의 실망스러운 GDP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 새로운 경기침체를 향한 출발선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걱정스러운 것은 일자리다. 미국의 7월 신규 일자리는 7만1천개에 불과했다. 이는 생산연령인구의 증가세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수치다. 기업들이 풍부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9.5%에 달한다. 기업들이 적은 수의 근로자로 보다 높은 생산성을 달성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국과 달리 유럽은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다. 브라질, 중국, 인도 등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올 2분기 독일 기업들은 최고의 실적을 기록했고, 실업률은 금융위기 발생 초기보다 약간 낮은 7.6%를 나타냈다.

현재 유럽과 미국은 모두 자신이 강하다거나 약하다는 망상에 빠진 듯하다. 특히 유럽이 경기회복을 자축하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 점에서 시기상조다. 우선 독일을 제외한 유로존 경제는 여전히 취약하다. 스페인은 간신히 플러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실업률은 20%에 육박한다. 독일 경제는 견실한 편이지만, 내수가 아닌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독일 내수시장이 올해 메르세데스 자동차 판매가 감소한 몇 안 되는 시장 중 하나라는 사실은 독일 내수 시장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렇다면 과연 미국이 더블딥에 빠질 위험은 얼마나 될까? 미국의 경기회복이 모멘텀을 잃은 것은 소매점과 도매점의 재고가 늘어나 재고 재축적에 따라 수요 확대가 약화된 데 일부 기인한다. 더욱이 주택시장 붕괴 가능성도 여전히 상존한다. 또한 소비지출 약세를 우려하는 기업들은 투자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은행 대출도 부족한 상황이다. 만약 미국 경제가 다시 경기침체에 빠지게 된다면 기업들은 또다시 재고와 투자, 일자리를 줄일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정적자 및 이에 수반한 추가적인 세금을 어떻게 막을지 보다 명확한 신호를 줄 수 있다면, 미국 기업들은 보유자금을 지출할 의향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美 연준(Fed)에 모든 관심이 집중돼 있다. 지난 8월 10일, Fed는 미국경제의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증권을 국채에 재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는 것은 여전히 타당하며, 디플레이션 조짐을 보인다면 Fed는 훨씬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Fed는 현 상황이 우려는 되지만 공포에 질릴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보다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한다고 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실업률이 지금보다 더 낮았던 시기에도 미국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일자리 공석이 있었다. 지금도 일부 기업들은 근로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기술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불평한다. 따라서 애석하게도 현재 미국의 높은 실업률에는 뿌리 깊은 원인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더 많은 이들이 더욱 오랫동안 실업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다. 하지만 눈앞의 조짐에 근거해 미국의 경기회복이 서서히 멈출 것이라고 예상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리 **조현주** KDI 경제뉴스분석팀 전문원

특별 기고



사회보험료 납부 통합고지서 한 장으로 끝!



류호영
보건복지부
사회보험징수통합추진기획단 국장
hyryu@mw.go.kr

2011년 1월부터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4대 사회보험료를 고지서 한 장으로 통합,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각 보험공단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일원화하고 징수된 보험료를 각 공단에 배정하는 것이다.

내년 1월부터 사회보험 징수통합제 시행

우리나라는 1995년 고용보험의 도입으로 선진국처럼 4대 사회보험의 체계를 갖췄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보험은 각 제도 간 상호연계에 대한 고려 없이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도입, 발전됐다. 더욱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등 4개 기관에서 개별 사회보험을 각각의 적용기준과 징수방식에 따라 운영해 중복적으로 수행해왔다. 그 결과 누적된 비효율, 보험료 부담의 불평등과 보험적용의 사각지대 상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등 새로운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증원 필요성이 현행 사회보험 관리운영조직의 혁신을 요구하게 됐다.

역대 정부마다 사회보험 혁신을 위해 노력했으나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사업 추진,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통합징수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난 참여정부에서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사회보험의 적용·징수업무를 국세청 산하에 징수공단을 설치해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초기 투자비용의 과다, 제도개선의 조기 안정화 필요성, 사회보험공단 노조의 반발 등으로 결실을 맺지 못했다. 현 정부 출범 초기부터 사회보험 통합방안이 재추진됐으며 징수업무만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하는 방안이 2008년 4월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됐다.

정부는 각 사회보험의 유사기능인 징수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각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일원화할 방침이다. 다만 징수통합을 제외한 피보험자 자격관리와 급여업무는 현행대로 각 공단에서 수행한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징수이사 1인을 포함한 2,541명의 징수인력이 본부(2실 6부), 6개 지역본부, 178개 지사에 배치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512명, 국민연금공단 712명, 근로복지공단 317명이 전환배치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환되는 인력의 경우 인사 및 처우에 있어서 차별 등 불이익이 없고 제반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사회보험 징수통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업무를 일괄처리하면 현재 각 공단에서 징수업무를 담당하던 인력의 약 30%가 잔여인력으로 남는다. 이들은 각 공단에서 새로운 서비스 수요 및 기존 서비스 확대에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사회보험 징수통합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

난해 업무재설계(BPR)와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한 데 이어 지난 7월 말 시험운영에 필요한 징수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징수통합정보시스템은 고지자료의 수집, 통합고지서 발송, 보험료 수납 및 체납관리 프로그램 등 응용프로그램 개발(9,090본), 주전산기, 백업용 장비, 네트워크 장비 등 H/W(52대) 설치, 응용프로그램 및 H/W 운용에 필요한 S/W(50종) 장착 등으로 구성됐다. 제도 시행 전 실시여건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징수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한 시험운영을 실시한다. 이 기간 중 각 공단이 갖고 있는 피보험자 및 사업장 등의 자료에 대한 일제 정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의 자료전환 작업도 이뤄진다. 아울러 통합징수 전환인력 선발과 이들에 대한 직무교육이 예정돼 있다.

시험운영은 3단계 5차례에 걸쳐 실제 통합징수가 시행되는 것과 똑같은 환경으로 징수업무 전반에 걸쳐 진행된다. 1단계는 고지, 수납, 체납 등 핵심업무 위주로 8월까지 실시됐으며, 2단계는 11월까지 징수통합 전체업무를 대상으로 시범지사, 지역본부, 전 지사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끝으로 12월에는 응용 프로그램의 성능, 자료전환 환경 등 전체 시스템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 줄어들 전망

사회보험 통합징수와 함께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종 사회보험료의 부과기준이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이 임금총액에서 보수총액으로 변경된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비과세 근로소득이 많은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은 줄어드는 반면, 성과급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기업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보험료가 급격히 증가하는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년 대비 115% 이상 초과하는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초과 보험료를 경감하도록 했다.

둘째, 각종 사회보험의 징수방식이 '월별 부과고지' 방식으로 통일됨에 따라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방법이 '자진신고납부(연)'에서 '월별 부과고지'로 바뀐다. 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피보험자 자격관리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사업장 이동이 잦고 소득변동이 심한 저임금 건설일용직 등의 경우 소득산출이 곤란한 점을 감안해 현행대로 부과 납부하게 된다.

셋째,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적용대상이 확대돼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적용대상이 현행 월 80시간 이상에서 고용보험과 같이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로 달라진다.

넷째, 4개의 사회보험료가 하나의 통합고지서로 발부된다. 그러나 시행 초기에는 영세사업장의 납부 부담과 보험료 체납방지를 위해 각각의 보험료 고지서를 함께 발부할 예정이다. 또 보험료 납부와 관련된 민원인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게 납부유형과 수납방식이 대폭 확대돼 무고지 납부, 편의점 납부, 모바일 및 스마트폰 납부, 민원포털 납부, 신용카드 자동납부 등이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등 통합징수 시행으로 인한 불편함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회보험 통합징수를 통해 개별 사회보험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징수업무 통합에 따른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역기능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한다면 여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여러 장의 고지서를 한 장으로 납부하게 돼 보험료 수납이 간편해진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보험사무가 간소화돼 사무 처리에 드는 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각 공단은 운영비 절감과 인력 활용을 통해 기존 및 새로운 사회보험서비스를 확대 · 강화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국가적으로도 3개 공단의 중복업무를 통합함으로써 징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사회보험 통합징수 시행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불과 4개월밖에 남아 있지 않다. 그동안 징수통합을 위한 제반 준비가 관계기관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로 순조롭게 진행돼 왔다.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남은 기간 동안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해서 전 국민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할 것을 다짐한다. 나라경제

현장은 가깝게, 정책정보는 빠르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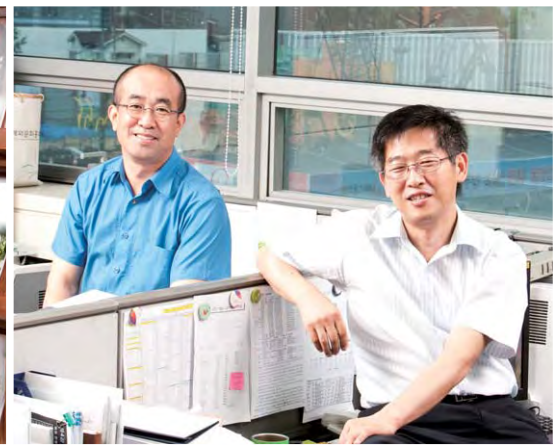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콘텐츠기획과는 정부정책을 알리는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일을 맡고 있다.
'홍보'에 대한 전문성과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노하우가 홍보콘텐츠기획과의 기본기이다.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사람들. 바쁘게 뛰고 있는 그들의 어깨에 정책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들은 바쁘다〉에서 그들이 일하는 현장을 구경해 보실까요?



정영석 과장



(왼쪽부터) 손일영 전문위원과 서남수 사무관

주위를 둘러보자. 출퇴근길의 지하철, 거리의 전광판, 버스 안내판, 가정의 TV, 전단까지 말 그대로 우리는 '홍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그뿐 아니다. 조직과 개인, 개인과 개인 간에도 홍보 활동은 끊임없이 이뤄진다. 홍보는 일방향적인 설득에 머무르지 않고 상대방과 마음을 나누는 쌍방향의 소통을 지향하면서 진화하고 있다.

정부 역시 정책 기획 단계부터 입안, 집행하는 전 과정에 '홍보'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정책고객, 즉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 없이 정책 성공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정책에 대한 이해는 필수, 모두 최고 전문 기량 발휘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콘텐츠기획과는 이름대로 정부 정책을 알리는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일을 맡고 있다. '홍보'에 대한 전문성과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노하우가 홍보콘텐츠기획과의 기본기인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과원들에게는 몇 가지 특별함이 있다.

우선, 정책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필수다. 정부가 직접 발표하는 정책 내용은 물론 언론·인터넷 등의 여론 흐름까지 놓치지 않는다. 이런 기본기야말로 홍보 '포인트'를 포착하는 밑거름이다.

둘째, 우리말은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했던가. 같은 정책이라도 어떤 메시지로, 어떤 매체에 담느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감도가 달라진다. 딱딱한 행정용어를 쉬운 일상용어로 바꾸는 것은 기본. 매체 성격에 따라, 수용자의 눈높이에 따라서도 메시지를 조절해야 할 것이다.

콘텐츠 생산 후에는 더 잘 읽히도록 홍보물의 판형·글자체·표지 등을 결정한다. 사소한 오·탈자도 눈감아주는 법이 없다. 편집 교정지는 수차례 확인을 거듭하면서 완벽에 다가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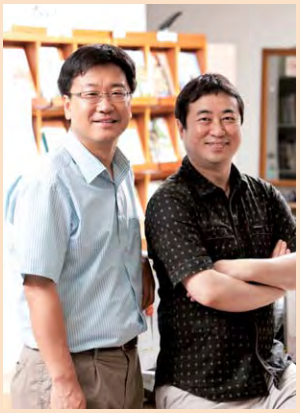
셋째, 현장에서 실력을 쌓은 전문가들이 두루 포진해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 특히 언론사·출판사 등의 현장 경력을 갖춘 과원들은 기사 작성·편집·출판 등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의 업무까지 외부 도움 없이 척척 처리한다.

넷째, 역시 중요한 것은 '현장'이다. 더 알찬 정책 정보를 담기 위해 전화통화로 그치지 않고, 전국 각지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카메라에 담는다.

간행물을 제작할 때는 편집사와 인쇄소에서 야근을 하기 일쑤이고, 배포 후에는 현장을 찾아 제대로 배달이 됐는지 꼼꼼히 확인한다. 이 같은 업무의 특성상 외


(왼쪽부터) 박인권 주무관과 선경철 사무관


전성수 사무관과 김은희 실무관


김재환 사무관과 고동현 박사


채수일 주무관

근과 야근이 잦다.

네 가지 특별함을 가진 홍보콘텐츠기획과의 실제 업무는 어떤 것일까. 네 바퀴로 굴러가는 과의 업무를 좀 더 들여다보자.

정책고객과 막힘없는 소통에 역점

첫째, 간행물 제작 파트는 작은 언론사처럼 움직인다. 매주 초 정책정보지 '위클리공감'을 발간하고, 매월 초에는 만화로 보는 정책정보지 '카툰공감'을, 매월 10일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간행물 '손끝으로 읽는 국정'을 발행한다.

정책정보지라고 해서 마냥 딱딱하고 지루할 것이라는 편견은 버려도 좋겠다.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의 금메달 소식부터 한식 이야기, 녹색여행지 등 시의성 있는 따끈따끈한 정보들을 다뤄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이 외에도 수시로 정부 정책 관련 간행물을 기획, 제작하고 있다. 혹 설이나 추석에 톨게이트를 지나다 '고향가는 길'을 받아본 적 있는가. 그 홍보물이 홍보콘텐츠기획과 간행물 파트의 손을 거친 것이다.

둘째, 간행물 제작 파트가 오프라인 콘텐츠를 맡고 있다면 온라인 콘텐츠 담당 파트가 또 다른 한 축이다. 웹사이트는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코리아'(www.korea.kr). 정부 부처의 보도자료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재가공하는 것부터 기획취재 · 인터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책정보를 다룬다. 정책정보가 방대한 만큼 취재 영역도 전국적이어서 장거리 출장이 잦은 편이다.

셋째, 홍보메시지 및 콘텐츠 기획 파트는 홍보 포인트를 잘 찾아야 한다. 담당자들은 적절한 메시지와 적합한 매체, 최상의 타이밍을 고려해 홍보콘텐츠를 제작한다.

예컨대 지난해 G20 정상회의의 한국 개최 소식이 전해지면서 곧바로 제작에 들어간 간행물 'G20 코리아 더 큰 세계로'는 물량이 부족할 정도로 호응이 좋았다. 관련 콘텐츠가 드물던 때 전문가 필진을 구성해 G20 정상회의 유치의 의미와 과제 등을 다룬 것이 통했던 것이다.

넷째, 행정 파트는 행정 업무와 함께 배포 관리도 맡고 있다. 아무리 좋은 홍보물이라도 주인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담당자들은 홍보물이 적재적소에 비치되도록 배포 계획을 짜고, 배포 후에는 일일이 점검에 나선다. 각종 간행물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이들의 교통정리는 빠져서는 안 되는 우리과 업무다.

홍보콘텐츠기획과의 네 바퀴는 쉬지 않고 힘차게 굴러간다. 정책정보를 싣고, 정책고객과 막힘없는 소통을 위해 한걸음 한걸음. 나라경제

글 **박주선** 주무관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심리학'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의 심리를 알려는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심리학 지식을 습득하는 문제가 아니다. 심리학 지식을 활용해 일상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심리학 교육은 심리학 지식 자체가 아닌 바로 '한국인의 심리코드'를 알려주는 것이다.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보낸 이메일을 받았다. 국민이 심리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하는 좋은 정책을 수립하려는 취지에서 '심리학으로 배우는 지도자 과정'을 만든다는 계획안이었다.

우리 사회는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가지거나 서로 소통하기 힘들고, 갈등이 심하다고 느낄 때마다 심리학을 필요로 한다. 아니, 심리학을 활용한 어떤 해법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중앙공무원교육원의 교육계획도 이런 의도가 반영된 듯했다. 하지만 '심리학적 접근'을 어떻게 알고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심리학적 접근일까?

'선진국형 매력적 리더십 과정'이라고 소개된 교육내용의 1부는 '심리학 바로 알기(개론)', 2부는 '성격이해를 통한 인간심리의 이해'다. 긍정심리학으로 자기관리와 인간관계의 이해도 학습한다. 결국 '심리학적 접근'은 심리학 책의 개념과 이론을 배우고 심리검사에 대한 지식을 학습하는 것이었다. 공무원들을 어설픈 심리학 교수로 만들려는 의도인가?

공무원들이 국민의 감정과 정서를 잘 이해하고 알아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것이 심리학 개념이나 이론, 또는 심리검사 내용을 배우는 것으로 가능할까? 이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이 아닌 형식적인 탁상공론의 시간 때우기식 교육이 될 위험이 크다. 이메일에 언급된 교육방향은 '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핵심 덕목을 배우고 실천하는 선진국형 매력적 리더십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분명 '국민의 정서·감정을 이해함과 동시에 소통의 힘을 기르고', 이러한 소통의 힘으로 '정부 정책의 대국민 이해를 도모하려고 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훌륭한 방향이지만 내용은 시험용 교육, 자격증 따기 교육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리더십을 배운다'는 시도는 혁신적이었지만 교육과정을 만드는 사람들은 교육과정 자체를 시험에서 정답 맞추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심리학을 통해'라는 말이 '심리학 지식 자체를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한 문제에 대해 '인간심리와 행동의 방식들을 고려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라는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정말 했어야 하는 것은 '심리학적 지식을 잘 활용하는 전문가를 통해' 교육받게 될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 국민의 정서·감정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지'에 관한 방법을 찾는 것이었어야 했다. 그렇게 찾은 방법을 공무원들에게 가르쳐 줘야 한다. 각각의 문제에 스스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을 계획해야 한다. 심리학 지식을 가르친다고 해서 스스로 국민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지는 않는다. 심리학 지식이 비교적 많은 심리학 교수들도 정작 주위 사람들에 대한 이해 수준은 평균적인 사람 수준 이상이 되기 힘들다는 잘 알려진 심리학계의 상식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의 심리를 알려는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시하는 것, 남들만큼 아니 남보다 더 성공할 수 있는 방법, 그것도 아니라면 자신의 성격이나 삶의 문제를 잘 알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 싶어한다. 이것은 단순히 심리학 지식을 습득하는 문제가 아니다. 심리학 지식을 활용해 일상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심리학 교육은 심리학 지식 자체가 아닌 바로 '한국인의 심리코드'를 알려주는 것이다. 나라경제



황상민
서울대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에서 심리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그는 국내 소비자 심리학 분야의 권위자다. 저서로는 「디지털 괴짜: 미래 소비를 결정하는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대통령」, 「대한민국 사이버 신인류」, 「너 지금 컴퓨터로 뭐하니」 등이 있다.
swhang@yonsei.ac.kr

관광 · 레저산업이 고용창출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관광산업이 매출액 10억원당 유발하는 취업자 수는 52.1명으로 제조업의 2배, IT산업의 5배에 달한다. 관광 분야 취업자 중 청년층 비중은 35.1%로 전체 취업자 청년 비율인 16.8%의 2배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외래 관광객 1,200만명 유치, 4만여개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관광 · 레저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했다. 『나라경제』는 세부 정책 계획과 전문가 제언을 들어본다. 매력적인 관광지도 독자들께 소개해 드린다.

관광 · 레저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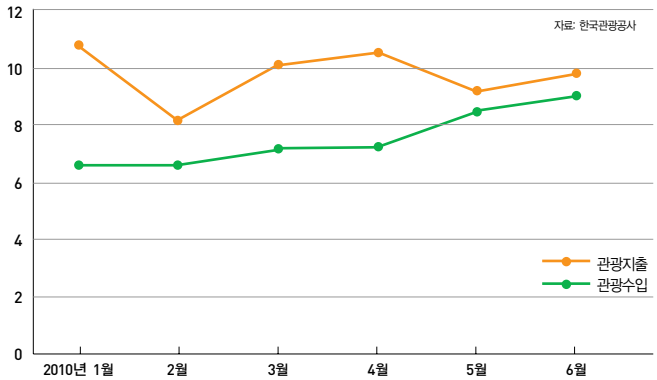


2019년 관광산업이 세계 GDP의 9.5% 차지한다

아무리 매력적인 관광지라도 홀로 존재할 수 없다. 한 가지만의 볼거리를 위해 먼 거리를 달려오지는 않는다. 먹을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쉴거리가 복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이것이 관광레저산업이 고용창출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다.

관광산업 매출액 10억원당 유발되는 취업자 수는 52.1명으로 제조업의 2배, IT 산업의 5배에 달한다. 또한 관광 분야 취업자 중 청년층 비중은 35.1%로 전체 취업자 청년 비율인 16.8%의 두 배에 달한다.

〈표〉 2010년 상반기 우리나라 관광수지 추이 (단위: 억달러)



이뿐인가. 미래학자 존 나이스빗(John Naisbitt)은 '관광은 공해유발이나 환경파괴가 거의 없는 고도의 감성적 휴먼 서비스이자 하이테크 산업'이라고 정의했다.

세계관광기구(UNWTO)의 통계에 따르면 2008년 국제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1.9% 증가한 9억2,200만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2019년까지 관광산업이 세계 GDP의 9.5%로 성장하고, 세계 총 고용의 8.4%가 관광관련 산업에 종사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관광산업이 국가 전략산업으로 인식되면서 관광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유치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세계관광기구는 2018년까지 동아시아 · 태평양 지역이 유럽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규모의 관광객을 유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럽은 2008년 4억8,79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1위를 고수했지만 0.1%의 부진한 성장을 보인 반면,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은 연 9.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올해 상반기(1~6월) 관광수입은 45억 2천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8.9%가 감소했고, 관광지출은 58억 4천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49.8%나 늘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발길을 유도할 만한 관광 킬러 콘텐츠가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한류 스타를 활용한 이벤트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한류상품을 내실 있게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오는 11월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관광상품과 연계하는 방안과 특급 호텔의 한식당 확대, 중저가 호텔 활성화, 막걸리 체험 관광상품 개발, 호텔 부과세 폐지 등도 외래 관광객 유치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2014년까지 외래 관광객 1,200만명을 유치하고, 국민 1인당 국내 관광일수를 14일로 증가시키며, 4만 여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세부적인 관광산업 육성전략을 제시했다.

관광산업이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부문에서의 노동생산성 증가와 근로조건 향상이 동시에 충족돼야 한다. 관광과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서는 서비스 품질 · 창의성이 타 업종에서보다 더욱 중요하다. 보다 우수한 인적자원이 관광사업체에 취업, 근무해 생산성 · 혁신성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나라경제

안선경 나라경제 기자

1,200만명 외국관광객 유치하면 일자리 4만개 창출된다


춘천과 가평의 경계에 위치한 남이섬은 드라마 '겨울연가'를 통해 이름을 알린 뒤 해마다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만들어내면서 성공한 관광지가 됐다.

관광산업은 경제성장 기여도와 외화 획득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남이섬은 불과 10년 전만 해도 먹고 마시고 노는 야유회용 유원지로 직원이 26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금은 민간의 창의적 기획과 드라마 '겨울연가'로 인해 울창한 숲과 공연 · 창작 문화가 공존하는 관광명소로 탈바꿈했다. 일본 · 중국 관광객의 필수 관광명소로 남이섬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연간 총 25만명에 육박한다. 2001년도 입장객 28만명, 직원 26명이던 곳이 2009년에는 총 입장객 200만명을 넘어섰고, 직원 139명에 이르는 대표적인 고용창출기업으로 거듭났다.

관광산업의 외화가득률 88%, 휴대폰 · 반도체보다 높아

관광산업의 외화가득률은 88%로 휴대폰 52%, 반도체 43%에 비해 월등히 높다. 또한 관광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0억원 당 15.5명으로 제조업 9.2명에 비해 크게 높아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효과도 높다. 때문에 관광산업은 고용 없는 성장이 우려되는 우리 경제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소득수준 상승에 따라 관광에 대한 국내외 수요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2001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세계관광수입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중국인의 해외 관광은 연 19%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선진국의 경우 소득 2만달러를 기점으로 승마 · 요트 등 레포츠산업이 급성장한 것을 볼 때 우리나라도 향후 다양한 관광 · 레포츠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외화 획득으로 국내 경제를 견실하게 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증가하는 관광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관광산업의 육성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국내 · 외적 위상은 아직 낮은 수준에 있다. 경제규모, 국가경쟁력에 비해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과 위상이 취약한 실정이다. GDP 규모는 세계 15위인 데 비해 관광산업 경쟁력은 31위이고, 관광산업이 국내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다. 입국자수보다 출국자수가 많아 최근 5년간 연평균 60억달러의 관광수지 적자가 발생했으며, 올해는 7월까지 18억달러의 관광수지 적자를 기록

하고 있다. 1인당 국내관광 일수가 연간 10일 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부족한 편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한국' 하면 떠오르는 고유한 대표 관광 상품이 부족하다. 자연 · 문화자원은 중국 · 태국 등에, 테마파크 · 카지노 등 인공자원은 싱가포르 · 홍콩 등에 밀리는 상황이다. 또한 외국관광객이 집중되는 수도권 지역에 중저가 숙박시설이 부족해 외래 관광객 및 국제행사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은 전체 중국인 해외관광객 약 4,800만명의 2.8%인 134만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급증하는 중국 관광객을 선제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일본 등을 비롯한 주변국의 유치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은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높여 외래 관광객 유치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관광내수를 진작해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관광명소를 개발하고, 숙박 · 교통 · 안내체계 등 관련 인프라를 우선 확충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의료 · 쇼핑 · 전시컨벤션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이러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2014년까지 1,200만명의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고, 4만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특색에 맞는 으뜸명소 선정 · 육성

이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정부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경쟁력을 갖춘 지역을 지역관광 으뜸명소로 육성한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 중에서 지자체와 전문가 의견, 지역발전 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4개소 내외의 '으뜸명소'를 선정하고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문화콘텐츠, 테마파크, 생태관광, 도시 관광, 역사문화 등 지역특색을 감안해 개발하고, 관광프로그램, 인적 · 물적 인프라, 홍보 · 마케팅을 지원할 것이다. 선정된 지역관광 으뜸명소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차별화된 체험상품과 관광콘텐츠를 확충하고, 관광안내소, 문화관광해설사와 통역가이드를 우선 지원하며, 여행상품의 개발 · 판촉과 해외홍보도 적극 지원하려 한다.

둘째, 수도권 지역의 중저가 관광호텔을 육성할 것이다. 외래관광객 실태조사를 근거로 판단할 때 2012년 외래관광객 1천만명 유치를 목표로 할 경우, 외국관광객의 약 60~70%가 숙박을 원하는 수도권 지역 관광숙박시설이 1만6천여실 부족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 지역의 지자체와 관련 정부부처와 협조해 관광호텔 신규건립 확대를 위한 민간의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독특한 체험이 가능한 한국형 숙박시설인 고택 · 종택 등 한옥체험 숙박시설을 현재 162개소에서 2014년까지 300개소로 확대할 것이다.

셋째, 증가하는 일본 · 중국 관광객에 대비해 관광안내 도로표지판에 일어 · 중국어 등의 선택적 병기가 가능하도록 안내체계를 개선하려 한다. 우수한 관광통역안내사의 확충과 통역 안내의 질적 제고를 통해 외국관광객의 만족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한국관광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는 저가 방한여행상품을 근절해 건전한 여행문화 정착도 유도할 것이다. 최근 관련업계도 자발적으로 저가, 덤핑 자제 자율결의와 함께 인삼제품 상한가격 설정 등에 동참하고 있다. 관련 규정 위반 여행사에 대한 중국 전담 여행사 지정해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중국관광객의 불편사항 해소 및 쇼핑 인증제 실시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 대표 관광지와 음식, 유명인사 등 테마별 스토리텔링을 활성화해 관광지의 매력을 한층 제고할 계획이다.

그러나 관광산업을 키우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국인에 대한 우리 국민의 진정한 환대이다. 공항 · 음식점 · 상점 등 주요 관광객 접점에서 공정한 상거래와 환대 서비스가 이뤄진다면 더 많은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찾을 것이다. 필자는 약 10년 전 브라질 여행 때 본 브라질 사람들의 행복하고도 환한 웃음을 아직 잊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브라질을 제일 인상 깊은 나라 중 하나로 남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하다. 관광종사자의 서비스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관광업계 종사자와 국민 그리고 정부간 협력을 통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한다면 대한민국이 관광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나라경제



이정미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사무관
eljm92@korea.kr

관광 · 레저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한다 _ 국토해양부

소득 3만달러 시대, 해양관광레저산업이 선도한다

우리나라는 국토면적 대비 해안선의 길이가 세계 최장이다. 또한 3천개가 넘는 크고 작은 섬과 세계 5대 갯벌 등 우수한 해양관광 자원을 보유해 해양관광레저산업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해양관광레저라고 하면 여름철 해수욕장을 떠올리지만, 사실 해양관광레저는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발전하는 선진국형 관광산업이다. 우리나라에도 조만간 해양관광산업 발전의 결정적 모멘텀이 도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까지 전국 45개 마리나항만 개발

정부는 해양관광레저 육성을 위해 우선 해양관광 자원을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 연안지역에 해양레저체험장, 해중관광시설, 해양낚시공원과 같은 해양친수공간을 조성해 해양관광의 자원화를 유도한다. 스쿠버다이빙 교육 · 편의시설을 조성해 해중레저를 활성화하고 약 6만명으로 추산되는 해외 다이빙여행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고자 한다. 해중생태자원을 활용한 해중전망탑시설 조성을 지원해 해저관광 개발도 본격화한다. 도보관광 수요에 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연안에 '해안누리길' 52개 노선을 1차로 선정한 바 있는데, 이를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축제와 연계한 이야기가 있는 명품 걷기여행 상품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장에 설치되는 아쿠아리움, Big-O(해상전시시설) 등 전시시설을 박람회 개최 후 해양관광 거점시설로 활용해 여수박람회가 남해안 해양관광레저 활성화의 결정적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다. 백령도~독도 간 주요 도서를 순례하는 해양영토탐방 프로그램을 상품화하고, 갯벌 등 철새도래지를 대상으로 한 탐조관광 등 테마여행상품도 개발할 방침이다.

세계 해양산업시장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해운산업(36%)과 해양관광레저산업(17%)이 해양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요트와 보트를 중심으로 한 해양레저산업은 2005~2010년까지 연평균 7.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말 현재 해양레저기구 조정 면허자가 9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는 등 해양레저의 잠재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이러한 해양레저산업에서 마리나시설(marina)은 바다낚시, 스킨스쿠버, 도서관광, 경관감상 등 해양관광의 중심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2019년까지 27개 신규개발 마리나항을 포함해 43개소의 마리나 항만을 개발하는 「국가 마리나개발 기본계획」이 올해 1월 수립돼 해양레저 시설의 중복투자와 난개발을 방지하고 해양레저산업 인프라를 확충하는 전기가 마련됐다. 마리나시설의 기능은 요트 · 모터보트 등 레저보트 운항과 계류 기능에 국한되지 않는다. 배후부지에 레저장비개발 · 수리, 전시 · 보관 · 임대 및 교육시설, 그리고 리조트시설과 같은 부대 서비스시설을 고루 갖춘 해양레저 클러스트로 조성된다.

현재 운항 중인 레저보트나 요트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22개사 정도에 불과한 레저선박 생산업체도 대부분이 외국기술과 기자재에 의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간 정부는 패밀리보트 등 보급형 해양레저선박 기술을 개발해 민간에 이전한 바 있으며, 소형선박 선외기 국산화 기술과 유람스포츠형 요트 핵심요소기술을 중소조선연구원 등과 함께 개발 중이다. 우리나라의 축적된 대형조선 기술력과 자동차 생산능력을 결합해 고부가가치 해양레저용 장비를 개발함으로써 470억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세계 레저장비시장을 개척해 나갈 것이다.

연말까지 '크루즈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크루즈(cruise) 산업은 관광뿐만이 아니라 해운 · 조선 · 항공 · 선박인테리어 등 연관산업 효과가 매우 큰 대표적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1990년대 초반 전세계 500만명

안팎에 불과했던 크루즈 이용객은 2000년 이후 1천만명을 상회하는 등 연평균 8% 이상의 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 특히 2015년 크루즈선 이용 관광객이 100만명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한·중·일 동북아 지역은 크루즈 시장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올해 약 20만명의 외국인 크루즈 관광객이 부산·제주항 등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북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지난 5월 16일 '2010 울산컵PWA진하세계윈드서핑대회'가 열린 울산시 울주군 진하해수욕장 앞바다에서 선수들이 바다 위를 시원스레 질주하고 있다.

우선 외국 크루즈선박의 국내 기항을 적극 유치해 우리나라를 동북아 크루즈시장의 대표 기항지로 육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지자체·관광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템플스테이(Temple Stay), 다도(茶道)·도자기체험과 같은 전통문화를 소재로 한 고품격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외국 크루즈관광객의 출입국 심사절차 간소화와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크루즈선 운항 촉진을 위한 조세감면 지원방안 등을 관계당국과 협의해 우리나라 선사의 크루즈산업 참여도 적극 유도해 나갈 것이다. 그 밖에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적 국제크루즈선사에 대한 선박확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외국인선원의 고용범위 완화, 크루즈인력 양성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는 크루즈산업 활성화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부산 영도와 여수 신항에 크루즈 전용부두가 확보돼 있으나 증가가 예상되는 크루즈선 여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136억원을 투자해 2020년까지 제주와 인천 등 6개 항만에 8만톤급 크루즈선박이 드나들 수 있는 전용부두를 개발하려 한다.

해양레저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 증대와 해양레저 활동에 대한 접근기회 확대를 통한 해양레저 수요 확충이 전제돼야 한다. 이에 정부는 먼저 해양레저 교육을 통해 해양의식을 고취하고 해양레저문화를 성숙시키고자 한다. 전국해양스포츠제전 등의 레저스포츠 행사 개최를 확대해 해양레저 문화 대중화를 유도하는 한편, 2010년 들어 현재까지 1만2천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참여한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어린 시절부터 바다와 친숙해지는 친수문화를 조성하고 해양 인적자원을 적극 양성할 계획이다.

바다는 늘 우리에게 꿈과 낭만을 주는 동경의 대상이다. 삶의 터전이기도 하며 답답한 마음을 뚫어주고 새로운 희망을 찾게 해주는 휴식의 공간이기도 하다. 정부는 다가올 국민소득 3~4만달러 시대에 대비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인 해양관광레저산업의 기반을 확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다. 나라경제



손명수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과장
msson@mltm.go.kr

주한 외국인 체험단

맷돌 갈고 새끼 꼬고 …
"농촌 체험 너무 재밌어요"

"배고프고 척박했던 시절을 잊지 않으려고 마을 이름을 '보릿고개'라고 지었다. 어려웠던 시절의 삶을 돌아보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양평 보릿고개 마을에 들어서자 이상용 마을위원장이 인사말을 건넨다. 그러자 곧이어 한 번은 영어로, 또 한 번은 일어로 바뀌어 전해진다.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이는 외국인 학생들. 인사말에 호응하는 박수가 뒤늦게 터져 나온다.

지난 8월 18일 양평 보릿고개마을을 찾은 외국인 학생들은 약 70여명.

연세대 어학당에서 여름 어학코스 중인 영어권, 일어권 학생들이 반반이다. 이들은 한국의 농어촌 생활을 체험할 기회가 있다는 소식에 하루 수업을 뒤로 했다. 이름하여 'Rural 20.'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해 말부터 야심차게 준비한 외국인 대상 관광프로젝트다. 일반 농어촌관광상품은 도시민을 대상으로 해 성수기에만 집중되지만 외국인의 경우 시기와 별개로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먼저 외국인 학생들을 타깃으로 삼은 것은 이들이 본국에 돌아가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을 알려주길 바랐기 때문이다. 올 초 지자체의 추천과 심사, 전문가 추천과 협의과정을 거쳐 한국적 경관과 멋을 보유한 관광지 스무 곳을 선정했다. 올 11월까지 총 2,100명의 외국인 체험단이 각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다.


짚풀로 새끼꼬기 체험하는 모습

보릿고개 마을에서 먹는 양푼비빔밥

이날 보릿고개마을에서의 첫 체험은 두부 만들기.

마을 아주머니들이 덩그러니 놓여진 돌덩이 앞으로 가더니 불려놓은 콩을 넣고 학생들에게 돌려 보라 했다. '맷돌'이라는 이름을 가르쳐주자 낯선 발음을 따라 해보는 학생도 있었다. 갈아진 콩에 소금물을 넣고 끓이자 고소한 냄새가 퍼졌다. 아주머니는 소금물을 급히 넣으면 두부가 단단하고 맛이 없어진다면서 외국인 학생들에게 큰 주걱을 건넸다. 학생들은 신기한 듯 돌아가며 콩물을 저었고 곧 따끈한 연두부가 그릇에 담겼다. 때마침 동네 어르신들이 '코리언 라이스 와인'이라며 막걸리를 가져오셨다. 연신 맛을 보던 학생들의 얼굴이 금세 불그스레해졌다.

다음 체험은 새끼 꼬기. 할아버지가 능숙한 손놀림으로 시범을 보였다. 외국인 학생들은 약속이나 한 듯 무릎을 꿇고 새끼를 꼬았다. 포즈는 그럴 듯했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니 제대로 새끼가 꼬아지지는 않는지 용을 썼다. 그런 모습을 학생들은 연신 카메라에 담았다. 점심식사는 양푼비빔밥. 밥과 고기, 나물, 고추장 등을 원하는 만큼 덜어먹을 수 있게 상이 차려 졌다. 듬뿍 넣은 고추장이 맵다며 밥을 더 넣어 비벼먹는 학생들 덕에 어느 틈에 밥솥이 비었다. 일본 학생 사키야마(21세, 여) 씨는 "여기 오기 전에 비빔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맛이 좋고 값도 싸고 다른 재료도 넣어 먹을 수 있어서 좋다"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렸다.

'Rural 20' 프로젝트의 대상은 주로 영어·중국어·일어권 학생들이다. 어느 나라든 통역사가 준비돼 있지만 관광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언어권별로 그룹을 짠다. 김정은 한국농어촌공사 계장은 "이런 관광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대학과 외국인기관에 홍보브로셔를 보내고 연락도 했다. 이젠 홈페이지 문의가 많다. 온라인에서 신청도 가능하다. 지금은 학생 위주지만 앞으로 외국인 교사나 주한 대사, 기타 외국인 관광객까지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한국 전통 떡 인절미를 만들기 위해 떡메치기를 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의 표정이 밝다.

오후 첫 체험은 트랙터를 타고 마을 어귀를 도는 것이었다. 20분도 채 안 되는 짧은 탑승시간이었지만 낮은 담장 사이로 한눈에 가족 같은 마을 분위기를 읽을 수 있었다. 8월의 뜨거운 날씨에 힘들다는 일본인 학생들의 불만이 나오자 잠깐 계곡에 내려갈 시간도 줬다.

물놀이에 출출해진 허기를 달래는 데는 인절미가 딱이었다. 인절미 만들기 체험에 앞서 이름의 유래가 먼저 소개됐다. 어떤 사람이 찹쌀로 임금께 정성껏 떡을 만들어 바쳤는데 그 맛이 좋아 누가 바친 것인지를 물었지만 성이 임씨였다는 것밖에 알 수 없었다. 그 발음이 변해 임절미가 인절미가 됐다. 하지만 외국인 학생들에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모양이다. "찹쌀? 차쌀? 밥 만드는 쌀 아닌가요?"

떡을 만들기 위해 쪄낸 쌀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랐다. 지켜보던 학생들에게 떡메가 쥐어졌다. 요새는 기계로 하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직접 사람들이 떡메로 쳐서 떡을 만들었다.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떡메를 힘껏 들어 올려 내리쳐보지만 애꿎은 나무도마만 두들기는 학생도 있다. 다된 떡은 콩고물이 묻혀져 숭덩숭덩 먹기 좋게 잘렸다. 처음 인절미를 맛본 캐럴린 포드(38세, 여) 씨는 "따듯하고 부드럽고 약간 달콤하다. 떡메를 치는 건 힘들었는데 밥알이 부서져서 금방 끈적한 떡이 됐다"고 신기해 했다.

농가소득 높이고 일자리도 쑥쑥

마을에서의 체험을 마친 이들은 친환경농업박물관으로 이동했다. 양평의 역사와 전통문화는 물론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친환경 먹을거리를 재배하는 과정이 소개됐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아람 롯데관광 대리는 "관광지를 선정할 때 인프라, 참여도 등 여러 요소가 평가되지만 그래도 마을마다 약간씩 수준이 다르다. 이곳은 비교적 프로그램이 잘 짜여져 있고, 마을 주민들과 협조도 잘되는 편"이라며, "매년 스무 곳이 선정되는데 올해 선정된 곳은 내년에 될 수 없다.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찾을 수 있게 농어촌관광상품을 표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과연 'Rural 20' 프로젝트가 일자리에 도움이 될까. 하지은 농림부 농촌사회과 사무관은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해보니 관리와 진행에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하다. 물론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맡게 되는데 농사를 지으면서 함께 할 수는 없다. 사업 초기 단계라 눈에 띄는 성과는 없지만 앞으로 농가소득에도 보탬이 될 것이다. 농어촌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프랑스에서 온 줄리앙 서(25세, 남) 씨는 "한국 농촌체험이 처음인데 정말 재밌었다. 프랑스의 시골과도 많이 다르다. 한국에 온 지 2년 됐고 다음 주 돌아가는데 이제야 이런 곳에 오게 돼 아쉽다"며 서울행 버스에 올랐다.

표초희 나라경제 기자

우포늪, 세계가 주목한 생명의 보고(寶庫)



경남 창녕의 우포늪은 국내 최대의 자연 늪지로 1998년 국제습지조약 보존습지로 지정됐다. 우포, 목포, 사지포, 쪽지벌 등 4개의 늪을 뭉뚱그려 우포늪이라 부른다.

1억 4천만년. 도저히 상상하기조차 힘든 시간을 묵묵히 살아 온 국내 최대의 자연 습지인 우포늪은 '생태계의 고문서', '살아 있는 자연사박물관'이다. 한반도가 형성될 시기부터 낙동강 지류인 토평천 유역에서 발달한 이 습지는 지금까지 크게 훼손되거나 변형되지 않고 원시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 경남 창녕군 유어면 대대리와 세진리 이방면 안리, 대합면 주매리 등에 걸쳐 있는 이 늪은 이제 한국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만큼 유명한 생태관광지가 됐다.

일명 '소벌'이라고 불리는 우포와 '나무벌'로 불리는 목포, '모래벌'인 사지포 그리고 쪽지벌까지 총 4개의 담수늪지를 뭉뚱그려서 우포늪이라고 부른다. 총면적 231만㎡(약 70만평), 둘레 7.5㎞로, 현재 430여종의 식물이 분포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식물종류의 10%에 해당된다. 특히 수생식물의 종류는 우리나라 전체의 50~60%에 이른다. 잎의 길이가 2m에 육박, 국내에서 가장 큰 잎을 가진 식물이자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식물인 가시연꽃을 야생의 상태에서 제대로 볼 수 있는 곳은 우포늪이 유일하다. 조류는 쇠물닭, 논병아리 등 텃새와 천연기념물인 노랑부리저어새(205호), 큰고니(201호)를 비롯해 청둥오리, 쇠오리, 기러기 등 62종이 있으며 겨울철새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우포늪은 1997년 생태계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됐고 1998년에는 국제습지조약(람사르 협약)에서 세계적으로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하는 '보존습지'가 됐다.

겨울에는 철새 천국, 여름에는 가시연꽃밭

우포늪은 1년 중 어느 한두 계절만이 아니라 사계절 생태관광지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다. 겨울에는 철새들의 천국이 된다. 사지포제방과 대대제방, 소목제방 등을 거닐

며 듣는 철새들의 울음소리는 억겁을 이어온 자연의 교향악이다. 여름에는 늪의 담수면적 전체를 덮어버리는 물풀들의 초록빛 잔치에 싱그럽고 건강한 생명을 느끼고 목포와 우포 등에서 신비의 식물인 가시연꽃을 원 없이 볼 수 있다. 가을에는 억새와 갈대가 어우러진 늪지를 거닐며 타임머신을 타고 원시시대의 어느 한 곳에 뚝 떨어져 있는 듯한 정취에 젖는다. 봄에는 겨울잠에 빠졌던 왕버들 등 늪의 수백가지 식물들이 연둣빛으로 옷을 갈아입으며 생명의 기지개를 켜는 모습을 직접 느낄 수 있다.

우포늪은 그냥 한번 방문해 생태관광과 전망대만 휙 둘러보고 황급히 다음 목적지로 떠나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다. 제대로 둘러보려면 우선 걸어서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보는 것이 좋다. 코스를 짜기에 따라서 7~10㎞ 정도. 서두르면 3시간, 아주 여유 있게 즐기며 걸어도 5시간 정도면 충분하다. 특히 둘레길을 걷는 동안 우포늪을 생활의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는 지역 주민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또 새벽 물안개와 일출, 저녁 일몰을 감상하며 낮과 밤의 경계에서 우포를 감상하는 맛도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행복한 경험이다. 최고의 일몰 포인트는 사지포제방으로 꼽힌다. 여름밤이라면 개구리 소리와 어우러진 수만마리 반딧불이의 '불꽃 춤사위'도 즐겨보자.

람사르총회를 1년여 앞둔 지난 2007년 7월 개관한 우포늪생태관의 노용호 관장은 "최근 방문객들은 우포늪을 더욱 다양하게 즐기려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단순히 생태관광 및 전망대 주변을 둘러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둘레길 걷기, 자전거 타기 등을 하면서 생태계 보고의 매력을 더욱 깊이 느끼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늪 해설사의 친절한 설명을 들으며 함께 걷는 것도 어린이 및 청소년 탐방객들에게 인기다. '우포지킴이'를 자임하고 있는 민간 시민단체 (사)푸른우포사람들도 늪지 해설과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방문객들을 맞고 있다.

람사르총회 이전 연간 32만명이던 우포늪 방문객 수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는 70만여명이 다녀갔다고 한다. 또한 내년 말 국립늪지센터가 완공되고 총 연장 19.5㎞에 달하는 둘레길 정비사업이 마무리되면 이 같은 증가 추세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는 이미 멸종해 지난 2008년 중국에서 들여온 따오기 부부가 따오기복원센터에서 알을 부화해 현재 7마리까지 늘어났다. 창녕군에서는 개체 수가 더 늘어나면 이들의 야생방류를 계획하고 있다. 이들이 우포늪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과 함께 "보~일 듯이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따옥 따옥 따옥소리…"라며 함께 입을 맞춰 노래 부를 날도 머지않았다. 낙랑경제

미니 인터뷰 | 정진현 환경부 자연정책과 사무관

생태관광이란?

우수 자연을 체험하고 관찰해 환경보호의 이해를 높이는 여행이다. 환경부는 순천만, 우포늪, DMZ를 우리나라 대표 3대 생태관광거점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생태관광 활성화에 따른 기대효과는?

자연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창녕·정선 등에서는 이미 생태관광 전담 조직이 신설됐다. 우포늪, 순천만, 주남저수지, 제주 올레길 등의 관광객 증가로 지난해 약 800개의 신규일자리가 창출됐다.

관광객이 늘어나면 생태계가 훼손될 우려도 있을 텐데?

환경 용량을 고려해 출입제한 및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다. 훼손 우려가 높은 지역은 출입이 제한된다. 대암산 용늪, 제주 물영아리오름 등 10개 국립공원 29개소에서는 이미 '자연휴식년제'를 도입했다. 관광객 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은 예약제로 방문객을 받고 있는데, 지리산 칠선계곡, 북한산 우이령길 등이다.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환경부의 계획은?

생태관광 용어 남용 및 자연보전을 담보하지 않은 프로그램 운영 등을 막기 위해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생태관광인증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환경에 대한 인식 증진 및 휴식을 위한 생태탐방휴양종합시설인 '에코빌리지'를 현재 북한산국립공원에 조성하고 있으며, 향후 지리산·한려해상 국립공원에도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이승렬
국제신문 주말레저팀 차장
gaddi@knou.ac.kr

"하룻밤 60만원 넘는 '해랑열차' 일본인에게 대인기죠!"

길기연 코레일관광개발 사장

철도는 에너지 효율성이 항공기의 27배, 고속버스의 29배다.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어 저탄소 교통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열차를 잠자는 공간이 아닌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는 길기연 코레일관광개발 사장(50세)을 만났다.

코레일관광개발을 간단히 소개해 달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계열사로 관광레저, 유통, 폐철로를 이용한 테마파크(정선 레일바이크,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삼척 바다열차 등) 조성, 열차승무서비스, 컨벤션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다. 올해는 렌트 · 숙박업 등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길기연 코레일관광개발 사장

일반 여행사와 어떤 점이 다른가?

일반 여행사는 철도를 이동수단으로만 사용한다. 하지만 우리는 철도를 활용해 다양한 테마열차를 선보이고 있다. 생활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는 MTB자전거를 열차와 접목시킨 '에코레일 MTB자전거열차'가 일례다. 250여대의 자전거 행렬이 서해바다에 길게 늘어선 광경은 정말 장관이었다. 지난해까진 두 달에 한 번 운행했지만 자전거 애호가들이 꾸준히 증가해 올해부터는 매달 정규적으로 열차를 편성하고 있다. 페리와 열차를 연계한 국내외 혼합 상품도 인기다. 동해까지 철도를 이용하고, 페리로 일본을 관광한 후 다시 한국에 돌아와 정동진 바다열차로 여행을 마무리한다. 이 같은 독특한 상품을 만들 수 있었던 비결은 역동적으로 일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평균연령이 33세에 불과할 정도로 젊은 피가 흐른다(웃음). 아이디어를 내고 추진하는 데 그 어느 곳보다 진취적이다.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현장에서 느끼는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관광은 굴뚝 없는 산업이다. 고용창출과 외화획득의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다. 관광객을 태운 여객기 1대가 내리면 자동차 100대의 수출효과

가 있다. 관광은 서비스가 기반이다. 호텔 객실 하나가 늘면 직원 3명이 더 필요하다. 한국의 경제활동인구 2,450만명 중 관광산업이 직·간접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 380만명으로 약 15%를 차지한다.

우리 회사의 경우도 정선 레일바이크로 50명, 섬진강 기차마을로 50명, 삼척 바다열차로 20명의 전담 인원이 늘었다. 이처럼 테마파크가 생길 때마다 직원 수가 늘고 있다. 숙박업, 렌트업까지 진출하면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는 것은 물론 이와 연계된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나?

'해랑'이라는 고급 침실 열차가 있다. 원래는 베이징 올림픽 때 응원객을 수송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평양에서 불허하는 바람에 운영의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이를 관광상품으로 만들었다. 통영, 곡성, 경주, 동해, 부산 등 인기 관광지를 운행 중이다.1박에 60만원 정도의 고가지만 일본인들 사이에서 '한국에 이런 명품 여행이 있냐'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 5월에는 JR규슈(일본철도) 사장이 '해랑'을 직접 타보기 위해 방문했다.

지난 6월 李 대통령의 남이섬 방문 이후 관광레저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정부 정책이 발표됐다. 정부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라 보나?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우리와 일본의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상황에서 정부 대책이 발표된 것은 시의적절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대책들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으려면 구체적 실행 방법이 뒷받침돼야 한다.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 세계에서 관광청이 없는 나라는 우리뿐이라는 점이다. 물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한국관광공사가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대대적으로 마케팅을 해야 한다. 관광에 대한 공무원의 전문성도 키워야 하고 국민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몇 년 사이 여러 대학에 관광학과가 많이 생겨나 인기과로 부상했다. 하지만 '스카이'라고 불리는 명문대에는 아직 관광과가 없다. 미국 코넬대 같은 경우 관광 커리큘럼이 굉장히 유명하다. 여기 출신 학생들이 전 세계의 관광을 주름잡고 있다. 우리나라도 명문대에 국제관광과를 신설해 똑똑한 인재들을 많이 유치해야 한다.



한국적 전통의 아름다움과 서구적 편의시설을 조화시킨 레일 크루즈(Rail Cruise) '해랑'

여행업계의 아이디어 뱅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아이디어는 거창한 것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일상생활 속에서 느낀 작은 것 하나가 아이디어가 된다. 덕수궁에서는 시간에 맞춰 수문장 교대식을 한다. 이것을 좀 더 흥미진진하고, 드라마틱하게 구성했으면 좋겠다. 물론 역사 고증의 행사로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이런 취지는 1년에 1~2회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관광객들을 위한 볼거리로 꾸며졌으면 한다. 수문장을 교대할 때 적군이 들어와서 한바탕 무술경합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닌가(하하). 개인적으로 인사동을 좋아하는데 그곳에서 쇼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쇼핑백으로 포장을 해주었으면 한다. 검정색 봉지가 아닌 세련되고 깔끔한 한국적 이미지를 쇼핑백으로 디자인하면 쇼핑하는 사람도 기분 좋고, 누가 봐도 인사동에서 샀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인사동이 브랜드화될 수 있을 것이다.

코레일관광개발을 어떻게 이끌지 앞으로 계획은?

철도를 크루즈 개념으로 생각하고 싶다. 아직은 꿈같은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철도 안에서 수영도 하고, 쇼도 구경하고, 공부도 하고 원하는 것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한다. 현재는 열차를 이용하는 계층의 다양성을 고려해 열차관광과 연관된 사업 확장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야경열차, 한류스타 열차, 페리열차, 성지순례, 사찰탐방열차 등 테마파크 개발도 확장할 계획이다. 내 이름에 길(road)이 있으니 이 일에 내가 딱 맞는 사람일지도 모르겠다(웃음).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다. 나라경제

안선경 나라경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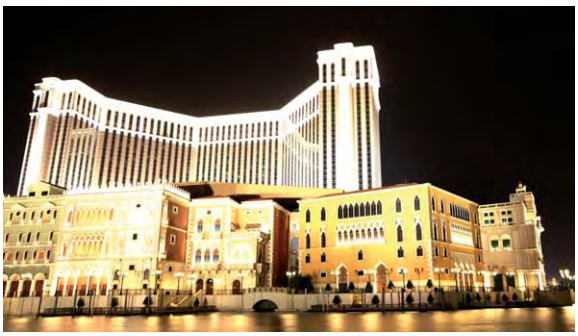
마카오의 베네시안 · 日 나오시마 단지, 명확한 테마로 관광객 끌어

관광산업은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원동력의 역할을 수행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주목하고 있다. 이에 해외 관광개발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사례는 개장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꾸준히 방문객을 유인하고 있는 도쿄 디즈니랜드이다. 1983년 개장 이래 고객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놀이기구를 꾸준히 증가시켰으며, 2000년에는 신개념 복합쇼핑몰인 익스피어리(IKSPIARI), 2001년에는 디즈니 시(Disney Sea), 2008년에는 디즈니 호텔을 개장해 지속적인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익스피어리 쇼핑몰은 쇼핑센터로서의 입지를 새롭게 구축, 단순 놀이공원에서 벗어나 그 자체가 거대한 쇼핑몰로서 새로운 소비시장이 됐다. 도쿄 디즈니랜드는 일본의 버블 시기에 성장했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두 번째 사례는 2007년 개장한 마카오 베네시안 리조트이다. 이 곳은 전시 · 관광 · 카지노를 결합한 복합리조트다. 테마개념을 도입해 고객의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로 인해 마카오는 카지노 도시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국제전시 및 회의도시로서 입지를 구축했다.

마지막 사례는 일본의 나오시마(直島) 문화관광단지이다. 나오시마는 세토 내해에 위치한 조그만 섬인데, 베세네하우스와 지추(地中)미술관은 에너지 절감과 재활용 사례로 각광받고 있다. 지추미술관은 지하에 조성한 공간으로 언덕의 능선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냉난방을 최소화했다. 또한 아트하우스 프로젝트는 일상의 생활공간(버려진 집)을 주제로 설정해 예술적 공간으로 리모델링했다. 이 단지가 만들어질 때는 녹색성장 논의가 그리 활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사회발전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국제사회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시대의 조류를 예견한 문화관광단지 조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마카오의 코타이스트립에 들어선 베네시안 마카오 리조트 호텔의 외관.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관광지인 베니스를 그대로 옮겨놓은 모습이다

이상의 사례를 종합해보면 첫째, 관광개발이 민간 중심으로 이뤄지고 공공 부문이 지원을 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을 십분 발휘하기 위한 방향으로 관광개발사업이 이뤄져야 관광객의 요구에 호응할 수 있다. 또한 관광개발이 조성과 운영에 성공해야 경제효과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둘째, 주제의 명확한 설정이 중요하다. 베네시안 리조트나 나오시마 문화관광단지도 명확한 주제를 도입해 관광객의 재방문을 이끌어냈다. 셋째, 시대조류의 반영이다. 나오시마의 개발이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시대조류에 부합해 방문객들은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에너지 절약에 자연스럽게 동참하고 있다. 또한 베네시안 리조트와 도쿄 디즈니랜드의 익스피어리 쇼핑몰은 복합기능을 도입해 현대인들의 시간절약을 위해 필요한 기능을 하나의 공간에서 제공하고 있다. 나라경제



김덕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dkkim@kcti.re.kr

www.kdischool.ac.kr

KDI 국제정책대학원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Step out toward the world
with the ***KDI School***

KDI국제정책대학원 2011년 학생모집 안내

KDI School의 장점
- 다양하고 폭넓은 장학제도
- 국제학생비율 : 47% (국제공무원 : 72%)

모 집 분 야
- MPP (Master of Public Policy)
- MPP/ED (MPP in Economic Development)
- MPP/PM (MPP in Public Management)
- Ph.D. in Public Policy

전 형 일 정
- 원서마감 : 2010년 10월 29일(금)
- 합격자 발표 : 2010년 12월 초

지원자격 및 전형방법
- 학사 석사학위(박사지원자) 소지자 및 영어수강 가능자
- 1차 서류심사, 2차 영어면접시험

입학설명회
- 일시 : 2010년 10월 9일(토) 10:30 ~ 12:00
- 장소 : KDI국제정책대학원 7층 링컨홀
- 문의 : 02-3299-1263/1055, admissions@kdischool.ac.kr

- Overseas Partner Schools

관광산업 경계 풀면, 모든 것이 관광자원



충남 보령머드축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대표적인 한국 관광 아이템이다.

관광산업은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며 지역이나 국가의 이미지 제고에도 매우 효과적이다. 그렇기에 세계 각국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다.

일본 · 대만 · 싱가포르 관광산업 육성 위해 무한경쟁 돌입

그동안 관광객 유치 활동에 나서지 않았던 일본이 지난해 관광청을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관광객 유치활동에 나서고 있다. 대만도 중국대륙관광객 100만명 유치목표 달성 이후 2011년까지 중국대륙관광객에 대한 자유여행 개방을 추진하려 한다. 규율이 엄격하기로 유명한 싱가포르는 카지노를 허용해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이렇듯 우리의 주요 경쟁국들 모두 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삼고 관광객 유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 정부 들어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3차에 걸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 등을 내놓았다. 지난 7월 발표한 '관광 · 레저산업 육성방안'에서는 2014년까지 외래관광객 1,200만명을 유치하고, 국민 1인당 국내관광을 2014년까지 연 14일로 늘려 총 4만여개의 신규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관광 · 레저산업의 현 주소는 주요 경쟁국들에 비해 다소 뒤처져 있는 상황이다. 관광산업이 국내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GDP 대비 7.2%로 OECD 평

균인 10.1%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은 31위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닐슨에서 조사한 중국인의 해외여행 의식조사에서도 한국은 중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관광목적지에서 홍콩 · 마카오 · 대만 등 중화권은 물론 일본 등 주요 경쟁국에 뒤진 10위로 조사됐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중국 관광객은 134만명으로 중국 전체 해외관광객 4,766만명의 2.8%에 불과했다.

이러한 지표들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여러 정책들이 일정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다. 2000년 이후 지난해 처음으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도 관광수지 흑자를 기록했지만 이는 환율에 따른 출국자수의 감소와 입국자수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관광수지가 12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현 주소를 보여준다.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은 바다 위의 돛단배처럼 외부의 영향에 전적으로 좌우되는 취약함을 보일 수밖에 없다.



주한 벨기에 피에르 클레망 뒤뷔송 대사가 지난 5월 GS건설의 '그린스마트자이'를 찾아 스마트 쿠킹 테이블에서 시연을 해보고 있다. 이곳은 한국의 대표적 주거문화인 아파트에 적용된 에너지절감 기술과 미래 주거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들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관광산업에 대한 사고의 전환 시급해

근본적인 변화는 한국을 방문해야 하는 당위성을 우리 스스로 찾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지리적 접근성이나 가격경쟁력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이유로 남는 한 주변 국가와의 관광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단순히 방문객의 숫자에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경험을 제공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잠재방문객에게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닌 '가야 하는' 나라로 인식되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많은 자연자원과 문화유적이 있다. 그러나 경복궁이 자금성의 규모를 감당하지 못하고 설악산이 알프스의 웅장함을 당해내지 못한다. 기존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유적 중심에서 벗어나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를 위해서는 생활양식이나 대중문화, 산업자원 등 우리가 그동안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소재를 발굴하고 재창조 과정을 거쳐 관광자원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의 주거환경을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좋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듯이 현대의 관광에서는 모든 것이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는 사고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이는 관광산업의 경계가 모든 산업으로 확장됨을 의미한다.

더 이상 관광을 관장하고 있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노력만으로는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나 환경부뿐 아니라 국토해양부 · 보건복지부 ·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정책수립 및 집행 시에도 보다 본질적인 차원에서 관광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광을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몫으로만 돌리는 사고에서 벗어나 모두가 관광종사자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올해는 2012년까지 3년 동안 진행되는 '한국방문의 해'의 원년이다. 또한 11월에는 G20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다. 이러한 행사들을 계기로 관광산업의 경쟁력, 나아가 국가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광종사자뿐 아니라 관련 부처와 민간, 국민이 제2의 문화부, 제2의 관광종사자라는 생각으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나라경제



이석호
방송통신대 관광학과 교수
gaddi@knou.ac.kr

*2010년 『나라경제』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작지만 강한 기업'을 찾아갑니다. 규모는 작지만 알찬 기술력과 도전정신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 히든 챔피언. 그들의 숨은 노력과 성공비결, 관련업계 동향까지 살펴보며 우리 기업의 가능성과 저력을 점검해봅니다.

'죽 쑤는' 인생, 프랜차이즈의 '本' 되겠다

본아이에프 외식기업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과감히 된다고 말하는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죽 쑤다가 정말 죽 쑨다'는 사람들의 놀림과 비아냥을 떨치고 나니 이젠 주위에 아무도 없다. 선두라는 자리에 섰기 때문이다.

김철호 본아이에프 대표(48세). 그는 2002년 대학로에 '본죽' 1호점을 낸 이래 사람들의 입맛과 생활을 바꿔놨다. 아무도 죽을 먹는 문화가 생길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죽은 그저 환자식일 뿐. 그러나 김 대표는 건강이 좋지 않은 환자에게 권하는 음식이야말로 가장 좋은 식사가 아닐까 생각했다.

음식점 창업 컨설팅을 하던 그는 죽 시장을 조사한 뒤 여러 고객들에게 죽 전문점을 추천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이럴 바에 내가 직접 하자, 망해도 내가 망하면 되지.' 하지만 그는 망하지 않았다. 발상의 전환으로 죽은 환자식이 아닌 건강식이 되었고 든든한 한 끼 식사로 변신했다. 웰빙이라는 트렌드도 한몫했다. 사람들이 먹을거리에 관심을 쏟으면서 자연스럽게 한식에 대한 수요도 높아졌다. 가맹점 수는 날로 늘었다. "솔직히 이렇게 빨리 자리를 잡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대학로 1호점을 낼 때부터 영어, 일본어 메뉴판을 만들었어요. 우리 음식을 갖고 해외에 나갈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든 회사이름이 본아이에프(IF). 인터내셔널 프랜차이즈의 약자란다.

2006년 본비빔밥을 선보인 이후 본아이에프는 본국수, 본도시락까지 아이템을 늘리면서 2009년 기준 가맹점 수 1,200여개, 해외시장에도 진출해 미국 4개, 중국 4개, 일본 1개의 매장을 갖게 됐다. 회사 매출은 650억원, 전체 가맹점 기준 2,800억원에 달한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한식 대표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김철호 본아이에프 대표

'웰빙+한식'이라는 기막힌 조화가 주효

김철호 대표는 이 같은 성공 비결이 철저한 시장조사와 소비자 분석에 있다고 한다. "올해 새로 내놓은 메뉴 중 남성과 아이들을 위한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술을 좋아하는 민족이 없는데 아직도 해장을 해결해주는 메뉴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속이 불편한 사람들에 좋은 육개장죽, 올갱이죽을 개발했습니다. 아이들 간식이 걱정인

부모들을 위해선 해물과 카레를 이용한 카레해물죽을 만들었죠.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보입니다."

철저한 가맹점 관리도 주효했다. 가맹점 위치 선정에서부터 정규 교육, 3단계 모니터링과 추가 교육까지 꾸준히 지원한다. 또 중앙공급시스템을 통해 모든 점포가 일정한 맛을 낼 수 있도록 매일 아침 전국 매장에 신선한 재료를 전한다. 게다가 테이크아웃 비율이 60%를 넘어 작은 매장으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입소문을 탔다. 지난 3년간 가맹점의 매출성장률은 64%를 기록했고 폐업률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그러나 모든 일이 늘 좋을 수만은 없는 법. 2005년 초 가맹점이 400개를 넘었을 무렵이다. "도대체 왜 배달을 못하게 하냐고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그렇지만 특유의 맛을 지키고 가맹점 간 상권을 지키려면 배달은 허용할 수 없었죠. 배달을 하다 보면 가맹점 간 경쟁으로 분쟁이 생기고 죽의 양과 맛, 재료가 달라질 수 있으니 어쩔 수 없었어요." 본사와 가맹점 간 관계가 무너지는 것 아닌가 했지만 가맹점주들은 곧 돌아왔다. 자신들의 상권을 보호받으니 매출에 대한 걱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는 교육과 관리가 힘

국내 외식 시장은 경기와 트렌드에 워낙 민감하다. 안정적인 수익구조와 사업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해외 진출이 필수였다. 본아이에프는 2005년부터 해외시장에 눈을 돌렸다.

지난 여름 출장과 휴가를 겸한 필리핀 방문은 김 대표에게 새로운 자극이자 도전이 됐다. 필리핀 유통회사 관계자와 입점 문제를 상의하던 그는 필리핀 내 최대매출 기업이 3년 전까지 '졸리비'라는 외식회사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 "대자본이나 글로벌 회사도 아닌 가장 대중적이고 단순한 필리핀 음식점이 수천개 프랜차이즈로 운영돼 국가 경제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우리라고 왜 못하겠나 싶어 일할 의욕이 생기더라니까요. 하하"

말레이시아 진출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감안해 이번엔 서둘지 않고 제대로 그림을 그릴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더욱이 '꽃보다 남자', '궁' 등을 제작했던 기획사와 협의해 한류와 한식을 함께 갖고 나갈 계획이라고도 했다. 그는 한식 브랜드를 세계에 알리는 업계의 '본'이 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아직도 우리는 외식산업을 가볍게 봐요. 그저 밥장사라고 치부하거나 영세하다고 여기죠. 자기는 밥장사해서 자식을 대학에 보내도 내 자식은 절대 밥장사 시키지 않겠다고 생각하니 외식산업이 발전하지 못했던 겁니다." 김철호 대표의 말에는 국내 외식시장에 대한 안타까움이 배어 있었다.

그 사이 다른 나라는 음식으로 글로벌화를 꾀했다. 일본의 스시, 베트남의 쌀국수는 물론이고 맛의 천국이라는 중국까지. "태국도 음식 세계화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이에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늦긴 했지만 우리 음식은 세계 어딜 가도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조리법과 영양이 풍부하고 특색이 있잖아요. 산업적으로 포장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겠죠." 지킬 것은 지키되 트렌드에 맞는 음식, 일명 '스마트푸드'와 같은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식세계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에서도 외식산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다. 지난 4월엔 지식경제부와 코트라가 '경쟁력 있는 토종 프랜차이즈 기업' 13곳을 선정해 해외진출을 돕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장에선 얼마나 도움이 될까. "점포를 열어주거나 금전적 지원을 하진 않지만 현지 시장조사와 마케팅 계획 수립을 도와줍니다. 고마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아쉬운 점이 있는지 묻자 "처음부터 수십개 점포를 갖고 나가는 게 아니다 보니 사실 물류조달에 어려움이 있어요. 규모가 적어서 생기는 문제라서 이런 부분은 정부가 좀 도와주면 좋겠네요"라고 했다.

본아이에프의 가장 큰 경쟁력은 무엇보다 한식이다.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정성어린 마음가짐이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교육과 관리가 성공의 관건이라는 김 대표의 말이 가슴에 와 닿는다. 나라경제

표초희 나라경제 기자

우리 외식업체들도 해외시장 진출해야

삼양식품이 8월 10일 요리전문 외식 브랜드인 '호면당'을 인수했다. 50년 가까이 라면을 만들어온 삼양식품이 외식시장에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뿐 아니라 자본력과 인력을 갖춘 대기업들이 속속 외식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를 대표하는 SPC그룹은 물론 LG·CJ제일제당·동원F&B 등도 외식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국내외 대기업의 신규 진입이 늘어나면서 서울·부산·광주 등 전국 주요 도시에는 하루가 다르게 대형 레스토랑들이 들어서고 있다. 국내 외식시장은 2001년 32조원에서 2008년 64조원으로 7년 만에 두 배 가량 성장했다. 업계에서 추산하는 사업체 수는 2008년 말 기준 57만6천개에 달하며 관련 종사자는 157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업계에선 올해 외식시장 규모가 7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본다.

실제로 한국 외식시장은 인구에 비해 매우 크다. 세계 각국에 진출한 글로벌 브랜드의 국가별 매장 수를 보면 이런 결과가 확연히 드러난다. 국내 패밀리 레스토랑 1위를 달리고 있는 아웃백스테이크는 전국에 102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다. 아웃백이 진출한 전 세계 20개국 천여개 매장의 10%에 달하는 규모다. 던킨도너츠도 미국을 제외한 해외 매장 2,620곳 가운데 한국 내 매장이 820여개나 된다. 또 신세계가 운영하는 커피전문점 스타벅스도 한국이 전 세계 80개국 중 5위 안에 드는 큰 시장이다.

하지만 국내 외식시장의 급팽창과 대기업 진출로 인한 부작용도 적지 않다. 외식은 전통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선점해온 시장이다.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젊은이들이 창업할 때 가장 선호하는 아이템이기도 하다. 이런 외식시장에 국내외 대기업들이 속속 진출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에서도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영세 외식업소다. 물론 음식이나 서비스 품질이 떨어져 소비자들의 니즈(needs)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책임도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지난 6월 9~10일 양일간 21개국 130여명의 식품 전문 바이어를 초청해 국내 수출업체와 연결하는 국내 최대 농식품 수출상담회 'BUY KOREAN FOOD 2010'을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했다.

국경 장벽이 없어진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외식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토종 외식기업들은 경쟁력을 높여 국내시장을 지키고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미 국내에서 경쟁력을 키운 토종 외식업체들이 해외에 나가 성과를 내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외식업소는 현지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업종에 비해 자리 잡기가 쉽지 않다. 철저한 현지화를 통해 뿌리내려야 할 것이다. 국내외 외식 대기업과의 경쟁력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생존도 사회적 과제다. 프랜차이즈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고려할 만하다. 개별 업소만으론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통해 품질을 높이고 브랜드를 키워 대기업과 경쟁해야 한다. 중소 프랜차이즈 외식 업체들이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세제 및 자금 등의 정책 지원도 필요하다. 나라경제



최인한
한국경제신문 생활경제부 기자
janus@hankyung.com

정책 그 후

환경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



과거 생산자들은 제품을 생산 · 판매하기만 하면 그만이었다. 사용 후 발생된 폐기물까지 신경쓸 필요는 없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소비자의 몫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이 됐다. 제품 설계, 포장재 선택 등에서 결정권이 가장 큰 생산자가 재활용 체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올해로 10년을 맞이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어디까지 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지 『나라경제』가 살펴봤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살리는 재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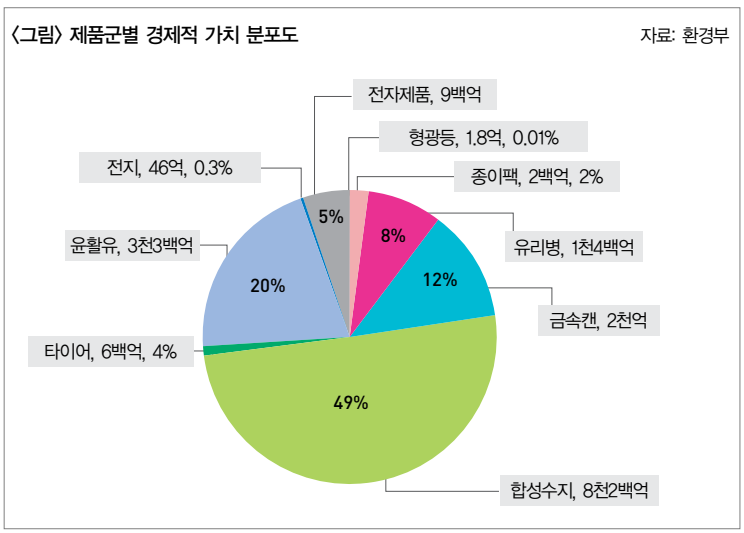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제품의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본다. 그러나 공유책임제도(SPR; Sharer Product Responsibility)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와 소비자의 책임도 늘었다.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이미 독일·프랑스·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는 보편화돼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부터 폐기물 예치금제도가 시행됐으나 당초 취지와 달리 생산자들의 예치금 납부 위주로만 운영됐다. 예치금의 반환율이 40%에 머물러 재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제도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도입됐다.

2009년 현재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등 4개 포장재군과 전지류,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등 4개 제품군이 대상품목이다. 전자제품(10개 품목)은 폐자동차와 함께 2008년도부터 재활용뿐만 아니라 유해물질 환경까지 제어하는 환경성 보장제도로까지 확대·운영되고 있다.

EPR 시행으로 이전까지 소각·매립되던 폐자원이 재활용(recycle)돼 원자재를 절약하고 있다. 2001년 92만8천톤이던 재활용량이 2008년 136만8천톤으로 약 46% 증가했다. 재활용을 통해 회수한 전자제품은 2001년 국민 1인당 0.72kg이었으나 2008년 2.3kg까지 상승했고, 금속자원도 총 73만4천톤에 이른다. 특히 합성수지 필름류의 경우 전량 소각·매립됐으나 2004년 EPR 편입 이후 전체 생산량의 75%가 재활용돼 연료나 플라스틱으로 재탄생했다. 페트병, 유리병, 금속캔 등 우리가 매일 먹고 버리는 포장폐기물은 80% 이상이 재활용된다. 이를 경제적 편익으로 환산하면 약 3조6천억원에 이른다.

재활용산업의 기반도 구축됐다. 가전사들의 노력으로 전국 5대 권역별로 재활용센터(RC)가 설치돼 국산기술로 폐제품 분리, 냉매 등 환경오염물질 회수 등 완벽한 재활용시스템을 갖췄다. 재활용사업자에 주는 지원금 규모도 2008년 439억원에 달하며, 재활용시설 설치 및 기술개발 융자금이 이제까지 8천억원 가까이 지원되는 등 재활용시장도 확대됐다. 이러한 성과들은 약 2조6천억원의 에너지 절감효과, 여의도 면적의 1,920배에 달하는 잣나무숲이 흡수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로 나타났다. EPR 품목의 확대와 수거체계 구축 등으로 2020년까지 2,381만3천톤의 재활용 달성과 재활용량을 폐기물로 처리할 경우 소요될 약 5조2천억원의 절감 및 5,400만톤의 CO_2 감축 효과가 예상된다.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제도다. 나라경제

〈그림〉 제품군별 경제적 가치 분포도 자료: 환경부



양적 재활용보다는 질적인 면을 중시하는 제도로 개선

유명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거치면서 폐기물의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정부가 분리수거제, 쓰레기 종량제 등 다양한 정책을 도입해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에 힘을 쏟았으나 재활용 비용을 최소화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참여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었다.

제도가 만들어진 과정을 소개해달라.

2000년부터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2000년 6월 가전제품을 시작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과 재활용 이행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기 시작했다. 이후 2002년까지 금속캔, 유리병, 타이어 등 7개 품목에 대해서도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EPR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입법절차 등을 거쳐 2003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제도를 만들 때 생산자(기업)들의 반대는 없었나?

당시에는 기업들이 환경 분야를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재활용을 의무나 규제로 인식하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재활용의 중요성과 기업의 참여와 사회적 책임이 꼭 필요하다는 설명회를 열고 숱한 설득과정을 거쳐 기업들의 인식전환을 이뤄낼 수 있었다.

현재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나?

지난 10년간 운영한 결과 EPR 대상품목 재활용률은 약 46% 증가했다. 재활용품 생산을 통해 약 1조7천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됐다. 매립이나 소각했을 경우 소요됐을 처리비용 약 1조9천억원도 절감할 수 있었다.

EPR 제도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이유는 ?

우리나라의 폐기물정책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서 있다.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을 가보더라도 우리의 분리수거가 얼마나 활성화돼 있는지 느낄 수 있다. EPR 제도는 분리수거와 필수불가결한 정책이므로 이미 1990년대부터 재활용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돼 있었다고 해도 무방하다. 단순히 정부정책 때문이 아니라 국민들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분리배출 · 수거 동참, 재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향상 덕분에 가능했다.

소주 · 맥주병 공용화가 시행되고 있는데 어떠한 이점이 있나?

유리병은 안전성과 재질구조가 탁월해 재사용을 통해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대표적 품목이다. 기존에도 주류사들은 각 사에서 제조한 주류병을 재사용하고 있었으나, 주류병을 공용화함으로써 재사용 횟수가 5회에서 20회로 약 4배 증가했다. 빈 병의 회수기간도 60일에서 15일로 짧아져 연간 최대 329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으로 계획은?

지난 10년 동안 EPR 품목의 재활용률을 크게 높였다. 이제는 제도의 선진화를 꾀할 생각이다. 양적 재활용보다는 질적인 면도 중시하는 제도로 개선해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재활용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나라경제

권기대 나라경제 기자

"제품 설계 단계부터 재활용을 생각해요"

선용석 롯데칠성음료 환경기술팀장



롯데칠성음료는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나?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우리 회사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다른 기업들의 경우 생산자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재활용 업체에 업무를 위탁하기도 한다.

공제조합은 어떤 곳인가? 모든 생산자가 가입해야 하나?

기업들의 재활용 의무를 대행한다. 비영리 사단법인이며 환경부 인가를 받은 단체다. 모든 생산자가 공제조합에 가입할 의무는 없지만 많은 기업이 가입한 상태다. 공제조합은 품목별로 있는데 우리는 페트병·캔·유리병·종이팩·플라스틱 등 5개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다.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내는 것 외에 재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제품 설계 단계부터 재활용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고민한다. 용기 경량화가 대표적이다. 음료 용기를 더 가볍고 얇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폐기물 양을 감소시킬 수 있다. 재활용이 쉬운 재질·구조로 용기를 바꾸는 노력도 한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 한 음료제품의 경우 용기가 유색페트병이었다. 그런데 유색페트병보다 무색이 용기 재활용성이 더 좋아 재질을 바꿨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이전에 시행하던 폐기물 예치금제도가 기업 입장에서 더 편하지 않았나?

물론 더 편하고 기업의 부담도 적었다. 폐기물 예치금제도는 생산자가 일정 비용을 미리 예치한 후 재활용 실적에 따라 예치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해졌고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만큼 재활용 의무도 커졌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단기적으로는 기업규제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에 환경에 대한 책임의식을 심어줬다.

재활용 의무율이 있는가? 이것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품목별로 재활용 의무율이 있다. 매년 환경부에서 발표한다. 2010년 페트병의 의무율은 76.4%, 금속캔 78.6%, 유리병 77.8% 등이다.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미달성량에 대해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한다. 재활용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는 공제조합에서 부과금을 납부한다. 우리가 처음 공제조합에 내는 분담금에 부과금이 미리 반영돼 있다. 대부분 실제 실적이 의무율보다 높아 부과금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통해 롯데칠성음료가 얻은 이익이 무엇인가?

환경의식이 향상됐다. 또 용기 경량화에 더 매진할 수 있는 동기가 됐다. 이에 따른 원가절감도 우리에게 기분 좋은 이익이다.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다 돼간다. 앞으로 더 바라는 점이 무엇인가?

입법부터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므로 제도가 많이 보완된 상태다. 최근에는 다른 나라에 홍보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벤치마킹해갈 수 있도록 말이다. 잘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 만큼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부, 생산자, 공제조합, 재활용 사업자 등 모든 주체가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 나라경제

김솔나 나라경제 기자

시장기구에 의한 자율적 지원체계 필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국가적으로 필요하나 사업의 수익성이 없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재활용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지원체계가 시장 기구에 융합돼 자연적인 메커니즘으로 정착되면 EPR 제도는 목적 달성과 함께 법적 강제로서의 임무를 다하게 된다. 이제 우리의 EPR 제도는 일부 품목이 자율 재활용의 시장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등 시장 기구에 의한 자율적인 지원체제로의 이행에 필요한 여건이 성숙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이러한 자율적 재활용 지원체제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미리 구상하고 준비해야 한다.

새로운 재활용 지원체계는 기업의 자율적 이행을 중심으로 정부의 규제를 소비자와 시장에 의한 평가로 대체하는 체계를 말한다. 재활용 목표율의 자기선언과 이행 및 결과의 공개가 모든 기업에 보편화되도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이미지 전략의 일환으로 수용되는 정책수단의 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녹색 소비자 운동과 시장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재활용 지원체계의 정착과 함께 EPR 성과를 신용평가의 중요 요소로 하는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제도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 시장평가에 기반을 두는 재활용 지원체계는 재생원료 사용 정도가 소비자의 상품 선택 시 중요 고려요소가 되고 재활용 관련 기여도가 높은 기업의 제품이 소비자 리포트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정부조달이나 다른 공공구매에서 우선권을 받는 체제,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평가에서 기업의 재생원료 사용실적, 재활용 용이성 상품 개발 실적, 부품이나 소재 구입 시 재활용성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는 구매정책 등 재활용 산업 육성에 대한 기여도를 중요 평가항목으로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새로운 체제는 EPR 제도를 중심으로 한 재활용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사회적 인프라의 확충에 따라 자연적으로 구축되는 것이지만 정부는 그 도래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고 기존의 재활용산업이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도록 지원하고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정비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으로 선정된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의 친환경 처리를 위해 충남 아산에 1,160평 규모의 재활용센터를 세웠다.

끝으로, EPR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한국제도의 지속적 발전도 중요하다. EPR의 한국 모델은 개도국의 대표적인 벤치마킹 모델로 자리 잡았다. 이제는 유럽과 한국이 하나의 모형으로 수렴하는 국제적 표준화의 움직임에 앞장서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적 표준의 확대 전파를 위한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사후재활용제도와 환경성 보장제의 균형발전, RoHS(유해물질 제한지침) 확대, 재질·구조 개선 의무의 강화가 이뤄져야 하며 포장재 재질구조개선에 대한 자율평가 시스템 구축, 자발적 환경성 보장제의 강화와 시장에 의한 평가, 사전규제 강화 등 생산자의 재활용비용 절감을 염두에 둔 사전적 역할의 수행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개발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나라경제



박준우
상명대 금융경제학과 교수
jwpark@smu.ac.kr





'호두까기 인형'과 미하일 셰먀킨

페테르 일리치 차이코프스키(1840 ~ 1893)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면 어김없이 무대에 올려지는 '호두까기 인형'(The Nutcracker). 그러나 탄생지 러시아에서는 봄과 가을에 절찬리에 공연된다. 이 작품은 1891년 당시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마린스키 오페라 극장장인 이반 프세볼로슈스키가 전작 '잠자는 미녀'를 성공시키면서 발레계의 최고 작곡가로 떠오른 차이코프스키에게 오페라와 발레를 함께 공연할 수 있는 작품을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호두까기 인형' 음악은 매우 힘겹게 만들어졌다. 차이코프스키는 오페라와 발레가 함께 공연되는 작품을 만든다는 것에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었고 급기야 제작기간을 1년 더 연장해 달라고 부탁했다. 마린스키 극장은 차이코프스키를 기다려주었고 결국 '호두까기 인형'이 탄생된다. E.T.A 호프만(Hoffmann)의 작품집 「제라피온 조합」에 포함된 환상동화 '호두까기 인형과 생쥐 대왕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호두까기 인형'은 1892년 12월 17일 마린스키 극장에서 초연됐다. 재미있는 것은 호프만의 작품들이 요즘 말로 하면 바로 판타지 소설이었고 차이코프스키가 만든 3개의 발레 '백조의 호수', '잠자는 미녀', '호두까기 인형' 모두 판타지 작품이라는 사실이다. 이미 18세기, 19세기에도 판타지는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었던 것이다.

'호두까기 인형'은 2막 3장으로 구성돼 있다. 첫 막이 오르면 즐거운 가정에서 크리스마스 파티가 벌어지고 있다. 두 아이 클라라와 프리츠는 파티 분위기에 신이 났고, 어른들은 서성대며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다. 아이들은 부모님 앞에서 춤을 춘다. 클라라의 대부 드롯셀마이어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준다. 시간이 늦어 클라라가 자러갈 때가 되자 그는 병사 모양을 한 커다란 호두까기 인형을 클라라에게 준다. 프리츠는 그걸 차지하려고 클라라와 맞붙어 싸우다 그만 인형을 망가뜨린다. 어른들은 아이들을 침실로 보내면서 춤추고 물러간다.

무대는 어두워지고 텅빈다. 얼마나 지났을까? 지금은 한밤중이다. 클라라는 자신의 인형을 보려고 방안으로 살금살금 들어온다. 호두까기 인형이 장남감 병정들을 지휘하면서 생쥐왕이 이끄는 생쥐 군단에 대항해서 싸우고 있다. 승리가 판가름 나지 않을 것 같자 클라라는 슬리퍼를 던져 생쥐 대왕을 죽임으로써 호두까기 인형을 구한다. 이때 호두까기 인형은 갑자기 젊은 왕자로 변한다. 그는 보답으로 클라라를 과자 왕궁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제의하고 둘은 떠난다.

장면은 왕궁으로 바뀐다. 때는 겨울이고 눈이 내리고 있다. 눈의 제왕과 여왕이 어린 방문객을 맞기 위해 다가온다. 그들은 눈송이와 함께 춤을 춘다. 2막은 과자의 왕국에서 벌어진다. 클라라와 왕자는 디베르티스망(고전발



1 국내 3대 발레단인 유니버설발레단, 국립발레단, 서울발레시어터의 3색 '호두까기 인형'(왼쪽부터) **2** 페테르 일리치 차이코프스키 **3** 미하일 세먀킨



장일범
yoonbhum@me.com
음악평론가, KBS 클래식FM '장일범의 가정음악' DJ, 호암아트홀에서 열리는 '장일범의 클래식 카페' 진행자

레에서 추는 일련의 무용 또는 몇 사람의 무용수가 다투어 다른 무용을 하는 일)으로 환대를 받는다. 뜨거운 초콜릿은 스페인 춤을, 커피는 아랍 춤을, 막대사탕은 러시아 춤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마르지판(복숭아와 사탕을 졸여 만든 과자)이 꽃의 왈츠를 춘다. 즉시 피날레가 잇따르고 모든 댄서들은 사탕요정, 클라라, 왕자와 함께 대미를 장식한다.

1892년 차이코프스키가 만든 고전인 이 작품의 가장 혁신적인 최신 버전이 러시아에서 등장했다. 그것도 이 작품을 제작, 초연했던 마린스키 극장에서 나왔다는 것이 흥미롭다. 2001년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초연된 이 작품이 특별한 것은 오늘날 러시아 최고의 예술가로 꼽히는 천재 미하일 세먀킨(Mikhail Shemyakin)의 작품이라는 사실이다. 진정한 르네상스인이자 화가 · 조각가 · 출판가인 세먀킨은 '호두까기 인형'을 오리지널 호프만의 스토리를 포함한 다양한 소재의 재료를 갖고 다시 만들어냈다. 심지어 세마킨은 그의 경험을 바탕으로 드로잉을 퍼포먼스의 기초로 삼기도 했다. 이런 풍부한 디테일은 젊은 안무가 키릴 시모노프에 의해서 춤으로 변모했는데 이런 협업 작업은 발레 역사에 일찍이 없던 일이었다. 발레를 전공하지 않은 예술가에 의해 발레로 탄생한 것이다. 이 개성적인 실험의 결과는 계시적인 것이었다. 세먀킨의 버전은 차이코프스키의 음악과 완벽하게 잘 들어맞아 드라마가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만들어졌다.

이 버전은 눈(eye)을 위한 진정한 축제다. 마샤(서구에서는 클라라)는 사랑받지 못한 소녀로 등장한다. 청소년으로 성장한 마샤에게 어른의 세계는 재미있는 비틀림으로 나타난다. 심지어 어디에나 스토커처럼 나타나는 대부 드롯셀마이어도 호두까기 인형 왕자와 싸우는 쥐들과 결탁하는 악하고 음흉한 음모가로 그려져 있다. 여행은 다른 버전과는 달리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다. 1막에 들어 있는 유명한 '눈꽃 왈츠'가 이 작품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눈보라로 묘사되며 그것은 마샤와 왕자가 콘피투렌부르크(과자 왕궁도시)로 가는 것을 더디게 한다. 차이코프스키의 원작에서 스테이지 뒤에서 부르던 코러스는 무대 전면에 등장해 페허가 된 교회에서 죽은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로 바뀌었다. 팀 버튼 작품이나 공포영화를 보는 듯해서 재미있다. 초현실주의적인 그로테스크함을 자신의 회화세계에서 보여온 세먀킨의 작품세계와 일맥상통한다. 재작업은 빛나고 독창적인 위트를 지녔으며 풍부한 볼거리를 선사해 발레 작품 중에서 가장 젊은 작품으로 탄생했다. 2007년 1월 2일 마린스키 극장에서 공연된 미하일 세먀킨의 '호두까기 인형' DVD를 꼭 한번 보시길 추천한다.

원칙을 지키는 투자가 최선이다

일반투자자들은 주식 개별종목에 직접투자를 하는 것보다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방식이 바람직하다. 직접투자를 하는 데 들일 시간과 노력을 자신의 일에 투자하는 것이 성공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펀드란 운용전문 회사가 일반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주식 · 채권 등에 투자하고 이로부터 얻는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나눠 주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펀드를 다른 이름으로는 수익증권 · 간접투자상품 · 투자신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펀드의 종류에는 운용대상에 따라 주식형 펀드 · 채권형 펀드 · MMF 등이 있다. 주식형 펀드는 주로 주식에 운용하기 때문에 주식 시황에 따라 크게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한다. 채권형 펀드는 주로 채권에 운용하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한 회사 또는 기관에 문제가 생기거나 금리가 크게 오르지만 않으면 주식형 펀드보다 원금 손실을 볼 확률이 비교적 낮다. MMF(Money Market Fund)는 단기금융상품에 운용해 은행의 보통예금처럼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면서도 정기예금금리에 가까운 수익률을 내주는 펀드다.

내용을 잘 아는 상품에만 투자하라

전통적인 펀드 외에도 부동산 · 금 · 미술품 등에 투자하는 상품펀드,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특수펀드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가끔 내용을 잘 알아보지도 않고 이런 특수한 형태의 펀드에 투자했다가 실패를 보는 투자자들을 만날 경우가 있는데,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상품에는 투자를 해서는 안된다'는 투자원칙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필자 또한 삼십년 이상을 증권업계에 종사해 왔지만 내용이 단순한 펀드 외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 '내용을 잘 아는 상품에만 투자한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펀드투자를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펀드투자의 성공은 주가 예측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주가가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고,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주식형 펀드를 팔아 채권형 펀드나 MMF로 바꿔타야 된다고 생각한다. '펀드투자 = 주가예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은행이나 증권, 보험사와 같은 펀드 판매회사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펀드투자에 대한 조언을 하는 경우가 많다. 펀드투자 설명회 같은 데 가보면 거의 예외없이 주가예측을 잘한다고 소문난 전략가를 불러 주가전망을 설명하게 한다.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대부분인데, 판매회사에서는 이 주가전망을 근거로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라고 권유한다. 물론 전략가가 전망한 대로 주가가 오르면 상관이 없으나 현실은 전망대로만 되지는 않는다. 주가가 상승할 거라는 전망과 달리 큰 폭의 하락을 보여 상승전망을 믿고 주식형 펀드를 매입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필자는 일반투자자들에게 단기적으로 주가가 오를지 떨어질지는 예측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투자를 하도록 조언한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라는 것인가? 펀드투자 방식에는 적립식과 거치식이 있다. 적립식 투자는 매월 또는 매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씩 투자하는 방식이다. 목돈 마련을 해야 하는 젊은 세대에게 필요한 투자방식이다.

적립식 투자를 할 경우에는 공격적인 주식형 펀드로 하는 게 좋다. 물론 채권형 펀드나 MMF로 해도 안될 것은 없지만 적립식 투자의 묘미를 얻을 수 없다. 마음이 약해서 공격적인 주식형 펀드에 거부감을 느끼는 투자자라면 혼합형 펀드로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 몇 년 사이에 목돈이 없는 젊은 투자자들이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투자한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투자는 성공보다는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액투자는 적립식, 목돈은 포트폴리오 방식

돈을 빌려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를 할 경우 몇 년에 한 번 정도라면 모르지만, 장기간 계속해서 금융기관 대출금리 이상으로 투자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오히려 가장 확실한 투자는 빌린 돈을 갚는 거라는 생각으로 투자에 임하는 것이다.

차입을 해서 투자를 하면 장기투자를 할 수도 없다. 기일 안에 원리금을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때로는 손실을 본 채로 펀드를 매각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젊은 투자자들의 목돈 마련 투자는 일정액씩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

적립식 투자를 할 경우에는 공격적인 주식형 펀드로 하는 게 좋다. 물론 채권형 펀드나 MMF로 해도 안될 것은 없지만 적립식 투자의 묘미를 얻을 수 없다. 마음이 약해서 공격적인 주식형 펀드에 거부감을 느끼는 투자자라면 혼합형 펀드로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혼합형 펀드란 주식과 채권을 반반의 비율로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적립식 투자를 시작하는 타이밍은 어느 때라도 상관이 없다. 예를 들어 2007년 가을처럼 주가 수준이 높을 때 시작한다면 시작 단계에서는 주식형 펀드의 단가가 높을 것이다. 따라서 매월 정해진 적립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펀드의 수량이 적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몇 달을 적립식으로 투자해 나가다 보면 주가 수준이 크게 하락하는 국면이 나타날 수 있다. 모처럼 큰 맘을 먹고 생활비를 절약해서 적립식 투자를 해왔는데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 실망이 클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시점에서는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펀드가격도 낮아져 같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펀드의 수량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몇 년을 계속 해서 투자해 나가면 펀드의 평균 매입단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는 코스트 애버리지(cost average) 효과라고 부른다.

적립식 투자를 몇 년 계속해 나가다 보면 투자한 금액이 5천만원 또는 1억원의 목돈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 단계에 이르면 투자방식을 거치식으로 바꾼다. 목돈으로 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을 거치식이라고 하는데 이를 전문용어로는 포트폴리오(portfolio) 방식이라고 한다. 포트폴리오는 이탈리아어로, 본래의 의미는 '서류를 끼우는 홀더'라는 뜻이다. 이것이 금융용어로 쓰일 때는 '금융상품을 넣는 바구니' 또는 '보유금융상품 일람표'라는 뜻이 된다.

어떤 투자자가 고향에 있는 땅을 팔아 마련한 1억원의 자금으로 주식형 펀드에 5천만원, 채권형 펀드에 4천만원, MMF에 1천만원을 투자했다면 1억원을 3개의 펀드에 5:4:1의 비율로 포트폴리오를 짜서 투자했다고 한다. 이렇게 소액투자는 적립식으로, 목돈은 포트폴리오 방식으로 하는 것이 펀드투자의 정석이다. 나라경제



강창희
미래에셋 투자교육연구소장
지난 36년 동안 대우증권 동경사무소장, 국제본부장, 리서치본부장, 현대투신운용 대표, 굿모닝투신운용 대표 등을 거치면서 은퇴 및 투자교육의 개척자 역할을 해왔다. 저서로 「직장인의 노후설계와 퇴직연금」, 「당당한 인생후반 30년을 결정하는 자산관리의 원칙」 등이 있다.
chkang@miraeasset.com

10년 후 우리나라 인구는?

인구는 많아도 문제지만 적어도 문제다. 최근 인구 정체 또는 감소로 국가위기를 겪는 선진국들은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지만 한번 수그러든 인구파도를 다시 회생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단순히 부양대상으로만 여겨졌던 인구가 경제적 수요주체로 부각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의 인구전망 결과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을 살펴보자.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출산율이 가장 낮은 반면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현재의 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노인인구는 2010년 536만명에서 2026년 1천만명, 2050년 1,616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 국가는 '추계인구'를 작성해 미래의 인구수를 예측한다. 추계인구는 인구변화에 따른 경제·사회의 변화를 예측해 이에 맞는 국가정책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2018년 4,934만명을 정점으로 인구 감소

우리나라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저출산이 고착화돼 인구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됐다. 1970년대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은 4.5명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지만 1983년 인구 대체수준인 2.1명 이하로 낮아진 이후 20여년간 계속 하락해 급기야 2005년 1.08명까지 떨어졌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의 '초저출산 사회'가 지속되고 있으며, 2009년 1.15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아직도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고령화사회(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에서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로 진입하는 데 18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2년, 독일은 40년이 걸렸으며 고령화 속도가 비교적 빠르다고 하는 일본도 24년이 걸렸다.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 역시 8년이라는 최단기간 내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노인인구는 2010년 536만명에서 2026년 1천만명, 2050년 1,616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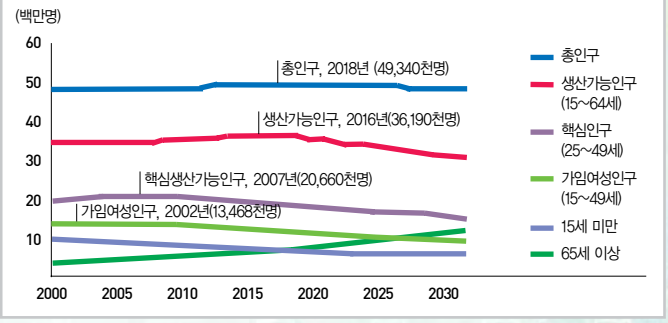
인구구조는 1980년대의 삼각형에서 2020년에는 원통형으로, 2050년에는 역삼각형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2010년 0.26%인 인구성장률은 점차 둔화돼, 2018년 총인구 4,934만명을 정점으로 인구 감소가 추정된다.

그러나 경제의 중추 인력층인 핵심생산가능인구(25~49세)는 이미 2007년 3,619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총인구에 비해 2년 앞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생산인구 확보를 위해 2005년 이후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작용으로 내국인의 청년실업 증가, 외국인의

인권보호, 범죄 등 사회 문제가 만만치 않아 대폭 확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여성의 출산율을 높여 인구증가를 도모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1970년에는 합계출산율이 4.5명인데 출생아수는 100만명이었다. 2009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15명임에도 불구하고 출생아수가 45만명이다. 그 이유는 가임여성인구(15~49세 여성인구)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임여성인구는 2002년을 정점으로 감소해 합계출산율이 회복된다 하더라도 이에 비례해 출생아 증가를 기대할 수 없다. 그만큼 더 출산율을 높이지 않는 한 지금의 절대적인 출생아수조차 유지하기 힘들다.

〈그림〉 추계인구 추이



2020년까지 8만개 일자리 사라진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구조 변화가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저출산·고령화로 2020년 취업자수가 2008년에 비해 9만명가량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지출이 같다고 가정했을 때 교육 분야에서 일자리가 18만6천개 사라진다. 음식 및 숙박에서 5천개, 농림수산품과 음식료품에서 각각 2천개와 1천개가 줄어든다. 물론 금융·보험 및 기타 서비스에서 3만6천개, 보건·의료(2만3천개), 도·소매(2만1천개), 교양·오락(6천개) 등에서 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8만7천개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전망했다. 또한 통계청의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학교 등의 변화」라는 자료를 보면 저출산이 지속됨에 따라 학령인구(6~21세)가 2007년 1,037만명에서 2030년 616만명으로 감소, 교육 수요도 함께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저출산·고령화는 사회·경제적 영향 외에도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 젊은 세대는 노인부양 책임과 자신의 노후대비 부담을 동시에 안게 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노인 세대는 평균수명은 길어지지만 소득과 건강상태의 불안으로 삶의 질이 저하돼, 앞으로 인구감소가 본격화되면 '노년 빈곤'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머지않아 많은 가족은 자기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와 조부모를 모두 부양해야 하는 시대를 경험할 것이다.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 있는 아이디어」로 유명한 경제학자 토드 부크홀츠(Todd G. Buchholz)는 고령사회의 가족 풍속도를 이렇게 그리고 있다. '2021년 추수감사절, 42살의 베키는 72세된 노부부와 10대 자녀들과 즐겁게 저녁식사 중이다. 자녀는 의식주를 전적으로 베키에게 의존하며, 95세 된 조부모가 아직 살아 있고 건강악화로 침대에 누워 간호사를 고용했다. 베키는 이 모든 비용을 자신과 남편만이 내고 있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다. 불과 10년 후 우리에게 닥칠 이야기다. 이러한 미래에 대비하려면 가계는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개인 저축을 늘려 나가야 한다.

10년 후 우리나라 인구는 감소할 것이다. 이를 준비할 10년은 그다지 긴 시간이 아니다. 국가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세대교체를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인구재생이 필수적이다. 인구 대체수준인 합계출산율 2.1명을 단기간에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OECD 평균 수준인 1.6명 이상은 시급히 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출산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일정부분 지원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임신·출산·양육으로 인해 여성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야 한다. 육아휴직을 여성에만 부여할 경우 효과가 반감되므로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지나치게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가족과 자녀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결코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에게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나라경제



송요성
통계청 인구동향과 사무관
songys@korea.kr



서해 최고 비경을 만나러 가는 뱃길





흑산도의 일주도로. 가파른 길은 아니지만 경사면을 누일 공간이 없어 이렇듯 구불구불 길을 내서 바짝 차고 오른다. 멀리 보이는 섬이 대둔도와 다물도

지난 14년간 여행자로 살았다. 국내외 오지를 무던히도 떠돌아다녔다. 그중 4년 동안은 섬을 찾아 내내 바다를 표류했다. 오래 떠돈 여행자에게 섬은 궁극의 여행지나 다름없다. 가기도 어렵고, 먹고 자는 것도 불편하지만, 오히려 그런 점이 섬의 매력이다. 그곳에는 뭍에서 진즉에 갖다버린 순결한 가치와 느림의 미학이 존재하고, 뭍에서는 만나기 어려운 원초적 풍경이 남아 있다. 그 자체로 시간의 박물관인 셈이다. 섬에 떨어진 이상 그곳의 불편과 단절을 즐길 필요가 있다. 고유한 섬만의 시간을 천천히 그리고 가만히 거닐어 보는 것이다.

섬 여행을 처음 떠나는 사람들이 주로 찾는 섬이 있다. 목포에서 배를 타고 가는 흑산도와 홍도가 바로 그런 섬이다. 가는 뱃길은 지루할 새가 없다. 청람빛 바다는 조금이라도 날이 흐리면 검푸른 빛깔을 띤다. 바다에서 보는 흑산도의 빛깔도 바다를 닮았다. 애당초 흑산도라는 이름도 푸른색이 짙어서 검게 보인다는 뜻이 담겨 있다. 흑산도는 신라 때 장보고가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828년)하고 나서 서해 바다에 출몰하는 해적들을 막기 위한 전초기지 노릇을 했던 곳이다. 과거 흑산도가 어업전진기지였을 때만 해도 포구에는 수백여 척의 고깃배들이 드나드는 꽤나 번화한 섬이었다. 그러나 대형 첨단어선들이 늘어감에 따라 흑산도의 예리항은 점점 쇠락해 갔고, 최근 들어서야 다시 관광지로 이름이 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서남쪽에 위치한 흑산도는 유인도와 무인도를 합쳐 크고 작은 섬을 무려 100여 개나 거느리고 있고, 본섬의 해안선 길이만도 40㎞가 넘는 제법 커다란 섬이다. 흑산도 앞바다는 과거 홍어 본산지로 명성이 높았다. 그러나 한때 불법어획과 중국어선의 침범으로 홍어를 잡기가 쉽지 않았다. 근래에 와서야 흑산도 앞바다는 꾸준한 불법어획 단속으로 다시금 홍어 본산지의 명성을 되찾아가고 있다. 예부터 흑산도 근해에서 홍어가 많이 잡히는 까닭은 흑산도 인근이 홍어의 산란

터이기 때문이다. 흑산도 홍어는 다른 지역의 홍어보다 맛이 훨씬 부드럽고, 찰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몇 년 전 나는 흑산도의 한 여관에 머문 적이 있는데, 안주인 박씨는 30년 넘게 홍어 요리를 해온 분이었고, 남편인 김씨도 30년 넘게 홍어잡이배를 탄 어부였다. 홍어배 선장이기도 한 김씨는 보자마자 "만만한 것이 홍어 거시기라고, 하는 말이 왜 생겼는지 아는가?" 하고 물어왔다. 순간 당황해서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가 그것의 유래를 들려주었다. "옛날 흑산도 근해에서 홍어잡이에 나설 때 선원들이 홍어를 잡으면 배에서 술 안줏감을 하려고 수놈의 홍어 거시기를 잘라 안주를 혔어. 비싼 홍어는 팔어야 쓰겠고, 허니 맨맨헌 것이 홍어 거시기였거든. 그래 그것을 잘라 안주를 한 것이여."

과거 홍어가 풍년이던 뱃길은 홍도 인근까지도 이어졌다. 흑산도와 달리 홍도는 바다에서 보면 온갖 꽃들이 만발해 붉은 옷을 입은 것 같다고 홍도라 불렀다. 서해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으로 통하는 곳. 검푸른 흑산도의 물빛도 홍도에 이르면 청옥빛으로 바뀐다. 섬 주변에는 기기묘묘한 형상을 한 바위섬들이 즐비하다. 만물상, 독립문바위, 거북바위, 주전자바위, 남문바위…. 여객선 선착장이 있는 홍도 1구에서 등대가 있는 홍도 2구로 가는 유람선을 타면 이 기묘한 바위들을 모두 만날 수 있다.

홍도에는 외지의 사람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은밀하고 멋진 길도 숨어 있다. 일명 깃대봉길. 이 길은 유람선이 다니기 전, 홍도 1구에서 2구로 걸어서 넘던 옛길이다. 길은 생각보다 험한 편이다. 깃대봉 정상은 해발 약 370m 정도이지만 제법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뱃길에서 만나는 기묘한 바위와 바다 풍경도 멋지지만, 깃대봉에서 내려다보는 홍도 풍경이야말로 군더더기 없이 아름답다. 여름이면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비탈마다 원추리꽃과 나리꽃이 다닥다닥 피어 능선 전체가 노랗고 붉은 옷을 입혀 놓은 것만 같다. 홍도의 그림 같은 비경을 보며 걷는 하늘길, 꽃길. 하지만 2시간이나 걸리는 먼 길.

오래전 내가 홍도 1구에서 깃대봉길을 넘어 2구에 도착했을 때, 가게 주인은 딱한 듯 말을 걸었더랬다. "넘들은 유람선을 타고 펜히 오는디. 다 늦게 산 넘어 왔소? 옛날에야 나도 애기 업고도 넘어 다니고 그랬지. 십 몇년 전에만 해도 질이 그 때는 훤했소. 저 산의 나무를 다 해서 땠으니까. 아이고, 그 전에는 술도 한 통씩 받아서는 지게에 지고 넘었소. 쌀도 세 사람이 나놔서 이고지고 그렇게 대닌 질이요." 1구까지 배로 다니게 되면서 깃대봉 산길은 나무가 우거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오솔길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그 길을 배낭에 카메라 가방에 삼각대까지 들고서 그것도 섭씨 32도의 후덥지근한 날씨에 넘었으니, 2구에 도착했을 때는 거의 탈진 일보 직전이었다. 거지꼴이 다 되어 여관에 짐을 풀자마자 나는 나무토막처럼 쓰러져 잠이 들었다. 나라경제





1 영산화가 많이 핀다 하여 이름 붙여진 영산도, 대흑산도 · 소흑산도 · 대둔도 · 다물도 · 대장도 등과 함께 흑산군도를 이룬다.
2 흑산도 예리항의 홍어위판장. 흑산도 앞바다는 홍어 본산지로 유명하다.

글 **이용한** 시인, 작가 / 사진 **신안군청**
'길 위의 시인'으로 지난 13년간 국내외 오지 혹은 섬을 떠돌며 글을 써왔다. 1995년 「실천문학」 신인상을 수상했다. 시집 「안녕, 후두둑 씨」, 「정신은 아프다」, 여행에세이 「하늘에서 가장 가까운 길: 티베트 차마고도를 따라가다」, 「바람의 여행자: 길 위에서 받아 적은 몽골」 등을 펴냈다.



재정규율 강화하는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

박정수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소장

세계경제가 더블딥 공포와 유럽 재정위기에서 서서히 풀려나는 분위기가 도처에서 감지되고 있다.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에서도 주가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책에 따른 효과가 사라지고 각국 정부가 재정긴축에 돌입하게 되면 향후 더블딥까지는 아니라도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기가 감속 국면에 접어들게 될 것이라는 진단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향후 더블딥을 야기할 수 있는 4대 리스크로 경기회복에 대한 신뢰 하락, 경기부양책 효과 종료, 유럽 국채시장 불안, 선진국 재정긴축에 따른 부작용을 들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재정위기 우려로부터 우리는 언제쯤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한국경제는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재정의 뒷받침으로 극복한 이래 건전하게만 보이던 정부채무가 급증하기 시작해 이제는 재정위기라는 말이 남의 이야기만은 아니게 됐다.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1997년 10% 수준이던 GDP 대비 국가채무가 2009년 35.3%에서 2011년에는 37.6%까지 상승한 후 2013년 35.9%로 하락한다고 한다. 절대적인 규모보다는 상승 속도와 추세에 대한 우려가 높다. 최근에는 급격하게 늘고 있는 공기업 부채와 지방공기업의 방만한 적자운영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건전재정 운용이 국가정책 어젠다의 중심에 자리하게 됐다.

그런 만큼 정부는 재정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재정적자 관리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 세계적인 재정악화의 심각성을 감안해 '중장기 재정건전화 종합대책'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인구고령화, 통일 등에 사전적으로 대비하고 추가적인 경제충격 발생 시 국가재정이 다시 우리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을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해야 한다.

'중장기 재정건전화 종합대책'에는 세입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의 정책대안과 함께 구체적인 목표수치가 포함돼야 한다. 향후 재정운용은 재정의 질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에 치중해야 한다. 국가채무 등 최근 개정된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재정통계를 정비하고,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확대 과정에서 예산외 부채 등 공공 부문 전반의 높아진 리스크 수준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토지주택공사와 도로공사 등 공기업의 재무구조 건전성을 재무관리와 사업관리의 양 측면에서 예의주시하고 BTL(민간투자)사업 등에 수반한 재정위험도 적절히 관리해 나가야 한다.

지방재정의 건전화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세출 증가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세입 감소로 지방재정난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책임성 강화 및 감시기능 강화가 필수적이다. 지방공기업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규모의 경제효과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광역화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운용되고 있는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클린아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경영평가와 공시정보를 연계하도록 해야 한다.

위기는 곧 기회이다. 지금은 양치기 소년이 아니라 미리미리 재정규율을 강화하는 지속가능한 시스템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나라경제

※ 이 글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서, KDI의 공식견해나 『나라경제』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KDI

미래 한국 대학생 논문 공모전

주최: 기획재정부 · KDI **후원:** 한국미래학회 · 세계미래포럼 · SBS



당신의 아이디어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



논문주제

- 20~30년 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자유주제
  예시) 성장과 복지, 그린이코노미, 미래산업, 다문화사회, 컨버전스사회, 융복합기술, 스마트기술, 인구구조 변화, 국제공조 체제, 남북통일 등

참가대상

- 2010년 9월 현재 국내외 2년제 이상 대학·대학원 재학생
- 응모는 3인까지 공동참여 가능(3인 모두 참가 기준 충족 시)

공모전 일정

- 접수기간: 2010년 8월 1일 ~ 2010년 9월 17일
- 결과발표: 2010년 10월(추후 공지)

시상내역

상 명	편 수	시상 내역
대상	1편	기획재정부 장관상, 상금 500만원
최우수상	1편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상, 상금 300만원
우수상	3편	한국미래학회 회장상, 상금 각 200만원
장려상	5편	세계미래포럼 이사장상, 상금 각 100만원

문의처

- E-mail: mirae@kdi.re.kr
- Tel: 02-958-4675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www.miraekorea.org)** 참조



다시 떠나세요!

대한민국 구석구석 숨겨진 맛과 이야기 속으로

대한민국 구석구석에는 맛있는 음식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떠나세요! 숨겨진 맛과 이야기를 찾아!

Korea
Be Inspired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